

최종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12

 환경부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태 주

연구진

○ 연구책임

-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참여

-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 노태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자문위원

- 공우석 (경희대 교수)
-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노한균 (국민대학교 교수)
-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신현석 (부산대 교수)
-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장)
-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
-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정영근 (선문대학교 교수)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 황정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총 목 차

제1부 총론.....	1
I. 전략수립의 개요	
II.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여건변화 및 전망	
III. 국가지속가능성 진단	
IV. 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제2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43
I.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II.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III.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IV.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V. 전략의 추진기반 강화	
VI. 전략의 이행 및 평가체제	
제3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154
I.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요 및 추진 배경	
II. 지속가능발전 지표	
III. 대표지표의 선정	
제4부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이행계획 수립 지침.....	183
I.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지침 개요	
II. 추진 배경 및 계획	
III.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	
IV. 이행계획 작성 방법 및 형태	
V. 행정사항	
부록 1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06-2010 과제목록	195
부록 2 100대 국정과제 방향	197
부록 3 5대 국정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연관성	199
부록 4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주요전략 및 핵심과제 비교	201
부록 5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주요연구	206
부록 6 녹색성장위원회 중앙추진전략 작성양식	206

제1부 총론

I. 전략 수립의 개요	1
1. 전략수립의 배경	1
2. 전략수립의 법적근거 및 전략의 범위	5
II.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여건의 변화 및 전망	7
1. 인류 생존과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7
2.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당면과제 및 미래 전망	17
III. 국가지속가능성 진단	26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	26
2. 국 가지속가능성발전전략의 의의 및 필요성	32
IV. 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38
1. 전략의 비전 및 추진원칙	38
2. 주요전략 및 핵심과제	39

표 목차

<표 2-1-1> UNCSO의 다년간 업무 프로그램	8
<표 2-1-2>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9
<표 2-1-3> 선진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구조	14
<표 2-1-4> 선진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 메커니즘	14
<표 2-1-5> 주요국의 국가 비전과 국가발전전략	15
<표 2-2-1>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	17
<표 2-2-2> 우리나라와 세계 환경산업 성장 추이	24
<표 3-2-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집행 및 평가체계	32
<표 3-2-2> 사회부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정책 및 방향 및 실천과제 ..	35

그림 목차

<그림 1-1-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발전	2
<그림 1-1-2> 국가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여부 현황	3
<그림 2-1-1>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환경 위기	7
<그림 2-1-2> 온실가스 총 배출량(지역별), 1970-2050년	10
<그림 2-1-3> 2005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백만명)	11
<그림 2-2-1> 실질 경제성장을 변화	20
<그림 2-2-2> 총인구, 인구성장률 전망	20
<그림 2-2-3> 합계출산율 추이와 출생아수	21
<그림 2-2-4> 기온 및 기상재해와 인명피해 현황 및 추정	22
<그림 3-1-1>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별 변화 추세	26
<그림 3-1-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변화추이(2004-2008)	31

제 1장 전략수립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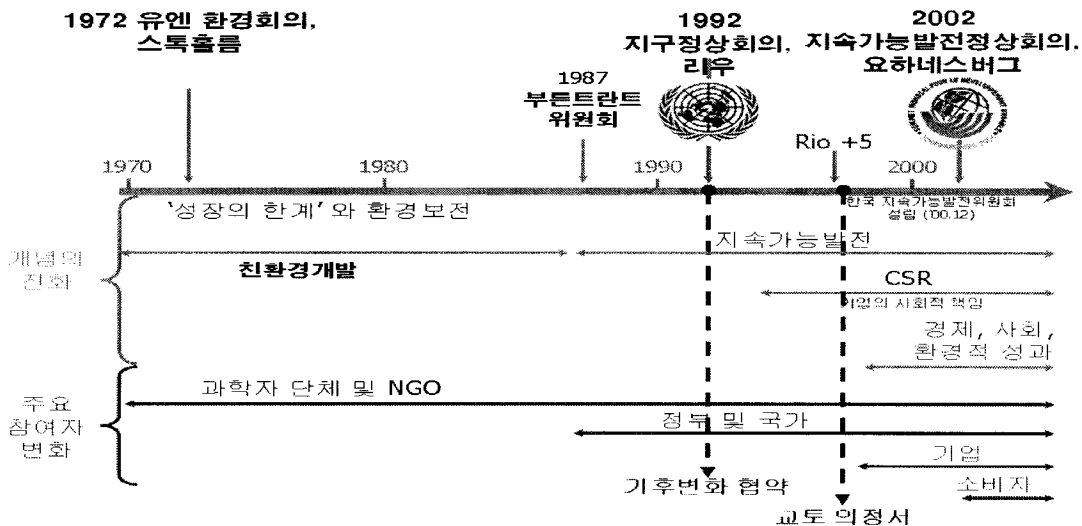
1. 전략수립의 배경

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발전

-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UN WCED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시된 후,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 정착>

- **(형성: 환경)** 1972년 지구환경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와 UN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 본격 논의
 - 1970년대 후반 UNEP 등의 후원으로 발간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 착수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
- **(확대: 환경+경제)**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 정착
- **(정착: 환경+경제+사회)**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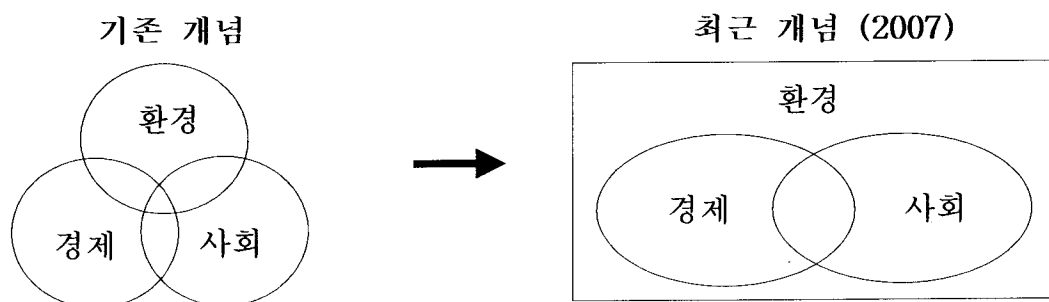


출처: AFNOR, C.Brodhag(2006)에서 재인용

- 최근 자연자원 수요의 급증,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와 에너지·자원 고갈의 위기에 따라 환경, 에너지 및 자원은 인류 생존의 물리적인 제약조건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부각됨
 - 자연자원의 용량과 수요 간의 균형이 파괴되어 생태계가 인류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심각하게 악화
 - 지속적인 평균 기온 상승, 폭염, 초대형 태풍,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와 범람, 농업생산량 감소, 물 부족, 전염병 및 질환 증가 등 전 지구적 피해 급증
 - 즉, 환경이라는 한 축이 무너지면서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함

- 특히, 2007년 유엔총회를 통해 기후변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주요현안으로 인식
 - UNCSO와 IPCC에서는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내에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

- 이러한 상황변화에 조응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서로 독립된 환경, 경제 및 사회의 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생태환경이 유지되는 전제조건 아래 경제발전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으로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환경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



자료 : C. Brodhag, DIDD, UNDESA, 2007

<그림 1-1-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발전

-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여건 변화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나. 국제적 합의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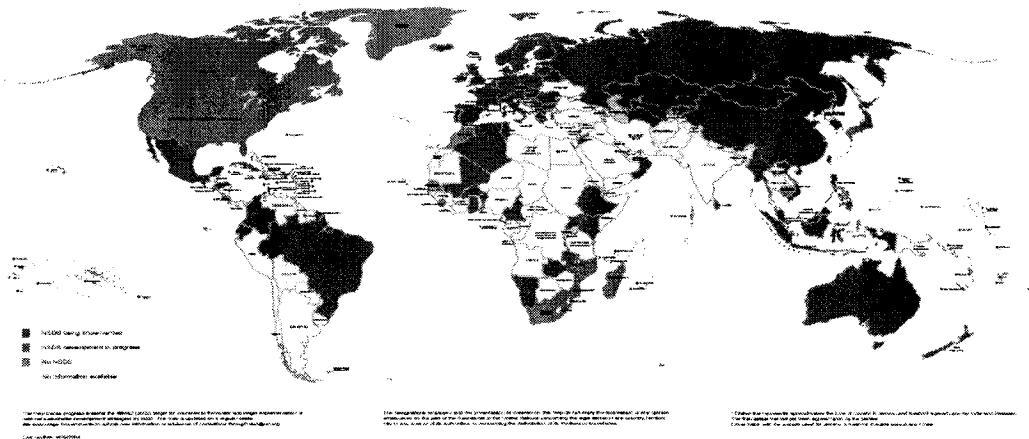
-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결의
 - 의제21(para 8.7)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 1997년 리우+5회의 :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2년까지 수립하기로 함

-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claration Goal 7, 목표 9)
 - 지속가능발전 원칙과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통합을 명시함

-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결의
 - 빈곤퇴치, 보건, 무역, 교육, 과학 기술, 지역문제, 자연자원, 제도적 장치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필요한 우선과제를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으로 제시함
 - 각국은 2005년까지 이행계획 수립 및 국제사회 공표 합의함

- 2005년 세계정상회의
 - 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임을 재확인

- 2007년 기준, 세계 82개 국가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 수립



주: 2008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UNCSO에서 제작함
자료: http://www.un.org/esa/sustdev/natlinfo/nsds/nsds_map2008.pdf

<그림 1-1-2> 국가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여부 현황

-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이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관련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사항은 국제사회의 사회경제발전의 보편적 지침이자 각국이 이행해야할 의무로서의 위상을 가짐
-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경제발전의 보편적 국제지침을 준수하고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보장

- 선진일류국가로 향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통령 선언
 - 대통령 2008. 8.15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 2009년 7월, 2050까지 장기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2013년까지 중기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함
-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부응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추진과정에서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관리대책으로서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필요함
- 이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발전, 국제적 합의사항의 이행 및 국내 녹색성장 국가전략 추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자 함

2. 전략수립의 법적근거 및 전략의 범위

가. 전략수립의 근거

○ 지속가능발전법

-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할 때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관련 법규정

<지속가능발전법> (2007.8.3 제정, 2010.1.13개정)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 및 기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법 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략의 범위

- 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전략의 비전 및 추진 원칙, 주요전략 및 핵심과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 구성
- 에너지, 기술·산업, 국토, 사회 등 분야의 4대 주요전략, 56개 핵심과제, 17개 전략추진기반, 전략의 이행 및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수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제시된 주요 추진전략,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내·외 지표 검토, 지표시범평가,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을 대상으로 수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 포함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여건변화 및 전망

1. 인류 생존과 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가. 환경과 자원의 한계

- 산업화 이래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과 개발로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을 초래하여 지구환경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국지적·지역적 오염문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피해로 인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환경, 자원, 식량의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
 - 석유 및 에너지 자원의 공급부족 가능성에 따른 가격 폭등
 -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연료 산업이 식량위기로 이어짐



<그림 2-1-1>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환경 위기

나. 세계사적 발전 패러다임 변화

- 세계화와 복합적 도전
 -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세계화, 지식 정보화, 국제관계의 다원화, 인간 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UNCSO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실행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17년 까지 다년간 업무 프로그램(CSD Multi -Year Programme of Work)을 실행

<표 2-1-1> UNCSO의 다년간 업무 프로그램

연 도	분 야
2004/2005	물, 위생, 인간정주
2006/200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산업발전, 공기오염/대기, 기후변화
2008/2009	농업, 농촌발전, 토양, 가뭄, 사막화, 아프리카
2010/2011	교통, 화학, 쓰레기관리, 광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10년 체계
2012/2013	산림, 생물다양성, 바이오테크, 관광, 산맥
2014/2015	대양과 해양, 해양자원, 소군도개도국, 재난관리 및 취약성
2016/2017	아젠다21에 대한 전반적 평가, 아젠다21과 JPOL의 차기 이행프로그램

자료: CSD Multi -Year Programme of Work (http://www.un.org/esa/dsd/csd/csd_multiyearprogwork.shtml)

-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문제의 부각과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추진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움직임이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향후 국제관계와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
 -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움직임 확산 전망
 -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자원부족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각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발전전략 추진
- 2030년까지 경제 및 환경 추세에 대한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등 적색신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
 -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2050년에는 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구 평균온도가 2050년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1.7-2.4 도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요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물 부족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않은 수자원 이용과 관리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것이며, 물 부족이 극심한 지역에 사는 인구는 10억 명이 더 증가하여 총 39억 명 이상에 달할 전망
 -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지표면

오존과 관련된 조기 사망은 4배, 미세먼지 관련 조기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 기반시설물과 농업 확대, 기후변화로 인해 상당수의 동식물이 멸종 수 있으며, 식량과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작지 10%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될 전망.
- OECD 비회원국 내 화학물질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및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 가장 큰 환경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표 2-1-2 >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청신호	황신호	적신호
기후변화		. GDP 당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 세계 온실가스 배출 . 기후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증가
생물다양성 및 재생가능한 자연자원	. OECD 회원국 내 산림면적	. 산림관리 . 보호지역	. 생태계의 질 . 생물종 감소 . 외래종 침입 . 열대림 . 불법 벌목 . 생태계 단절
물	. OECD 회원국 내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오염(산업, 지자체)	. 지표수질과 하수처리	. 물 부족 . 지하수질 . 농업용수 이용과 오염
대기질	. OECD 회원국의 SO2 및 NOx 배출	. PM 및 지표면 오존 . 도로교통 배기가스 배출	.. 도심 대기질
폐기물 및 유해 화학물질	. OECD 회원국 폐기물 관리 . OECD 회원국 CFCs 배출	. 생활폐기물 발생 . 개도국의 CFCs 배출	.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운송 .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 . 자연계와 제품 내의 화학물질

참고

청신호 = 관리가 잘 되어온 또는 최근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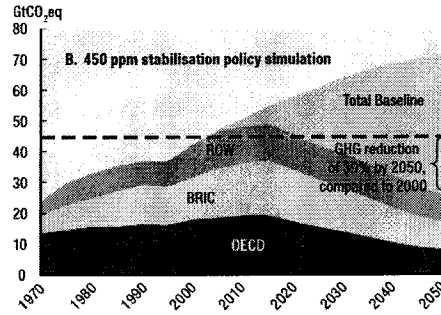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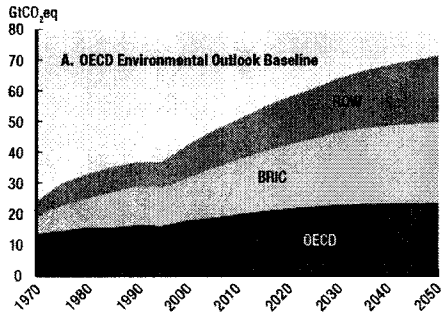
황신호 = 여전히 과제가기는 하나 관리가 개선되고 있거나 현 상황이 불확실한 환경문제 또는 과거에는 관리가 잘 돼 왔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환경문제.

적신호 =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심각하거나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환경문제. 모든 동향은 따로 언급이 없는 한 전 세계적이다.

<그림 2-1-2> 온실가스 총 배출량(지역별), 1970-2050년

a) OECD 의 기준 환경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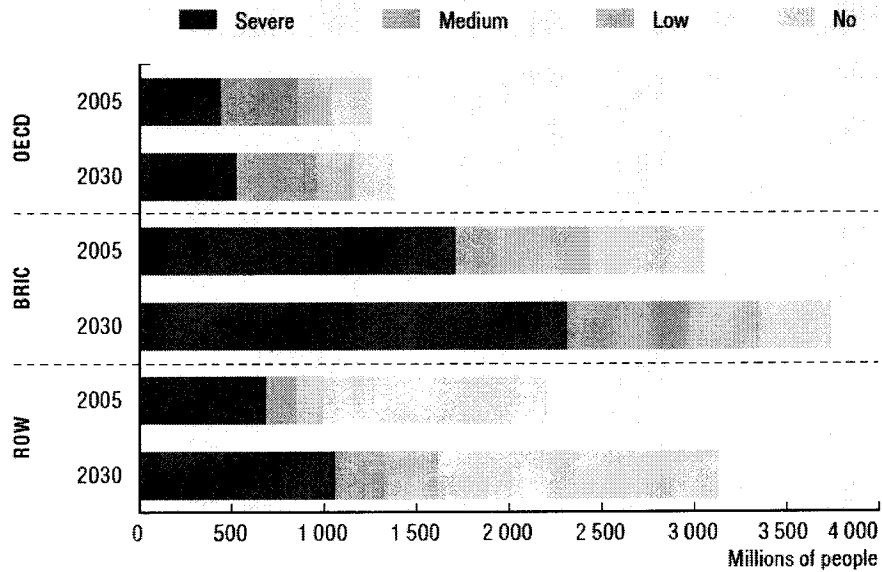
b) 450ppm 안정화 정책 시행 시



2000 년 대비
2050 년까지
온실가스
39% 저감

Note: BRIC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ROW = 그 밖의 지역.

<그림 2-1-3> 2005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 (백만명)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대응

- 세계사적 도전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선진 각국은 이미 종합적인 대응을 시작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들은 국제사회의 경쟁구도 속에서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과 함께 일련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선진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가) 영국

-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Securing the Future(영국연방정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2005년 제2차 전략을 수립함
 - 계획 및 의무구매법, 지역정부법 및 지방정부법에 근거함
-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주도로 연방정부 각 부처와 지역행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한 국가전략은 포괄적 틀(Framework)과 분야별 이행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됨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예산지출 및 부처별 연도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점검하며, 15개 핵심지표와 147개 국가 및 지방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정·보완하는 체계임
- 연방정부 내각의 에너지·환경 각료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이행계획 추진을 점검함
 - 2000년 영국정부 독립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를 설치하여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추진현황에 대한 검토, 정책비평 및 평가 등 역할을 수행함

나) 프랑스

-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Agir dans la dynamique europeenne(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럽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나라)」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2003년에 수립한 제2차 전략을 2006년에 수정함
- 중앙정부 부처간 실무그룹에서 전략분야별 정책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행하는데, 국가전략은 포괄적 틀인 전략목표 및 수단과 분야별 이행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됨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연도보고서와 지표를 통해 이행 점검

- 매년 45개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를 통해 전략이행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영향 평가, 매 6개월 488개 세부계획 이행상황 점검
- 2003년 수상령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자문, 검토 및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함

다) 스웨덴

- 2001년 향후 25년 장기 전망인 「A Swedish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스웨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2년마다 수정 보완함
- 국가전략은 비전 및 주요이슈와 핵심 분야별 이행계획으로 구성됨
 - 핵심 분야는 미래환경, 기후변화, 인구와 공중보건, 사회단결/복지/안전, 고용과 학습, 경제성장과 경쟁력, 지역발전, 지역사회계획, 지속가능발전 도구, 이행과 향후조치 등으로 구성됨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환경부에서 총괄하여 해당부처의 전략 이행상태 보고를 통해 점검
 - 12개 핵심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용하여 국제, 국가, 지방, 시도단위의 지속가능상태 및 전략이행상태 점검
- 국가주택·건물·계획위원회 내에 정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상을 의장으로 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EU 지속가능발전전략, 국제협력, 기후변화 등에 대한 자문, 검토 및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함

라) 핀란드

- 1998년 최초로 「Towards sustainable choice : A nationally and globally sustainable Finland(핀란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2006년 제2차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중임
- 핀란드는 1993년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해당부처와 지자체에서 이행함

- 국가전략은 포괄적 틀(Framework) 수준에서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함
 - 86%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했으며, 대표적인 산업단체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임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매 2년 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정부에 보고

마) 네덜란드

- 2003년 4년 주기로 「Sustainable Action(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공간계획·환경 장관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조정관(주거공간계획환경부차관)회의에서 국가전략의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주관하며 국가전략은 분야별 이행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됨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5개의 주요 관련부처 연간이행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의 주거·공간계획·환경위원회와 국제위원회에서 검토함
- 연방정부 내각의 에너지·환경 각료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이행계획 추진을 점검함

2) 국가전략의 유형 및 주요 구성

- 선진 각국은 국가의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중장기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선진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구조는 크게 포괄적 틀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혼합전략 유형,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위주의 포괄적 전략유형,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조치위주의 이행계획 전략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표 2-1-3> 선진 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구조

분류	국가	특징
혼합 전략 유형 (포괄적 틀 + 이행계획)	영국, 프랑스 등	· 전략의 포괄적 틀 및 정책방향 제시 · 구체적인 분야별 이행계획 제시 · 전략의 일관성 제고
포괄적 전략 유형	핀란드 등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 제시 · 정책개발과 실행절차 전환이 주요목적임
이행계획 전략 유형	네덜란드 등	· 분야별 추진과제, 중·단기적 목표 제시 · 이행계획의 실행기한과 세부조치 제시

- 국가전략의 주요내용으로서 장기적 비전, 전략 목표, 추진원칙, 중점과제,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각국의 국가전략은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정책간 통합성 및 중앙과 지방간 통합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

<표 2-1-4> 선진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 메커니즘

중앙지침	SWOT 분석 *	영향평가	공간계획	재정개혁	교육, 훈련,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혁신 R&D
벨기에, 덴마크 등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영국,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등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	스웨덴, 그리스, 이태리 등	스웨덴, 벨기에 등	이태리, 벨기에 등

출처: 유럽연합집행위 2004년 보고서

* :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 선진 각국의 중장기적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조응하여 20년 단위의 전략적인 포괄적 틀(Strategic Framework)과 분야별 핵심과제의 이행계획을 수립 필요
 - 이에 근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5년 단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실행
 - 따라서,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기초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할 것임
- 2) 주요국가의 국가발전전략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비전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발전의 주요전략은 환경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하여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을 통한 모범국가 건설 및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음

<표 2-1-4> 주요국의 국가비전과 국가발전전략

국가		비전	주요 전략
일본, 이노베이션25		경제, 사회, 삶의 질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	(3대 전략) ① 혁신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② 환경, 에너지, 고령화 문제의 해결, ③ 장애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 달성 ⇒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
유럽연합 (EU)	新리스본전략('05)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	(제7차 FP) 경제성장, 고용, 사회복지 등 지식창출을 위한 R&D사업 전개 ⇒ 기후변화 등 환경을 유럽경쟁력으로 보고 중점투자분야로 지정
	Kok report ('04.11)	리스본 전략의 활성화	(5대 행동전략)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 금융서비스 개선, 기업환경의 개선, 생태혁신의 촉진과 생태산업의 리더십 육성
스웨덴, 혁신스웨덴 (Innovative Sweden)		지속적인 대외경쟁력 유지	(4대 전략) 혁신을 위한 지식기반의 구축, 혁신적 무역과 사업의 촉진, 혁신적 공공투자, 혁신적인 국민의 양성 ⇔ (전략지침) ① 지식기반경제국가, ② 매력적 투자대상국, ③ 세계최고의 교육, ④ 경제, 사회복지, 환경이 통합된 사회 달성
영국, 과학혁신 투자기본계획 2004-2014		치열한 지구경제 시대에 부흥하는 국가 등 3대 비전	(투자전략) 지속가능한 지구시스템, 에너지, 정체성과 문화 등 향후 10년간의 학제간 과제 발굴·투자
미국, 혁신미국		세계 최고의 경쟁력 유지	(혁신전략) 혁신촉진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투자확대, 인프라 정비 추진
중국,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06-'20)		2050년에 세계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11개 중점영역) 중점영역중의 하나로 환경분야(종합적 오염처리와 폐기물 순환이용 등)를 선정 : 21세기 녹색프로젝트 추진

<주요국의 국가발전전략 특징>

① 문제 의식

- 전 세계는 글로벌 대경쟁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혁신,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 함

② 당면과제와 전략

-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의 21세기 당면과제에 도전하는 혁신전략
- 세계 각국은 단순한 「기술개발 정책」, 「산업육성정책」 「인재육성책」 등의 좁은 범위를 넘는 종합적인 「혁신정책과 전략」으로 전환
- 혁신은 과학기술혁신, 사회시스템혁신, 인재혁신, 법제도혁신 등을 포괄하면서 부문 간에 역동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

③ 경쟁 선진국들의 장기발전전략의 공통점

-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집중적인 육성
- 인재의 양성과 확보
-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
- 환경을 혁신수단으로 활용하고 혁신의 내용은 생태적 고려가 됨

④ 일본, 유럽, 미국

-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함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목표
- 차세대의 인재육성, 대학·기업에 대한 우수한 인재 유입
-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
- 혁신을 유발하는 구조 정비
- 자국의 특성을 살린 지역·국가·세계 레벨에서 다층적 혁신정책을 강구

☞ **선진국들은 환경과 에너지 위기를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고 혁신수단으로 보며,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중임**

-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 세계사적 흐름과 국제경쟁력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추진이 절실함

2.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당면과제 및 미래전망

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및 한계

1) 산업화 단계

- 1960년대 이후 국가가 7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해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룸
 - 1인당 GNI(불)은 ‘60년대 79불에서 ’05년 16,291불로, 실질성장률(%)도 ‘60년대 1.2%에서 9.2%(’95)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 4.0%(’05)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 세계시장의 ‘선도경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 돌입하는 단계
 - 선진국을 ① IMF 분류상의 선진국, ② OECD 회원국, ③ 인적개발지수(HDI) 9.0이상, ④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의 4개 기준으로 볼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
- 사회정책과 환경 분야에 새로운 과제 대두
 - 삶의 질 향상 요구, 국민복지 수요, 지역·계층간 양극화 심화, 인구 노령화와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 심화,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의 증가 등

<표 2-2-1>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

지표	'60	'65	'75	'85	'95	'05
실질성장률(%)	1.2	5.7	5.9	6.8	9.2	4.0
1인당 GNI(불)	79	105	602	2,039	11,432	16,291
수출(백만불)	33	175	5,081	30,283	125,058	284,419
수입(백만불)	343	463	7,274	31,136	135,119	261,238
총인구(만명)	2,501	2,871	3,528	4,081	4,509	4,728

- ◇ 산업화 단계에서는 경제중심의 국가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 및 환경정책은 발전하지 못하고 지체됨

2) 민주화 단계

○ 경제와 사회정책의 동반성장 추진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사회정책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경제성장의 토대로 보고 경제와 사회정책의 동반성장을 추구
- 성장을 통해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복지수준 향상 도모, 복지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이동성 제고, 생산요소의 양·질 개선 등 성장기여
 - ※ 문민정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 복지구상” 국가비전발표
 - ※ 국민의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지역·직장 건강보험 통합, 국민연금 전 국민 확대 등 사회정책 제도화와 관련분야 재정 확대
 - ※ 참여정부 :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의 3대 상생전략을 마련

○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노력

- ‘05년 6월 국가지속가능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선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방향과 내용 명시
 - 4대 정책목표 및 9대 핵심정책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공동번영,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향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련 정부부처 참여 논의 틀 구축
- ‘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공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의지 구현

◇ 민주적 정치 체제 확립과 인권 보호 등은 신장되었으나 사회적 통합과 새로운 성장전략 및 성장 동력 확충은 미흡함

나. 사회경제적 당면과제

1)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국가경쟁력 및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연계 미흡

- 참여정부에서 비전 2030 등 국가 장기비전이 제시되었으나 환경위기와 국가경쟁력 및 신성장동력 등의 전략적 연계 고려가 미흡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경제 및 사회 등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가경쟁력 및 신성장동력의 창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제한적
 - ⇒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전략적 연계 강화 필요

- 경제·사회에 초점을 둔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성과와 장점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을 추가·보완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국정지표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비전을 추진할 필요
 -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경쟁력 제고 전략임
 - 미래세대를 고려한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 필요
- 기후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높은 삶의 질 요구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
- 인구감소와 노령화, 세계화,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전략 추진이 지체될 경우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의 극복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
-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성장률의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기상이변과 국제무역 환경규제강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2) 지식기반사회 핵심요소인 인적자본 관리 소홀

-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사람이 소중한 사회로 변화
- 기상이변과 온난화, 환경오염은 실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노동력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에 영향을 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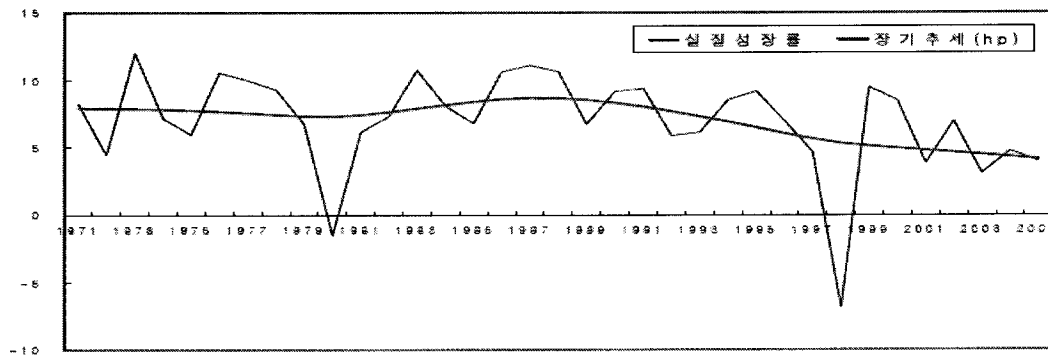
3) 국민이 체감하는 낮은 삶의 질 수준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현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미래 삶의 질 개선요구는 강함
- 낮은 삶의 질 수준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 존재
 - 수도권외 사회·환경적 비용 : 교통혼잡비용 12.4조원(전국의 56.1%, '0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10.4조원(환경처리비용 4.2조원)

다. 국가계획 전망

1)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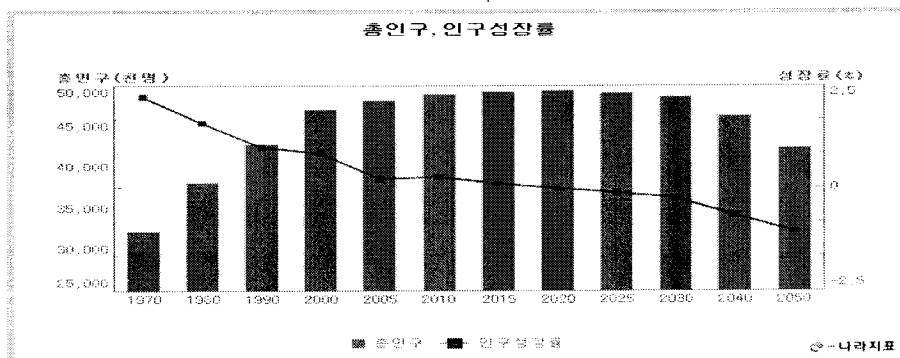
- 6~8%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4% 중반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낮은 성장률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특히 2008년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2.2% 성장에 그쳤으며, 상당 기간동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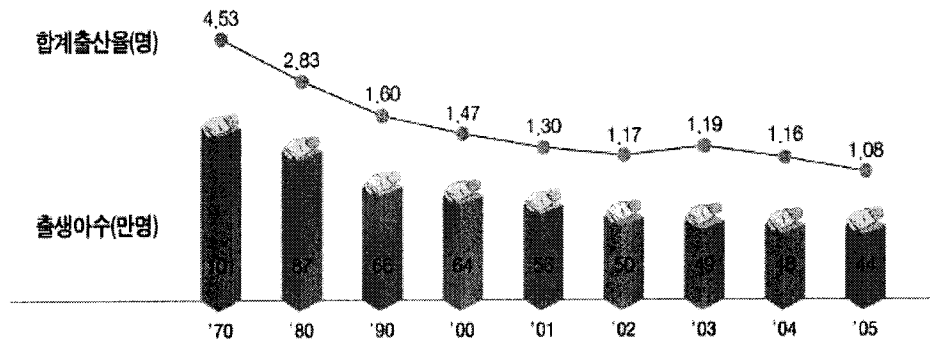
<그림 2-2-1> 실질 경제성장률 변화

2) 인구

- 합계출산율은 1.08('05)으로 세계 최저수준이고, 총 인구는 '18년 내지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00년 이미 노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고 '26년 초고령 사회(20%), '50년 세계 최고령 국가(37.3%) 전망
 - ※ 2005년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47로 선진국(90)보다 낮지만 2020년에는 126으로 선진국(118)보다 높아지고 그 차이가 더 확대(2030년에는 214와 148)될 전망(통계청, 2007)



<그림 2-2-2> 총인구, 인구성장률 전망



<그림 2-2-3> 합계출산율 추이와 출생아수

3) 환경 및 보건

- 황사, 엘니뇨, 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은 미세먼지, 이상고온, 냉해, 집중호우나 가뭄 등을 통해 생산물 감소, 시설파괴, 작업중단 등 산업계에 피해를 주거나 리스크를 높임
- 국제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를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문제로 대응하는 추세
- 이로 인하여 수입제한 혹은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어 우리나라 실질성장율의 둔화 추세를 가속시킬 우려
 - ※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는 년 7조원에 이룸.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업분야 중 70% 이상이 날씨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음(미 상무부 보고서)
 - ※ EU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사용규제를 통해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관련 화학산업 부문에서 2.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
- (고온현상) 서울시에서 7~8월 평균기온이 일평균 사망자수와 높은 상관관계(R=0.9)를 보이고, '94년의 경우 혹서로 전년도에 비해 986명의 사망자가 증가
 - ※ 온도상승에 따라 법정 전염병(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쯤쯤가무시, 뎅기열 등)도 증가추세
- (기상재해) '97~'06년 동안 기상재해로 인한 누적 인명피해(사망자, 실종, 부상)는 2,273명이고,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1.4/건으로 가장

- 환경부문을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
 - 지구온난화, 환경규제 강화 등은 위기요소인 동시에 기술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을 적극 활용
 - 환경 부문의 적극적인 대응이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를 견인할 부문이라는 인식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

-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하면 비용-효과 면에서 오히려 경제적인
 -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소요비용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 방치할 경우에는 5~20%가 필요(Stern Review, '06)
 - 2100년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약 58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 교토 의정서를 준수하면 약 20조원으로 감소 전망(KEI, '06)

- 새로운 환경 산업의 선점과 시장 창출, 기업체질 개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기조의 전환과 정책기반의 확충 필요
 - 환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7천억 달러('05)에서 7,687억 달러~1조 달러('10)로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
 - ※ '10년의 환경산업은 반도체 시장규모의 최소 3배 이상에 해당

<표 2-2-2> 우리나라와 세계 환경산업 성장 추이

구분	'00	'04	'10
대한민국(a) ¹⁾	11.5조	21.4조 (GDP의 2.75%)	35조 이상
세계(b)	4,952억 달러('99) ⁵⁾	7,000억 달러('05) ³⁾	7,687억 달러 ¹⁾ ~1조 달러 ²⁾ 1조 달러('15) ³⁾
비교(a/b*100)	23	31	35~46('10)

주: 1) OECD 환경산업 통계매뉴얼(1999)에서 ① 오염관리그룹, ② 자원관리그룹, ③청정 기술·제품에서 ③을 제외한 산업규모를 산출(환경부, 2006)

2) 로열 더 치셀(동아일보, '07.6.18)

3) 산업자원부, 2006,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4) EBI 추계 결과(동아일보, '07.6.18)

5) 김태용[2000, 21세기 환경산업의 시장전망 및 동향,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은 '10년 환경산업이 8,8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마.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추진과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1) 녹색성장의 방향성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핵심 주력사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의 재설계, 산업전반의 가치사슬의 녹색화 추진

○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 국토개발, 교통, 주거단지, 건축물, 소비 등 분야에서 저탄소형 개발 모델 및 녹색 생활 방식 추진

○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 국제질서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확보하고 북한의 산림복구를 통한 한반도 차원의 탄소저장기지 구축

2) 녹색성장 비전체계

○ 비전

-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및 50대 실천과제 채택 추진

3)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확보

○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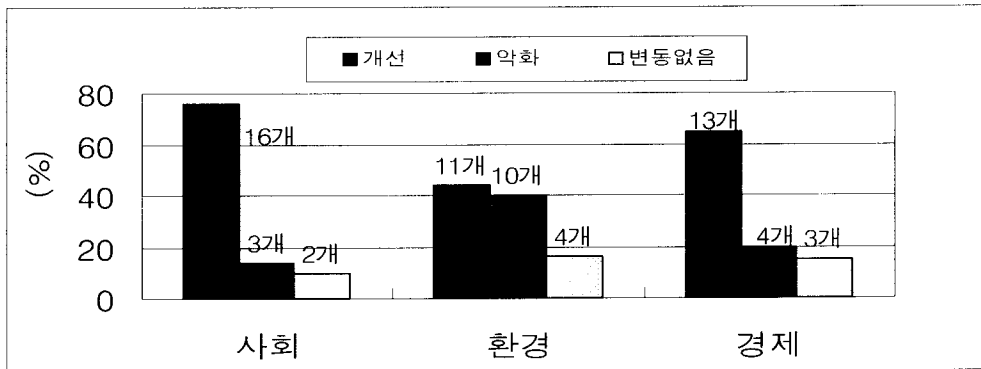
- 따라서,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분야인 기후변화, 경제, 산업, 국토관리 등 분야의 내용과 연계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추진이 필요

제 3장 국가지속가능성 진단

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

가. 2007년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 2008년 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함
- 최근 5년간(‘02~’06)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사회·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으나, 경제성장이 국토환경자원의 훼손과 에너지·자원 소비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이의 연계차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환경·경제 등 3개 분야 77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66개 지표의 변화추세를 평가한 결과,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복지지출, 1인당 도시공원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인당 GDP 등 60%(40개)가 개선됨
 - 비정규직 임금비율, 수도권 인구집중도,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26%(17개)는 악화되었으며, 14%(9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별 변화추세

- 사회 분야 평가지표 21개중 76%(16개)가 개선추세로, 사회·환경·경제 등 3개 분야 중 가장 개선추세가 뚜렷함
 - 근로시간, 기대여명, 건강보험보장률, 사회복지 지출비율, 범죄발생률 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빈곤인구비율, 비정규직 임금, 소득대비 주택

가격 등은 악화됨.

- 환경 분야 평가지표 25개중 44%(11개)가 개선, 40%(10개)가 악화추세로 나타나, 사회·경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화학비료 사용, 1인당 도시공원면적, 1인당 물소비량, 4대강 수질, 보호지역비율 등이 개선됨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권별 대기오염, 식량자급률, 산림면적, 수도권 인구집중, 갯벌면적 등은 악화되고 있어 환경보전 정책에 적신호가 보임

 - 경제 분야 평가지표 20개중 65%(13개)가 개선, 20%(4개)가 악화추세로, 상당한 개선추세임
 - 1인당 GDP, 대중교통 분담률, 폐기물 재활용·재이용, 자전거도로 총연장, 온라인 민원서류, R&D 지출 등이 개선됨
 -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악화됨.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부문 지표이면서 동시에 환경 부문에 걸쳐 있으므로 생산 및 소비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경제성장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확대 노력 등에 따라 국가발전의 양적기반 측면은 상당한 개선추세에 있으나,
 - 소득불균형, 노동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 과 국토이용 등 환경보전측면이 취약하여 국가성장의 질적 관리가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 및 갯벌면적 등 국토환경자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패턴이 에너지와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경제성장과 환경자원의 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체제정비가 시급하고, 연안, 생태계 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 2009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 최근 5년간('04~'08)의 지표에 대해 평가한 결과, 2007년의 평가와 비교하여 긍정적 지표는 줄어들고 부정적 지표는 소폭 증가함 (각각 7개, 2개)
 - 근로시간, 기대여명, 자연재해 피해 등 개선이 뚜렷한 지표와 부정적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빈곤인구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고령인구비율, 범죄발생률 등 사회분야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한편,
 - 상하수도 보급, 재생가능에너지 소비,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등 환경 개선 투자의 성과
 - 1인당 GDP, 국민총생산 등 경제분야 지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반영하여 부정적 추세로 반전함

-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분야 지표가 악화 추세를 이어갔고, 농지, 산지 면적 감소, 수도권인구집중도 증가 등 국토·환경 관리 부문이 부정적 경향을 계속함

- 총 77개 지표 중 변화추세 해석이 가능한 지표는 65개로서 나머지 12개는 중립적 지표로 간주함
 - 65개 지표 가운데 긍정적 변화 34개(52%), 부정적 변화 20개(31%), 변동없음 11개(17%)로 평가됨
 - 12개 지표는 가치중립적이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표로서 향후 지표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 방향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 논의가 필요함

요약	항목	지표	긍정적 방향	5년간 추세	5년 추세 평가	현황 '08년(다른 연도 괄호로 표시)
1. 형 평 성	1-1.빈곤	01) 빈곤인구비율	↘	↗	(-)	12.6%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	(0)	전가구 0.316 도시가구 0.298
		03) 실업률	↘	↘	(+)	3.2%
	1-2.노동	04) 근로시간	↘	↘	(+)	177.8 시간
		05)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	(-)	60.9%
	1-3.남녀 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	(+)	66.4%('07)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	(0)	50.0%
2 건 강	2-1.영양 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	→	(0)	결핍 6.9%, 과잉 7.9%('05)
	2-2.사망 률	09) 영아 사망률	↘	→	(0)	4.1명/천 명
	2-3.수명	10) 기대여명	↗	↗	(+)	79.6세('07)

주요	항목	지표	긍정적 방향	5년간 추세	5년 추세 평가	현황 '08년(다른 연도 괄호 로 표시)
	2-4.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	(+)	86.2%(읍) 45.2%(면) (07)
	2-5.건강 관리	12) 건강보험보장률	↗	→	(0)	64.3% ('06)
		13) 사회복지지출	↗	↗	(+)	GDP 10.0% ('06)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	(0)	76.7 % (BCG) ('07)
3 교육	3-1.교육 수준	15) 중등학교 순졸업율	↗	→	(0)	98.1%(중학교)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	(+)	29.2명
		17) 공교육비 지출	↗	→	(0)	7.2%(정부+민간) ('05)
4 주택	4-1.생활 환경	18)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	(+)	13% ('05)
		19)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	↗	(+)	286.0호(추계)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	(-)	7.6배
5 재 해 안 전	5-1.범죄, 재해	21) 범죄발생률	↘	↗↘↗	(-)	3,987건/10만 명('07)
		22) 자연재해 피해	↘	↗↘	(+)	11명, 637억원
6 인 구	6-1.인구 변화	23) 인구 증가율	-	↘	(0)	0.31%
		24) 인구 밀도	-	↗	(0)	487명/km ²
		25) 고령인구비율	-	↗	(0)	10.3%
1. 대 기	1-1.기후 변화	26) 온실가스 배출량	↘	↗	(-)	599.5MtCO ₂ ('06)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	(-)	12.41tCO ₂ ('06)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	(+)	0.79tCO ₂ /백만원('06)
	1-2.오존 층	29)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	↘	↘	(+)	CFC: 1,328톤 할론: 110톤('07)
	1-3.대기 질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	↗	(-)	서울:164, 부산:47, 대 구:52, 인천:147, 광 주:39, 대전:22, 울산:45 (초과횟수/측정소) ('07)
2 토 지	2-1.농업	31) 농지면적 비율	↗	↘(↗)	(-)	1,759천ha, 1.45ha/호
		32)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	(+)	11.9%
		33) 식량자급률	↗	↘	(-)	27.4% ('07)
		34) 화학비료 사용량	↘	↘	(+)	311 kg/ha(N,K,P)
		35) 농약 사용량	↘	→	(0)	13.2 kg/ha
	2-2.산림	36)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	↘	(-)	63.85%
		3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	9.4 m ² ('07)
		38) 목재 벌채 정도	-	↗↘	(0)	2.2%('07)
2-3.도시 화	39) 도시화율	-	↗	(0)	90.5%('07)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	↗	(-)	49.1%	
3 해 양 연 안	3-1.연안 지역	41) 연안오염도	↘	-	(0)	COD 동해1.07 서해1.47, 남 해1.13mg/l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	↗↘	(+)	6,174 천m ³
		43) 갯벌 면적 증감	↗	↘	(-)	-653.3 km ² , (-20%) (87~05)
	3-2.어업	44) 수산자원량	↗	↘↗	(+)	790만 톤('05-목표치)

연도	항목	지표	긍정적 방향	5년간 추세	5년 추세 평가	현황 '08년(다른 연도 괄호로 표시)
4. 담수	4-1.수량	45) 어업양식량	↗	↗	(+)	1,382 천 톤
		46) 취수율	↘	-	(0)	40.3% ('08)
	4-2수질	47) 1인당 1일 수돗물 소비량	↘	↘	(+)	340ℓ/인/일 ('07)
		48) 4대강 수질오염도	↘	↘	(+)	BCD 팔당13, 물금24, 대청10, 주안06
5. 생물 다양성	5-1.생태계	49) 하수도 보급율	↗	↗	(+)	87.1 % ('07)
		50) 자연보호지역비율	↗	↗	(+)	9.99 %('07)
		51) 국가생물종 수	↘	↗	(-)	221종
1. 경제 구조	1-1.경제 이행	52) 멸종위기종 수	↘	↗	(-)	221종
		53) 국내총생산(GDP)	↗	↗↘	(-)	8,870 억불
		54) 1인당 GDP	↗	↗↘	(-)	15,842 \$
		55) 경제 성장률	-	↗↘	(0)	2.2 %
		56) GDP 대비 순 투자율	↗	→	(0)	30.6%
	1-2 무역	57) 소비자물가지수	-	↗	(0)	109.7 (2005년=100)
		58) 무역수지	-	↗↘	(0)	-107.4억불
		1-3.재정 상태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	↗	(0)
6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		↗	(-)	41.0%	
1-4.대외 원조	61) GN대비 공적대외원조(CDA) 비율	↗	→	(0)	0.09%	
2. 소비/생산	2-1.물질 소비	62) 자원생산성	↗	↗	(+)	120 만원/톤 ('05)
	2-2.에너지 사용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	↗	(-)	5.01 TOE ('07)
		64) 총에너지 공급량	-	↗	(0)	236백만TOE(1차 에너지 소비) ('07)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	↗	(+)	2.37%('07)
		66) 에너지 원단위	↘	↘	(+)	0.247TOE/백만원('07)
	2-3.폐기물 관리	67)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	↗	(-)	123 백만톤/년 ('07)
		68) 지정폐기물 발생량	↘	↗	(-)	9,511톤/일('07)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	↗	(-)	6,849드럼('05)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	↗	(+)	57.8%(생활) 66.9%(사업장) ('07)
	2-4.교통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	(+)	42.6% ('05)
72) 자전거 도로 총 연장		↗	↗	(+)	9,066 km('06)	
73) 자동차 사고건수		↘	↘	(+)	사망 31명/1만대 127명/10만인('07)	
3. 정보화 등	3-1.정보 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	(+)	15,475 천명
		75) PC보유 가구비율	↗	↗	(+)	80.9%
	3-2.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	↗	(+)	648 종('06)
	3-3.과학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	(+)	3.2%('06)

연도	항목	지표	긍정적 방향	5년간 추세	5년 추세 평가	현황 '08년(다른 연도 괄호로 표시)
	기술					

<그림 3-1-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변화추이(2004-2008)

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으로 경제와 사회의 양적 기반은 계속해서 상당한 개선추세를 보이지만 아직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 빈곤인구비율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분배와 사회적 결핍에 있어서 형평성 측면을 강화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경기후퇴와 환율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총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고, 산림·갯벌면적 등 환경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패턴이 에너지,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여전히 보임으로써 에너지, 국토이용 등 환경보전 측면을 강화하는 국가성장의 질적 관리가 중요해짐
- 평가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 첫째,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 주거, 건강, 고용 등 각 영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안전망과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성장에 따른 국토환경자원 투입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전통적인 연계관계를 차단(Decoupling)하는 정책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부터 환경-경제-사회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의의 및 필요성

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의의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 제시
 -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입각한 경제, 사회 전반의 총체적 방향 전환 제시
 -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및 이행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과 국가발전 목표달성 추구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관리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전략, 이행계획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으로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

<표 3-2-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집행 및 평가체계

	수립 책임	협의	심의	추진	평가/보고	비고
기본전략	환경부장관	관계 부처	지속위	국가	지속위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부장관	관계 부처	지속위	국가	지속위	전략 일부
이행계획	각부장관	관계 부처	지속위	각 부처	지속위	

- 지방, 국가, 지역, 지구적 차원의 정책지침으로 활용
 - 21세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실현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관리전략
 - 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구의 필요성에 부응
 - 국제적 필요: "21세기 세계적 문제의 국가 단위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EU)
 - 국가별 활용: 국가 정책 및 계획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 체계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필요성

1) 환경 부문 전략 강화의 필요성

-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국토환경관리에 관련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국토의 자연생태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함

- 경제성장과 생태환경 파괴의 동반관계의 고리를 끊는(decoupling) 전략, 즉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기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등 생태환경 보전전략의 보완이 필요
- 특히, 국내외의 생물의 멸종 속도가 지구역사 평균 속도의 "수백배"에 달하는 등 생물종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UN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2005」에 따르면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감소될 경우, 경제·사회발전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Biodiversity Synthesis, World Resourc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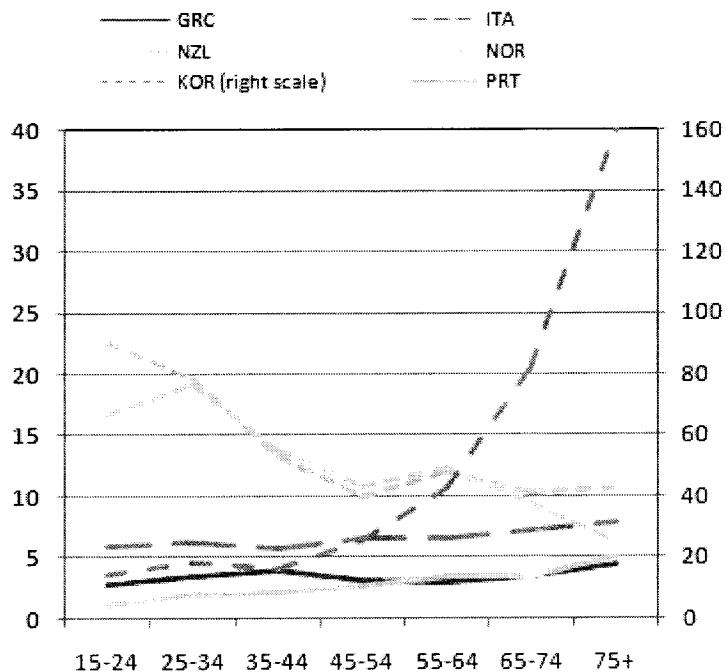
2) 사회 부문 전략 강화의 필요성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생활의 녹색혁명 및 녹색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등의 분야 이외의 사회발전 부문의 전략은 공백
- 우리사회의 안전하고 행복한 통합사회 건설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선진화를 위해 사회발전 동반전략이 필수적임
 - 특히, 각종 사회적 갈등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함
 - 사회 부문의 주요의제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이며 WSSD 이행계획 및 유럽연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도 강조하는 핵심 과제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동 문제
 - 근로복지, 주거복지, 전국민 평생복지기반 구축 등 사회복지 전략
 - 평생교육, 세계적 인재양성, 과학기술발전 등 교육·인적자원 전략
 - 양성평등, 전통과 현대 조화 및 문화산업, 다문화 수용 등 국가품격제고
 -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 전략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부문 전략 필요성

- 2008년 OECD 사회지표('09년 5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6년 국민순소득(NNI) 대비 공적사회지출은 OECD 평균 24.4 %의 1/3 수준인 8.0 %에 불과하여 30개 회원국 가운데 29~30위에 위치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직업만족도가 측정대상 2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1위로 나타남
- 자살율('05년)은 인구 1십만 명당 24.7명으로 OECD 29개국 평균 11.4명을 크게 상회하고, 특히 65세~74세, 75세 이상 노인 자살율이 각각 81.8명, 160.4명으로 OECD-29 평균인 16.3명과 19.3명에 비해 각각 5배, 8배에 달하여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문제가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됨

인구 1십만 명당 연령대별 자살율(2005년)
(OECD Social Indicators 2008)



<표 3-2-2> 사회부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정책 및 방향 및 실천과제

전략	정책방향	실천과제	
안전하고 행복하고 통합사회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및 안전시스템 마련	
		평생 직업능력개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망 체계 구축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복지체계 구축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건강과 환경 연계사업 추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비	
		갈등관리의 전문화 및 인프라 구축	
		공공개발 관련분야 갈등예방 법률 정비 및 확대	

- 이와 같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경제부문 전략과제를 수용한 토대위에 환경 및 사회 부문 전략과제를 보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

3)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통합적 역할과 기능 수행의 필요성

- 경제-사회-환경 통합발전개념 및 정책도구의 유용성
 - 1980년대 후반 이래 지난 20여 년간 환경보전, 경제와 환경의 상생, 국가 정책방향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통합적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온 발전이념이면서 정책도구로서 유용성이 여전히 존재
 - 국제사회는 지난 1972년 ‘인간환경회의’ 이후 20년이 되는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인류공통의 발전이념으로 정립했으며, ‘리우회의’ 이후 20년이 되는 2012년에는 ‘JPOI’와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의 이행과 향후 20년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논의하게 됨
- 국제협력, 소통 및 합의이행의 공동적인 필수 정책 및 평가도구
 - UN, 유럽연합 등은 회원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 모델을 제시하여 각국 실정에 따라 적용,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OECD는 회원국 환경부문 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표 3-2-2> 사회부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정책 및 방향 및 실천과제

전략	정책방향	실천과제	
안전하고 행복하고 통합사회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및 안전시스템 마련	
		평생 직업능력개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망 체계 구축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복지체계 구축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건강과 환경 연계사업 추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비
			갈등관리의 전문화 및 인프라 구축
		공공개발 관련분야 갈등예방 법률 정비 및 확대	

- 이와 같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경제부문 전략과제를 수용한 토대위에 환경 및 사회 부문 전략과제를 보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

3)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통합적 역할과 기능 수행의 필요성

- 경제-사회-환경 통합발전개념 및 정책도구의 유용성
 - 1980년대 후반 이래 지난 20여 년간 환경보전, 경제와 환경의 상생, 국가 정책방향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통합적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온 발전이념이면서 정책도구로서 유용성이 여전히 존재
 - 국제사회는 지난 1972년 ‘인간환경회의’ 이후 20년이 되는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인류공통의 발전이념으로 정립했으며, ‘리우회의’ 이후 20년이 되는 2012년에는 ‘JPOI’와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의 이행과 향후 20년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논의하게 됨
- 국제협력, 소통 및 합의이행의 공통적인 필수 정책 및 평가도구
 - UN, 유럽연합 등은 회원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 모델을 제시하여 각국 실정에 따라 적용,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OECD는 회원국 환경부문 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5년 OECD의 지적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작성하여 '07년 5월, UN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10월 OECD 연례지속가능발전전문가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음

- 국제적으로 각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상태 및 국가지속가능성을 비교 평가하는 지표이자 근거로서 계속적으로 활용될 것임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필요성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개념 규정된 '녹색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 역할 담당

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기능과 역할

○ 위와 같이,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국내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많은 중요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이 가진 녹색성장전략과의 상호관계 및 양 전략이 가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녹색성장 국가전략」 전략에서 다루지 않는 환경과 사회부문의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중요과제 보완
- 둘째, '지속가능발전전략'이라는 개념에 담긴 국제적,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수용하고 국제적 소통과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국가를 홍보
- 셋째,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보완적 역할

- 보완성 1 : 국토 자연생태환경관리와 종다양성 보전 등 환경부문 보완
- 보완성 2 : 소득, 주거, 고용, 건강,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갈등 등 사회부문의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보완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통합적 기능

- 통합 기능 1 : 국제적 가시성, 소통 및 합의사항 이행, 국가홍보
- 통합 기능 2 : 녹색성장 국가전략 지속가능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의 상호관계

-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의 위상을 갖고 있다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이 지속가능한 방향을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하는 관리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

제 4장 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1. 전략의 비전 및 추진원칙

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비전

1) 국가발전 패러다임

- 환경·경제·사회 3대 부문의 상호 연관성 이해와 통합
- 환경친화적 성장 동력 육성과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 융합
 - ⇒ 경제와 사회를 통합 고려하는 동반성장 비전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발전
 - ⇒ 녹색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 선진일류국가 실현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비전

- 환경·경제·사회가·균형 발전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
 - 환경·경제·사회부문 균형발전에 의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구현
 - 참여와 대화, 협의와 조정의 정책 사이클 내재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효율적 운영
 - 환경-경제-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녹색성장 발전체계 구현

나. 전략의 추진원칙

- 세대내 형평성
 -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생존과 삶의 질을 충족시킬 권리를 공평하게 가지고 있음
- 세대간 형평성
 - 생존과 삶의 질에 대한 권리는 미래세대까지 확장되어야 함
- 생태적 형평성

-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함

2. 주요전략 및 핵심과제

가. 주요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4대 주요 추진전략, 18대 핵심과제
-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저탄소 사회 구축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전 산업의 녹색화
 - 생활의 녹색혁명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한반도 녹색국토 조성
 - 자연자원 기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및 건축물 조성
 -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연안·해양 관리
 -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

-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전략의 추진기반 강화**
 -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친환경적 제도 및 세제 운영
 -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 **전략의 이행/평가체계**
 - 전략의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선진일류국가

경제·환경·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

비전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56개
이행
과제

-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사회 구축
- 청정에너지 보급
- 기후변화 감시 조기 대응체계 구축
- 식량안보체계 확립
- 기후변화 재해관리
- 수자원 관리
- 탄소 저감 사회 등

13개 이행과제

- 녹색기술·산업 개발
- 녹색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업별 녹색전환
- 녹색기술 국제협력
- 자원순환형 경제 산업구조 구축
- 녹색산업 수출 동력화
- 녹색생활녹색소비 등

16개 이행과제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 녹색국토관리체계
- 생물다양성 보전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녹색교통/건축물 활성화
- 자전거 이용
- 수자원 및 연안해안관리 등

13개 이행과제

- 서민생활과 주거안정
- 여성경제활동
- 노후생활 기반
- 평생복지체제
- 건강관리 사업
- 갈등관리시스템
- 갈등관리의 전문화 등

14개 이행과제

통합/
기반
전략

4대 통합전략/전략의 추진기반 17개 과제

[교육과 인적자원 /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친환경적 제도 및 세제/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 교육복지 • 세계적 인재 • 과학기술 • 녹색기술 • 산업 • 녹색금융 • 탄소시장 • 녹색일자리 • 친환경세제
- 저탄소규제 • 유인 혁신 • 녹색산업 • 에너지복지 • 모범국가 • Green Hub • 개도국 지원

평가및
환류

중앙 추진계획 성과점검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이행성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2부 국가지속가능발전 주요전략 및 핵심과제

I.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44
1.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44
2.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49
3. 저탄소 사회 구축	57
II.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63
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63
2. 전 산업의 녹색화	71
3. 생활의 녹색혁명	78
III.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85
1. 한반도 녹색국토 조성	85
2. 자연자원 기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88
3.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및 건축물 조성	90
4.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연안·해양 관리	93
5. 지속가능한 해양발전 방안	98
IV.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102
1.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102
2.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111
3.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120
V. 전략의 추진기반 강화	125
1.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125
2. 녹색경제 기반 조성	130
3. 친환경적 제도 및 세제 운영	141
4.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146
VI. 전략의 이행 및 평가체계	152
1. 전략의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152
2.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152

제1장 기후변화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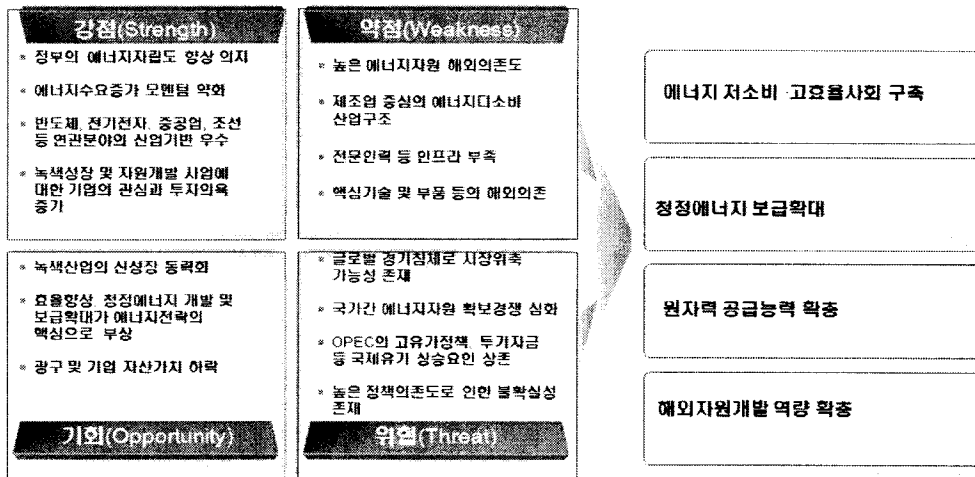
1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에너지전략의 핵심은 소비효율화와 청정에너지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전략의 핵심으로 추진
 - * 일본은 '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30% 개선하는 목표 설정, EU는 20-20-20 전략 수립('20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 20%, 온실가스 감축 2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
- 국내 에너지소비와 생산구조는 해외의존형·탄소다배출형 체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탈석유와 에너지 자립이 절실
 -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OECD 평균대비 83% 높은 수준('06년, OECD평균 0.190toe/천\$, 한국 0.347),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4%('07년)
- 에너지의 효율향상과 절약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원전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추진

추진방향 : 적정에너지믹스를 달성하고 에너지자립도 강화



② 추진전략

1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사회 구축

-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효율사회 조기 실현
 - 최적의 기술획득전략 마련 및 통합형 R&D 프로그램 추진, R&D부터 실증·보급정책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 (산업)에너지 다소비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NA, EMS 등) 추진
 - * NA(Negotiated Agreement) : 기업이 정부와 협의하여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부여(덴마크 등 도입)
 - * EMS(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전사적 에너지관리체제로 공기기관이 평가·인증(미·영 등 10개국 도입)
 - (수송)연비기준 강화,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신고제 도입 등
 - (건물)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건축물 설계기준 및 효율등급 인증제도 강화
 - * 집단에너지 보급 목표 : ('07) 159만호 → ('12) 242만호 → ('17) 312만호
- 에너지공급 사업자 수요관리 강화
 - 원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 에너지원간 통합 자원계획 및 수요관리, 설비시스템 효율화(스마트그리드 등)
- 고효율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촉진
 - 고효율 기자재 인증품목 확대, 에너지다소비 기기 '최저효율기준' 및 '대기 전력 경고표시제' 적용 확대
 - 저효율기기 시장퇴출('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제조업체의 생산제품별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 * 호주는 '13년까지, EU는 '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선언
- 원가주의·전압별 요금체계 등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개편

- 청정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에너지원별 기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추진
 - 표준화·인증제도 강화, 실증·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점기술의 조기 산업화
 - * 국제수준의 표준화·인증시스템 운영, test-bed 확대 등
 - 주요 수출품목 선정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지원체제 구축
- 시장기능 도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생력 확보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FS 등)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s) 도입
 - 녹색 가격제(Green Pricing) 도입 등 민간주도형 체제 구축
-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원별 융복합·최적화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혼합(Mix)한 보급방안 도입
 - 가정, 공공건물, 신도시에 대한 보급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년), 저탄소녹색마을(~20년)
 - 열부문, 연료부문 보급(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등) 확대
- 기초인프라 확충
 - 신재생에너지펀드 출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개선, 신재생DB구축 및 컨설팅 제공
 - * 신재생에너지 기상자원 지도제공 및 입지 컨설팅 등

□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정비

-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 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
-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력양성, 정보취득 및 제공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 자본 확충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 해외 자원개발기업 M&A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

□ 전략적 해외자원개발 추진

- 지역별·광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산업협력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
- ODA 지원 등을 통해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유력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마련

□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

- 자원개발펀드 활성화, 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 투자 유도,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충
-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지정·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회계 등 자원개발 지원분야 전문가를 육성
- 핵심기술에 대한 중장기 R&D 지원 및 해외 유망 자원개발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

* 기술전문인력 교류,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 비전통적 에너지 자원 및 한반도 자원개발 추진

- 오일샌드 및 오일셰일, 석탄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청정합성연료(CTL, GTL, DME),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상용화 추진
- 국내 대륙붕 탐사 지속 추진 및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자원협력 확대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2020년 에너지원단위(0.233), 신재생에너지보급율(6.1%), 원전 설비비중(32%), 석유자주개발율(30%) 목표 달성
- ◇ 이를 위해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 도입,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사업 단계적 추진
- ◇ 2020년 에너지자립도 54% 달성('50년 70% 목표)
* 에너지자립도 = 신재생비중 + 원자력비중 + 화석에너지비중*자주개발율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에너지원단위 (toe/천\$)	0.290	0.233
■ 신재생에너지보급율(%)	4.0	6.1
■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20	30
■ 에너지자립도(%)	42	54

* 3E(에너지 안보·효율·환경)를 고려하여 원자력 적정비중 확보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고효율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개편			
■ 청정에너지 산업화촉진 실증/시범 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RPS/RFS) 도입			
■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개선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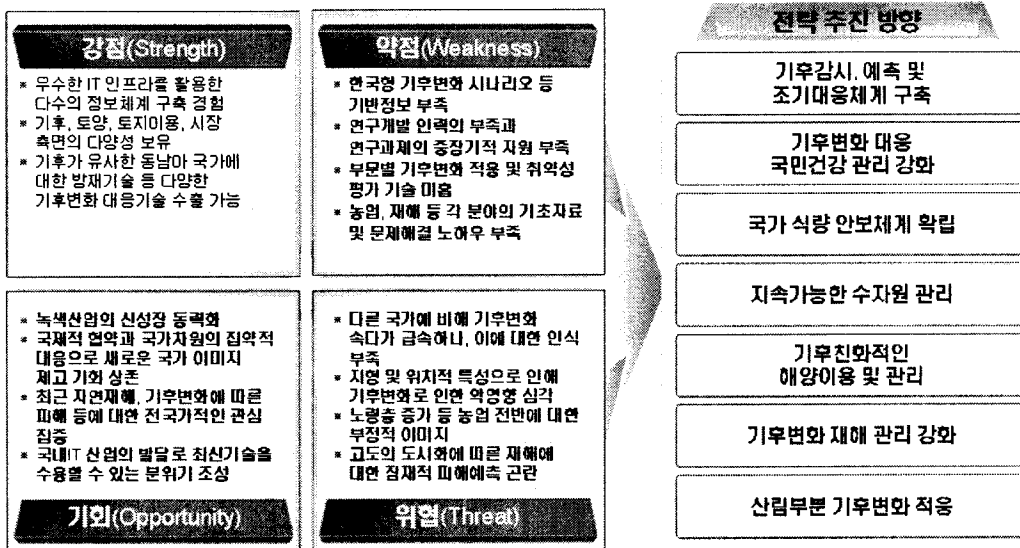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중

- * Adapting to climate change: Towards a European framework for action('09.3), Climate adaptation in the Netherland('06.5)
-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수입의 2%를 개도국의 기후적응 지원 펀드로 조성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은 아직 미흡한 상황

- *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 한반도(6대도시 평균) 기온은 1.5℃ 상승
- * 최근 40년간 제주도 근해 해수면상승(22cm)으로 서귀포 용머리 해안 산책로 침수

추진방향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반확보 및 사전예방정책 수립



2 추진전략

1 기후감시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 기후변화 협약 대응 지원 및 세계선도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감시능력 조기 확보
 - 독도 및 남극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등을 통한 기후변화 감시망 확대 및 온실가스 측정 세계표준센터 유치
 - 항공·선박·위성 등 3차원 입체관측 기술개발 및 동아시아 탄소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동아시아 기후변화 리더십 확보
 - *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만 위성에 의한 탄소추적시스템 보유
- 고품질의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자료 생산을 위한 통합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및 모델의 신뢰성 향상 추진
 -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제공 및 적응분야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 * 국가기후변화시나리오 생산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극소수 나라에 불과
 - 지구시스템모델 및 지역기후모델 개발 등을 통한 국지규모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지원 체계 개발·운영
 - * 지구시스템모델은 대기-해양-해빙-탄소순환을 통합한 첨단예측모델로 현재 미국, 영국 등 11개국이 보유
-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후변화 조기대응지원 기반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합관리 및 웹기반 서비스 시스템 구축
 - * 영국 등 기상선진국은 웹 기반의 원스톱 정보서비스 실시 중
 -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한 기후산업의 육성 및 풍력·태양광 등 기상자원 지도 개발
 - * 캐나다는 자원지도 제작 기술 자체를 기 상용화하여 중국에 수출

-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 폭염, 홍수, 폭풍 등 직접적 영향과 전염병 매개체 증가, 대기오염 등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조기 경보체계 구축
 - * '94년 폭염기간 중 65세 이상의 노약자 사망자가 평년대비 104% 증가
 - * 말라리아 환자 : ('04) 826명 → ('07) 2,192명
 -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 농어민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국민 홍보
- 전염병, 대기오염, 폭염, 기상재해 등 4개 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시행
 - 매개체전파전염병, 품매개전염병 등 피해에 대한 조사·감시·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대책 수립
 -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감축 정책 추진
 - 열섬효과로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도시 빈곤지역, 농촌·도서 벽지 지역 등의 근로자,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대응역량 강화
 -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재해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 1990년대 초반 재해기간은 평균 2.5일이었으나, 1996년 이후 평균 4.2일로 장기화되고, 재해 당 사망자수도 80년대 12.5명에서 2000년대 21.3명으로 증가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자체의 건강관리사업 지침을 개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 보건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3**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자원의 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 농업생태계(작물, 병해충,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및 생산력 예측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 농업 생산체계 구축 지원
 - 종합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해·어황 예측모델 구축
 - * 기후변화에 따른 해조류 감소 및 연안어장 황폐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는 어업자원의 변동 조사·예측 및 바다 숲 복원작업 추진
- 농수산자원의 안정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 작물별 재배적치 배치, 고온 및 재해적응 농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고온기 축사환경 개선 및 사육기술 보급
 - 고부가가치 대체 양식어종 및 고온 내성 우량 수산자원 품종 개발
 -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영농시뮬레이터 기술, BT 융합 농업시스템모델링 기술, 영농로봇기술 등 첨단 농법 기술개발 촉진
-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 농업생산환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급환경을 조성하고, 영농시뮬레이터, 로봇영농 등 자동화기반을 구축
 - 최소 농경지 확보, 빌딩농장, 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방류, 바다 숲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자원 확보
-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
 - 주요 곡물 수출·입국의 작황감시 및 생산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 * 미 농무부, 유럽연합에서 전지구 작황감시 및 예측프로그램 운영중
 - 해외 플랜테이션을 확대하여 바이오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고, 비상시 식량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개도국 지원용 영농 IT 교육, DB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강화

4**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안정적인 물 공급
 - 하천 공간 확대, 중소댐 건설, 고도 물처리, 저수지 개량, 강변저류지 및 습지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수자원 확보
 - 해수담수화, 지하청정 해수 개발, 빗물·하수 재사용 등 대체수자원개발을 통해 도서, 해안, 산간 등 상습가뭄지역 물 부족 해소
 - 농업용수 등 취약성과 파급성이 큰 용수관리 등 물 수요관리
-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호
 - 물 순환 불확실성 증가로 발생 가능한 가뭄, 홍수, 수질, 생태환경 등의 분야별 취약성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유량변화와 기온·수온 상승에 취약한 습지 등 하천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비점오염물질, 미량유해물질 등 저감 대책 수립
- 능동적인 수자원 인프라 이용
 - 물 불균형 개선을 위한 댐 간 통합연계 운영, 수계·광역 단위 수자원 네트워킹 등 유역단위의 통합관리 운영방안 마련
 - 댐, 하수처리장 등 수자원 시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수력 발전 등 수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 홍수대응 능력 강화로 안전한 국토 형성
 - 기후변화 대비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 집중호우 증가 등의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 및 댐 등 수공구조물 설계기준 강화 및 보수
 - 친수 공간 형성,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 홍수관리대책 수립

- 해양흡수원, 해양에너지, 해상복합에너지 공급 등 해양공간 활용 및 해양자원 개발 통한 해양이용을 극대화
 - 2020년까지 300만톤급 처리시설개발 및 수출용 보급형 CCS 플랜트 및 수송 장비기술개발로 시장 선점
 - * 노르웨이 Slipener, 캐나다와 미국의 Weyburn 등 연간 100만톤급 주입 중
 - 해양에너지 기술 확보 및 시장 확대, 해상 복합 에너지 공간 창출로 해양 활용 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
 - * 2020년까지 조류 9만 KW, 조력 200만 KW, 파력 10만 KW 등 해양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450만 배럴의 원유 대체
- 국민 생활기반 공간에 대한 적응시스템구축과 IT 융합형 기후변화 대응 관리시스템 및 해양영토 보존
 - 산업·정주 등 주제 단지별 경제사회적 취약성 평가 및 IT기술 융합형 정밀 해수면상승 대응 등 통합 연안관리전략마련
 - 2030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성화 영향평가 및 생태계 관리 시스템 구축 100% 달성
 - * 2030년 까지 우리나라 해역을 6개 서해 남북, 남해 동서, 동해 남북으로 산성화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중 설정 및 관측시스템 구축
- 해양부분의 통합적 온실가스관리와 해양과학 기술 활용을 통한 국제 산업/식량기지 보호와 이를 통한 신시장 개발 기반 확대
 - 항만, 공공기관 선박 (해경, 해양관리공단) 및 근해용 어선 등의 온실 가스를 2020년 까지 100% 관리
 - 산업/식량공급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통한 장기적 관측거점 확보 및 해양관측시스템 구축과 적응사업 실시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재 패러다임으로 전환
 - 확률강우량, 이상기온, 바람·적설·태풍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극한 현상에 대한 취약계층·지역 재해 위험지도 작성
 - * 재해위험지역의 기후, 경제, 산업, 인구, 인프라 등 통합자료시스템 구축
 - 재해 사전대응을 위해 IT기반의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설계 기준 등 방재기준 재설정
- 재해경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고 방재산업 활성화
 -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재해취약지구, 소하천을 정비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건설 등의 친환경 방재환경 구축
 - * 재해위험지구 총 1,180개, 소하천정비대상 총 25,528km에 대한 정비추진
 - U-City 등 IT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방재안전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
 - 방재산업의 제품 판매경로 확대, 대기업 투자유도 등을 위한 국제방재산업 박람회 후원 등을 통해 방재산업 육성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관리 강화 및 친환경 복구체제로 전환
 - 자연재난의 긴급구조·구호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인구, 도시빈민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해 자연재난 대비 시민 자율 참여를 확산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활성화
 - 기존 기능중심의 복구사업에서 생태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사업 추진

③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기후변화 감시 역량 분야 선진화	50%	60%
▪ 비상시 국민 최소식량확보율 (칼로리 기준 양곡자급율)	50%	55%
▪ 기후변화 대응형 통합유역관리 모델개발	50%	70%
▪ 기후변화 대비 사전예방 및 예경보를 통한 재해저감	50%	60%
▪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재해대응능력강화	50%	6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지구환경변화 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영농시뮬레이터 보급			
▪ 로봇영농기술 보급			
▪ 생태하천 복원 및 조성 사업			
▪ 친환경 중소댐 건설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사업			

①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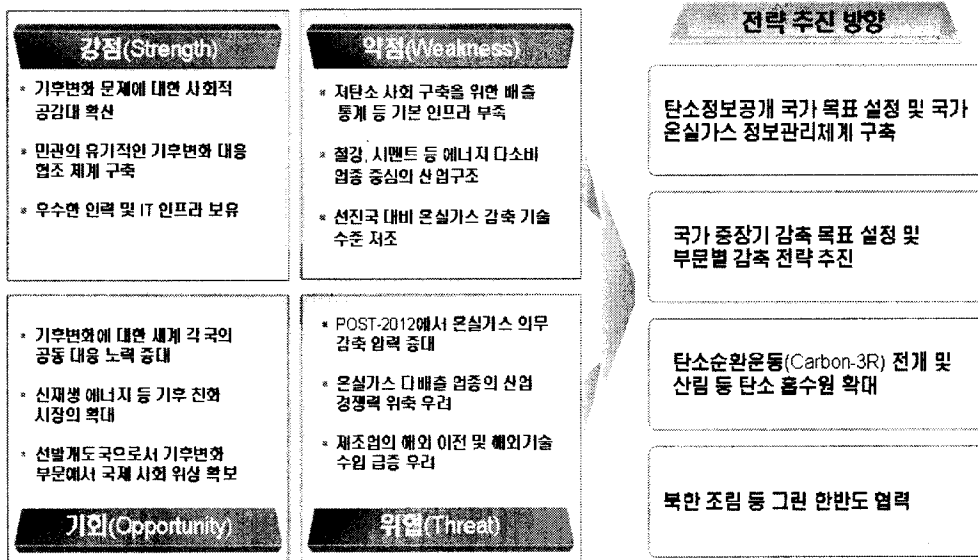
□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적극 추진 중

-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경쟁적으로 발표
 - * EU : 90년 대비 20년까지 -20%, 50년까지 최대 -80% 감축 목표 발표
 - * 미국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의지 표명

□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인벤토리,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법적 근거가 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중('09.2월 국회 제출)
 - * 09년 중 국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 예정

추진방향 :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축



2 추진전략

1

탄소가 보이는 사회

□ 탄소정보공개 국가목표 설정 및 관리

- 전분야에 걸친 탄소정보 공개지표(CVI, Carbon Visibility Index)를 개발하고, 중기 국가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국가 목표에 따라 제품·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탄소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정보공개(CVI) : 13년(50%) → 20년(70%) → 50년(100%)

□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체계 구축

-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운영
 - * IPCC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MRV 체계, 보고 및 검·인증 표준화 등 제도 마련후,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
 - * 10년(제도) → 13년(종합정보관리시스템) → 30년(실시간 정보제공)

□ 온실가스 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국제 연구센터 창설

- 전 제품·서비스의 탄소추적기술 개발 및 보급, 온실가스 정보관리 자격제도 도입 및 MRV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 10년(자격제도 도입) → 13년(전문인력 10,000명 양성)
- 배출량 검인증 전문 기관 및 국내외 민간·공공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기후변화 연구센터(싱크탱크) 육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비전에 동참하면서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

* '20년 중기목표 : 사회적 합의를 거쳐 '09년 중 설정

* '50년 장기목표 : 글로벌 비전(온실가스 50% 감축 등) 동참

-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 가동

□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비용효과적 방식의 맞춤형 감축전략

- (건물부문) 건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설계기준 등 제도정비와 그린홈·그린스쿨,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초기 감축물량 확보

* 건물의 진화 : 1단계(' 탄소 배출) → 2단계(zero 탄소배출; 에너지자족) → 3단계(' 탄소 배출; 에너지판매)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기준, 그린카 확대,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 등을 통해 탄소 감축 촉진

* 대중교통분담율(대도시 기준) : '13년 55% → '20년 65%

- (에너지·산업부문)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 접근

- (기타) 가정의 에너지 절약, 축산·작물·폐기물 바이오 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추진

□ 정부는 최소규제와 최대지원, 민간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도적 감축

- 온실가스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도입과 CCS 등 한계 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재정적 지원책 강화

* 미국 EPA 보고서('09.4) : 온실가스를 건강위해물질로 규정

- 세계 최고의 저탄소 자원순환사회(Eco-efficiency) 구현
 - “자원은 탄소”, “자원소비는 탄소배출”이라는 자원에 대한 일대 인식전환을 확산,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식 선도
 -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세계최고의 탄소순환율 달성
 - * 탄소(자원)순환율 : '13년 17% → '20년 22% → '50년 50%

-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대
 - 유휴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 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 * 대규모 토지 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 흡수원 조성
 - * 탄소흡수원 확충(천ha) : 13년(289) → 30년(360) → 50년(399)
 - 산림녹화 성공경험·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창설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로 그린리더쉽 확보
 - *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화

- 탄소를 순환 저장하는 바다숲과 친환경 농업 보급
 -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보급
 - * 바다숲 조성(ha) : 07년(400) → 13년(7,000) → 20년(35,000)
 - 유휴지 다년생 목본 작물 재배, 최소 경운 등 토양의 탄소 저장원 활용과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공유하면서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

* 북한 조림 면적(ha) : 13년 2만 → 30년 80만 → 50년 160만

- 산림복구사업을 CDM 사업과 연계,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 구축

□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 이상기후에 대비, 임진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협력, 국산 기상위성 기후정보 제공 등 협력사업 추진

- Post-2012 체제에서 향후 통일된 한반도를 전제로 탄소배출량을 전망하고 효율적인 감축 대책 마련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세계 최고의 탄소 순환율 달성
- ◇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탄소정보공개도(CVI)	40	60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금년중 설정
▪ 탄소 순환율	17	22
▪ 북한조림면적(만ha)	2	10

주요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탄소 발자국			
▪ 제로탄소배출 사업(Zero Emission Work, 화상회의 등)			
▪ 탄소순환운동(Carbon-3R)			
▪ 한반도 저탄소 산림경영			

제2장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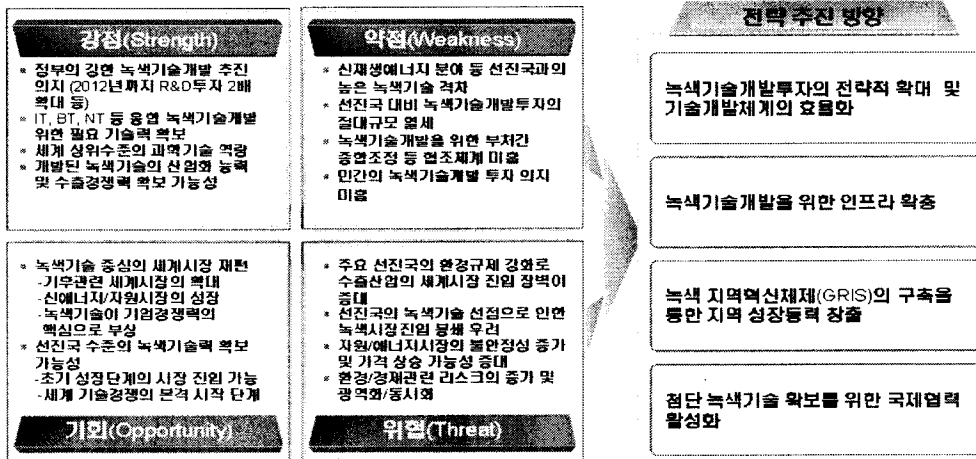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녹색기술개발 및 실용화 제고를 통한 新성장동력화

- 주요 선진국은 녹색성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녹색기술개발 강화
 - 일본의 '저탄소 기술계획('08)', 미국의 '첨단에너지계획('06)', EU의 '에너지전략 기술계획('08) 등 통해 녹색 R&D투자 확대
- 국내도 '녹색기술 연구개발종합대책' 등을 통해 기본전략 수립 및 27대 중점기술에 대한 로드맵 마련
 - 녹색기술 R&D투자를 '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27대 중점육성기술에 집중투자 예정

추진방향 :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② 추진전략

1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 정부 녹색기술개발의 전략적 확대

- '50년까지 전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30% 수준까지 확대

* '08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약 10% 수준인 녹색기술개발투자를 '13까지 15%, '20년까지 20%, '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 3대 부문에 기술·시장변화를 반영한 능동적 목표(Moving Target) 전략

- 3대 방향: ① 기후변화 생존에 필요한 기술, ② 녹색성장을 견인할 기술
③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술

- 녹색도, 성장기여도 등에 기반한 R&D투자배분의 전략성 제고

* 실리콘계 태양전지, 조명용 LED 등은 단기집중투자를 통한 단기 성장동력화, 핵융합로, 수소에너지, IGCC 등은 장기투자를 통한 선도기술 확보

□ 기초·원천연구와 응용개발에 대한 균형적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가칭 "Green Tech 2015 Initiative" 추진)

- [단기]응용개발 연구는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가칭, "Green Star Program")하고 기초·원천연구는 잠재 성장력 제고에 집중(가칭, "Green Pathfinder Program")

* LED, 실리콘계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2차전지, 그린카, 차세대경수로 등

- [중장기]산업화 관련된 과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 정부는 혁신적 녹색기술 확보와 대형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 전환 강화

- 지원대상 R&D과제 선정시 기존의 기술적, 상업적 성공가능성 이외에 '기술 녹색도(Degree of Greening)' 기준 도입·적용

* 단계적 구조개선 : (1단계)녹색기술 관련 과제 표기 → (2단계)녹색기술 목적 사업으로 구조제편 → (3단계)실용화·산업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

2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 녹색기술개발 종합조정체계 강화
 -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계된 전략 녹색기술 개발 종합조정 체계 (Green Technology R&D Council) 구축
 - 종합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 단기)現 각 부처 연구관리기관 간의 networking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 * 중장기)동향 파악, 기술예측 등을 전담하는 '녹색기술센터' 설치 검토
-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
 - 녹색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 * 신재생에너지 등 시장형성 초기단계는 정부 전담 후 민간 이양, 기후변화예측 등 기초·원천기술은 정부 전담 등 정부-민간 역할분담 명확화
 - BAT(Best Available Tech.)관점에서 기술획득전략 합리성 제고
 - * 수계수질평가·관리, 생태공간·도시재생 등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현저히 처지는 경우 기술도입, M&A 등 활용, 실리콘계 태양전지, 전력IT, 원자력 등 상대적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 자체개발 등 획득전략 다각화
 - '집약형 대형 녹색기술'의 경우 범정부적 개발 및 가치사슬에 따른 대학, 출연(연),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의 공동 참여 제도화
 - * 그린홈, 그린시티 등은 범부처적 공동 R&D 방식 추진
-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Green Core) 조성
 -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단지 등 대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가칭, "Green Core")을 조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를 통한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연구의 거점 강화

- 정부 녹색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기반 강화
 - 정부 녹색기술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관리 강화
 - * 녹색기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화 연계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등
 -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대학 또는 출연(연) 주도 응용개발과제에 대한 평가항목 중 기술이전의 비중을 확대하여 기술이전 촉진 유도
 - 유망 녹색기술 발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금융 공조 강화
 - * 녹색기술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우수 녹색기술 연구소기업 설립 등

-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가칭)“Green Star Program” 운영
 - 녹색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전담할 녹색 coordinator 양성, 중소기업 기술경영 지원을 위한 ‘녹색기술 자문관’ 지원
 - 녹색기술 사업화지원 전문기업의 육성
 - * 녹색기술 연구개발 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사업화 전문기업(TBA) 육성
 - * 녹색기술 사업화 전문기업의 기술가치평가 인증제도 및 보험제도 도입 등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 사업화 역량 확충
 - * 대학·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등

- 녹색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기업체의 수요, 연구기관의 성과물, 금융권 지원 등을 함께 논의하는 ‘녹색기술대전(가칭)’ 운영
 - 녹색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녹색기술 인큐베이터 지정·지원
 - 녹색기술 성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술 사이버 장터’ 개설

4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
 - 녹색기술분야별 '녹색기술(Green Tech) 인력양성 사업(가칭)' 추진
 - * 녹색기술-산업 수요 및 산업화 단계에 따른 인력양성사업 개편 등
 - 미래기반 핵심 연구인력 및 지역-산업 특성화 선도인력양성
 - * 다학제간 연계 프로그램 확대, 해외 핵심연구인력 유치 및 공동연구 지원 확대, 녹색기술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거점대학 육성 등
-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표준화 기반구축
 - 녹색기술 시험·인증 및 각 분야별 전문 표준 체계 강화
 - * 녹색기술분야의 시험·인증·표준 로드맵 및 체계 제정 등
 - 녹색기술 시험·인증·표준 인프라 기반 강화
 - * 시험·인증·표준 기관 육성 및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선진화 등
-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녹색기술금융 지원의 활성화
 - 녹색기술 금융 지표 제공으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녹색기술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 활성화
 - * 기업별 녹색등급, 기술 가치, 시장 성장성 등 기술금융 지표의 다양화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술금융 지원 확충
 - * 기보, 신보, 중진공, 지역보증재단의 녹색기술 우대조치 도입 등
- 세계수준의 녹색기술 정보체계(가칭, 'Green Intelligence Program') 구축
 - 녹색기술 관련 정보 DB구축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 녹색기술 미래예측, 녹색기술/시장/산업 정보 DB 및 녹색기술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등

- 지역 녹색성장동력 창출 위한 광역권별 녹색기술클러스터 조성
 - 광역권별 지역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녹색기술 클러스터 조성
 - * (예시)호남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클러스터, 그린光기술클러스터 등
 - 기존 지역혁신사업을 녹색산업 연계 전략산업으로 개편 추진
 - * (예시)전북의 '새만금 아마존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지역의 녹색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대
 - 지자체별 녹색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지방 양여금제도의 개선
 - * 녹색기술개발투자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 및 지역 녹색기술개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 등
 - 국고보조금 제도 및 지방 특별 교부세 제도의 개선
 - * 지자체별 녹색기술개발 노력정도에 따른 차등 보조율제도 도입 및 지방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특별 교부세 신설 등

- 지역 주도 녹색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하부구조 개선
 - 지역주도의 지역 녹색혁신 환경조성 프로그램 추진
 - * 지역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등 사업 추진, 지역 수요 중심의 R&D 활성화 및 성과의 지역 활용도 제고 등
 - 지역내 기술혁신 관리기관간 녹색기술 거버넌스 확립
 - * 지역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특화센터간 혁신시스템 구축
 - 녹색지역혁신체제 구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보체계 구축
 - * 녹색 지역혁신역량 지표개발 및 활용, 지역 녹색혁신 종합DB 구축 등

- 국제기구를 통한 녹색기술 강국과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 녹색기술 관련 국제기구, 녹색기술 표준구축 활동에 적극 참여
 - * IPCC, ITU 등 국제기구 녹색기술 활동 참여, 국내 시험평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등
 - 다자 차원의 글로벌 녹색기술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
 - * OECD 글로벌 녹색성장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등

- 녹색기술개발·확산의 글로벌화를 통한 녹색혁신역량의 제고
 - 선진 녹색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우수 녹색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 추진
 - * 기초·원천분야 : 전략적 협력, 조기상용화분야 : 전략적 M&A 위주
 - * CLSF, IPHE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의 참여 확대 등
 - * 미국 로렌스 버클리(연)과 태양광이용 연료제조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 대 개도국 '그린' 협력을 위한 녹색기술의 적극적 확산
 - * 대 개도국 'Green Technology for All' 이니셔티브 추진 등

-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하부구조의 확충
 - 해외 우수 녹색기술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 * 세계적 녹색 기초·원천기술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 모색 등
 - 우수한 해외 녹색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 * 해외 한인 녹색기술 석학 활용 프로그램('Ultra Green Program') 운영 등
 - 녹색기술 개발 관련 해외 정보, 인물, 동향, 특허 DB 등을 구축·운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래 기술예측을 추진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정부 녹색기술 R&D투자 규모,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실적, 선진국과의 기술개발 제휴, 저감된 탄소배출량 등이 주요 성과지표

◇ 27대 중점육성기술을 포괄하는 녹색핵심기술개발사업, 녹색기술 이전센터 사업 및 관련 인력양성사업, 녹색기술정보체계구축사업 등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정부 녹색기술개발투자 규모(억원)	50,000	100,000
·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	10%
· 녹색기술인력 양성실적(명)	10,000	20,000
· 녹색기술수준 향상실적 (선진국 대비 %)	80	90
·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KtCO2)	500	2,00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녹색 핵심기술개발 사업			
· 글로벌 녹색기술사업화센터 사업			
· 선도 녹색기술인력양성 사업			
· 광역권별 녹색기술클러스터 사업			
· 녹색기술 정보체계구축 사업			

2

전[全]산업의 녹색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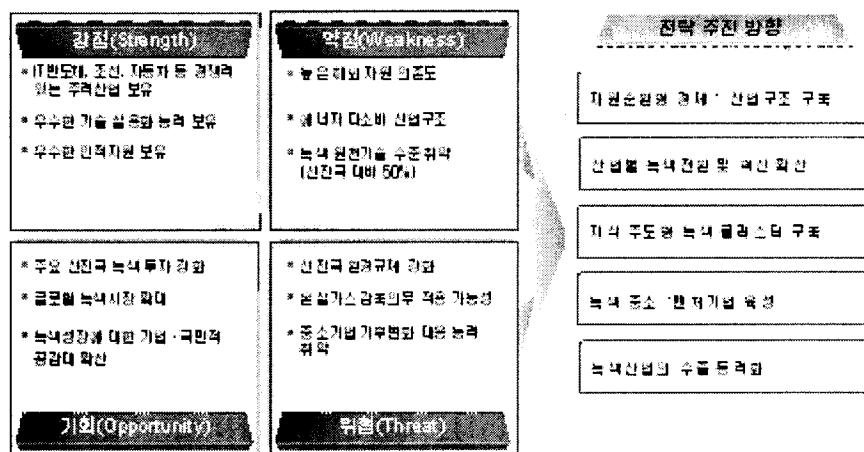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산업의 녹색화”

- 산업부문(57%), 특히 제조업(산업부문 소비중 94%를 차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
 - * 국내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 산업(57.5), 수송(20.4), 건물(19.8), 공공(2.3)
- 효율성 향상 노력 불구, 선진국 대비 에너지 효율성도 낮은 수준
 - * 에너지원단위(toe/전\$, '06년, '00년 불변 PPP기준) : 영국 0.13, 일본 0.15, 독일 0.16, 프랑스 0.16, OECD평균 0.18 미국 0.21, 한국 0.22

□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녹색산업의 육성”

-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온실가스 감축 불가피
- 글로벌 녹색시장 성장과 함께 시장선점 위한 주도권 다툼 치열

추진방향 : 저탄소 녹색산업 구조 전환 및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



② 추진전략

1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 구조 구축

□ 자원순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천연·순환자원의 투입에서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파악·분석하는 통합 자원통계 DB 구축 등 통합 관리기반 구축
- 폐기물, 하·폐수 등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령체계 정비
 - 종합계획 수립, 자원순환율·자원생산성 제고시책 추진 등
 - * (일본)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독일)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

□ 시장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기반 구축

- 순환자원(폐기물, 하·폐수)의 수거·공급체계 선진화
 - 현행 분산 수거체계의 집중화 등 규모의 경제 확보, 자원순환 산업분야의 각종 규제완화 등 추진
- 순환자원(폐기물, 하·폐수) 재활용 제품 시장 창출
 - 공공구매 및 의무구매제 확대, 재활용제품 유해성 인증 및 자원순환상품 인증 제도의 통합, 고도 물처리·하폐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

□ 자원순환산업 성장 동력화

- R&D지원 확대 등을 통해 폐기물 자원순환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도시 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업 활성화
 - 도시광업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 휴대폰 수거지원 촉진, 도시광업 관련 세제·금융지원 확대
-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고품질 순환 골재 보급 촉진
 -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품질강화, 인센티브 제공, 중간유통기지 건설 등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시스템 개발 및 개도국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자원순환 체계의 해외 이식으로 필요 자원의 안정적 조달, 관련 산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 저탄소형 산업구조 구축

- 고효율에너지 기기 및 설비 투자 확대, 공정 단축·혁신(예: Finex공법), 폐열 등 생산 부산물 스왑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 ESCO, CMS, 친환경 디자인 등 녹색서비스산업 육성, IT 접목을 통한 녹색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 주력산업 녹색혁신 및 성장엔진 확충

-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융합,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해 '20년까지 세계 녹색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
-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 제품 경량화·고성능화용 복합소재, 고효율에너지 기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기업문화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 과정의 녹색경영체제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Made in Korea 브랜드 이미지 제고
 - * 녹색경영체제인증, 녹색경영성과보증, 공시제도 확산 등

□ 건설 생애주기 전단계의 녹색화

- 친환경 설계법 확산, 건설 폐기물 등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 자재생산·시공·유지관리 및 폐기까지 CO₂·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평가하여 환경성능이 우수한 공법을 채택

□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 빌딩농장 확산을 통한 에너지·자원 효율화, 화학비료·농약절감, 농경지 토양 종합관리, 친환경 농산물 전문 생산·유통업체 육성 등
 -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5% 달성

-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살린 한국형 녹색 스타 클러스터 조성
 - 녹색산업 집적 현황, 입지여건 및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토대로 산학연간 협력, 혁신, 경쟁이 선순환되는 녹색 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 주력산업 녹색혁신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유형화
 - 지역 선도·전략산업 등 기존 시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교육·체험·오락과 연계한 범국민적 녹색클러스터 조성
 - 클러스터별 민간주도 지원단 설치, 선진기술 유치,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클러스터로 육성

- 그린산업단지 구축(국가산업단지 녹색화)
 - 저탄소(Low-Carbon) 산업단지
 - 단지내 폐에너지 및 부산물의 순환망 구축으로 외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원 및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시스템 구축
 - * '20년까지 연간 경제적 효과 1조원, 환경오염 저감효과 2억톤 달성 추진
 - 단지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붕의 태양광 발전, 태양열·지열 냉난방,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배출 최소화
 - IT접목 유비쿼터스(Ubiquitous) 산업단지
 - GIS기반 실시간 물류지원, 에너지·자원의 순환경로 파악 및 최적화경로 제공, 오염물질의 자동관리 가능한 컨트롤타워 구축
 - 산업단지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개별 CDM 및 프로그램 CDM* 사업화하여 창출 수익을 재투자
 - *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규모·사업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CDM사업

-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
 - 국제환경추적시스템 구축, 국제환경대응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외 규제 정보를 제공
 - * 국제환경추적시스템 : 계획·논의 중인 규제내용을 모니터링·분석하여 업계 대응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 녹색정보망 구축, 녹색도 진단, 저감활동,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
 - 「그린팩토리」 운동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고효율 공장으로 전환 촉진제공
 - 친환경 공정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지원 등
- 녹색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 녹색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전문 평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자금, 금융 및 펀드 등 지원 확대
 - 녹색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수출 지원
 - 유망 녹색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정책자금, 인력개발, R&D, 판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종합 지원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 대·중소기업간 공급망(Supply Chain)을 활용한 그린 파트너십을 통하여 대기업의 녹색경영 노하우, 기술이전, 환경규제대응 방안 등을 지원
 -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체계를 구축
 - * 모기업과 함께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모기업은 온실 가스 감축 기술 및 재원을 제공하고 모기업은 감축실적을 확보

- 녹색 제품·서비스 수출 기반 강화
 - 선진국과 그린 IT분야 기술협력 확대로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국내 녹색전시회의 대형화·선진화를 통한 녹색제품 거래 허브화
 -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R&D 지원 및 수주 애로 종합 해소
 - 유망 수출품목 발굴,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시책 일괄 맞춤형 지원
 -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발굴, 탄소펀드 투자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 진출 활성화
-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
 -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및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ODA 자금 등을 활용한 개도국 진출
 - M&A 펀드 조성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금융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진 녹색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의 M&A촉진
 - * 해외 녹색기술 보유기업 M&A서 컨설팅 지원 등
- 녹색산업분야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 LED 등 시장성장단계 분야 기업중심, CO2 포집·저장 등 잠재력이 큰 분야는 기술중심 투자유치 추진
 - 조세감면, 입지·현금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녹색산업 유치에 적합하도록 개편

② 주요지표 및 핵심사업

- ◆ 녹색산업 구조전환 및 녹색혁신을 통해 '20년까지 제조업 에너지 효율성 80% 향상,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45%로 확대
- ◆ 도시광업 육성, 친환경제품·탄소섬유 수출동력화, 녹색 중소기업 육성 등 역점 추진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에너지원단위(ton/천\$, '00년 불변PPP)	0.193	0.154 (OECD 평균수준)
▪ 자원순환율(%)	17.0	17.6
▪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25	35
▪ 녹색 중소기업(개)	1,000	2,000

* 자원순환율=재활용량/국내총물질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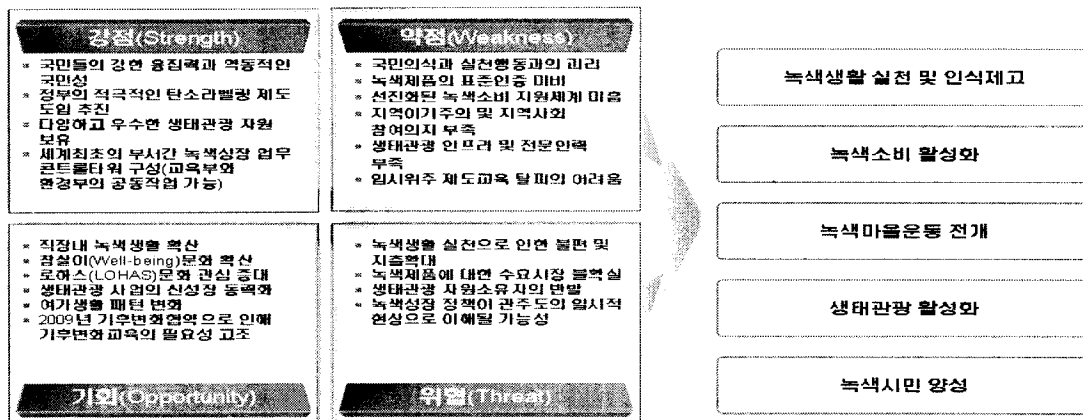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도시광업 활성화			
▪ 주력산업 녹색혁신			
▪ 녹색 클러스터 조성			
▪ 그린 산업단지 구축(시범단지 5개)			
▪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확산			

①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녹색소비, 환경조성을 통한 녹색생활 운동 확산

-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소비 확산 등 생활에서의 녹색운동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추진 중
 - 환경규제 강화 및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확산 추세
 - * 미국 '에코맘', 영국 '에코드라이빙'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
 - * 영국 테스코社, '08년부터 20여개 자체 브랜드제품에 '탄소발자국' 표시
 - 친환경 생태도시가 확산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
- 국내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 노력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해 녹색소비·생산문화 확산, 녹색생활 실천 교육·홍보 등 기본 방향 제시
 - *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서약 등 실천 캠페인 전개(환경부)
 - 녹색생활 혁명의 장이 될 수 있는 녹색마을 추진 등

추진방향 : 인프라 향상 및 녹색생활·소비 보편화



② 추진전략

1 녹색생활 실천 및 인식제고

- 생활 전반의 변화와 실천 유도를 위한 녹색 생활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소비생활, 문화생활, 주거환경 등 의식주에 걸쳐 전반적인 생활변화와 실천 유도 캠페인 추진
 - * 걷기·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운동,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에너지절약 3·3·3 따라잡기 등
 - 지역사회 및 NGO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마케팅 전개
 - * 저탄소형 생활혁명 시민실천 약속운동, 에코 리빙 운동 등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가이드, 실행방안 및 효과 제시 방안 등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보급, 탄소중립프로그램, 온실가스 줄이기 등 실천방안 제시
 - 녹색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및 실천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녹색생활(평가) 지표 개발
- 녹색생활 실천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녹색생활 실천 네트워크 확대 및 기능강화
 - * 그린 스타트 운동, 녹색생활 실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친환경적 생활습관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녹색생활의 시스템화 달성
 - * 탄소포인트제, 탄소캐쉬백 제도, 에코 백(Eco bag) 등 운영 확대

- 공공·산업·국민 등 경제주체별 녹색소비 생활문화 확산
 - 공공 부문은 친환경상품 구매 뿐 아니라 사용과 폐기까지 고려한 녹색구매제도 도입
 - * 녹색기관운영(Greening of organizations) 제도 등
 - 산업 부문은 녹색구매를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및 확대 추진(현 100여 개 사 참여)
 - 일반 국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소비 국민운동 추진
 - * 에코패밀리, 그린코디, 전국녹색살림 네트워크 등

- 저탄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녹색소비생활 지원 방안 추진
 - 저탄소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저탄소 환경마크 제품 확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확대 등 탄소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 * 저탄소환경마크제품 확대 : 현 1,500개사 6천종 → '13년 2,000개사 1만종
 - 친환경상품 매장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그린유통망 구축
 - * 친환경상품 매장, 녹색생활지원센터, 체험학습장(Eco-life Plaza) 등
 -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제도) 확대
 - * 제도 시행('09.2), 저탄소상품 인증기준 제정('10), 12년까지 저탄소 인증 상품 500개 품목으로 확대

- 녹색소비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제협력 증진
 - 경제주체별 녹색소비 저해요소 진단·개선하고, 보조금·세금 감면 등 녹색소비 촉진 인센티브제 개발·시행
 - * 녹색제품과 관련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감시강화
 - 지속가능 소비·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 Production) 국가이행계획 수립 및 공공 녹색구매제 수범사례 해외전파 등 국제협력 증진

- 녹색마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행정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녹색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 모범 사례 발굴 및 교육
 - * 녹색기관운영(Greening of organizations) 제도 등

- 4S가 실현되는 강소국의 기반마을 구축
 - Smart(첨단정보통신)와 Sustainability(친환경 및 지속성), Safe (안전)이 어우러진 Strong(녹색경쟁력) 마을·지역·국가 구축
 - * IT기술과 녹색마을을 접목한 U-마을 정보시스템 구축 등

- 마을 단위의 자발적 녹색성장 전략수립 유도
 - 녹색마을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자연·문화·역사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녹색마을 목표와 비전 설정 및 전략 수립
 - *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자원 자립형 마을 조성 등 지역별 특성 고려

- 녹색마을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녹색마을 구현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과 지속적 추진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과 연계
 - 기존 녹색마을 중 모범사례를 선정, 거점마을 구축 및 확산
 - * 녹색마을에서 녹색도시, 그리고 녹색국가로 연계 확산
 - 우수 녹색마을 추진 지역 경진대회 등 녹색마을 홍보 추진

4**생태관광 활성화**

- 한국 생태관광 우수자원 발굴 및 관광사업을 통한 세계화
 - 생태관광지 지속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관리
 - 한국적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
 -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실현 등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
 - 녹색기술 및 녹색디자인 보급 및 활용 촉진
 - * 생태건축, 친환경에너지사용, 전통경관의 확보 등
 - 탄소 무배출 생태관광지 확보를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확립
 - 친환경적 생태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문화생태탐방로 구축

- 저탄소, 친환경기술이 결합된 생태관광상품 개발
 - 슬로시티와 결합된 체류형 생태관광상품 개발
 - 건강, 고령화, 문화, 스포츠 등과 결합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 * 에코-힐링 빌리지 클러스터, 치유의 숲 조성 등 추진
 - 생태관광 국내외 수요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 * 생태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등

- 생태관광 및 전 관광부문의 녹색성장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생태관광지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지속가능관광인증제도 개발, 생태관광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등

□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목표 정립 및 녹색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체계 분석
- 제도교육 및 비제도 교육을 통한 녹색교육 추진 전략 구축

□ 녹색시민 양성 전략구축 및 교육자료 개발

- 녹색성장교육의 내용 선정, 교육 접근 전략 및 방법론 정립
- 전 국민 녹색시민 양성 체계 구축
 - * 녹색성장 생애 교육, 제도·비제도권 교육 계획, 녹색시민 홈페이지 등

□ 제도·비제도 교육을 통한 녹색시민 양성

-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녹색성장 교육 계획 마련
 - * 초·중·고 대상 녹색성장교육, 교육대 및 사범대생, 현직교사 대상 녹색성장 교육
- 비제도 교육과정을 통한 녹색성장 교육계획 마련
 - * 과학관, 박물관, 연구기관, 자체 교육센터, 사회교육원 등을 통한 교육
 - * 지자체, NGO, 종교 및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캠페인 실시

□ 녹색성장교육 지원 및 아젠다 선도 방안 수립

- 녹색성장 참여 확대 및 교육 지원 방안 마련
 - * 우수 녹색성장교육 지도 사례 발굴, 녹색성장 우수 활동 선발, 녹색성장 교육 지원 웹사이트 개설 등
- 우수 녹색교육자료 보급 및 전파로 세계 녹색교육 선도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생활의 녹색혁명을 통해 '20년까지 녹색구매 규모 10조 달성, 녹색제품 개수를 3만개 확대
- ◆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녹색마을 구현, 한국형 명품 생태관광 구축, 녹색시민 양성 등 역점 추진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녹색구매 금액(조원)	3.5	10
▪ 녹색생활지원센터(개소)	3	20
▪ 녹색제품 확대 개수(천개)	12	30
▪ 지속가능관광 인증제 참여율(%)	-	3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녹색생활 지표 개발			
▪ 녹색생활실천 전 국민 캠페인			
▪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개발			
▪ 녹색마을 개념 정립 및 홍보			
▪ 녹색마을 구현 정책사업 발굴			
▪ 한국형 명품생태관광 조성			
▪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 녹색시민 양성 전략 및 교육 자료 개발			

제3장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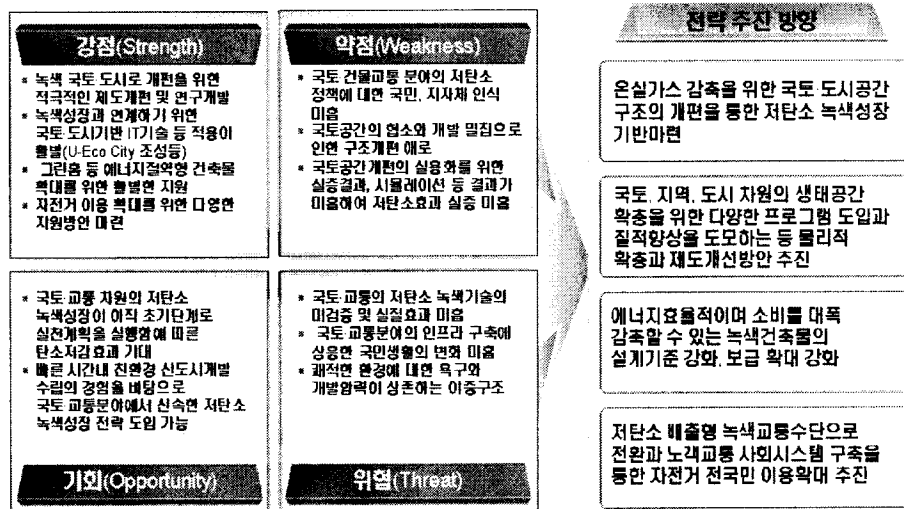
1 한반도 녹색국토 조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자연자원 보전, 녹색건물·교통 확대 등 탄소저감화 심화

- 자연자원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구조의 구축 필요
- 일본·영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저감형 지역·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침제공, 지원제도 등 적극적인 인프라구축 노력
 - 녹지·생태공간 확충, 녹색건축물 확대, 자전거중심의 녹색교통문화 정착 등으로 적극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중
- 우리나라는 건물·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3%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형 구조로 적극적인 탄소감축전략 시급
 - 생활 고급화, 대형 복합건축 증가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추세, 도시림 등 도심생태공간은 지속 감소
 - 녹색건축물, 자전거·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확대가 저탄소사회의 관건

추진방향 : 녹색국토 조성으로 탄소저감형 국토구조개편 촉진



② 추진전략

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 관리

□ 국토생태축 구축 및 관리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축 설정
 -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관리계획 마련
 - 3대 핵심축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서연안 핵심생태축 관리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광역 및 도시단위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한반도 핵심생태축과 연결되고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한 대권역단위의 광역생태축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 ※ 2009년 5대 광역권 광역생태축 기본계획 완료예정('07-'09)
-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우리 동네 생태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복원 및 녹색거점 확보

- 마루금, 해안선 등 3대 핵심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 새만금, 4대강, 하구, 강-산 결절점(node) 등 녹색거점 조성
 - ※ 결절점은 산림축과 하천축, 연안축 등 주요 생태축이 만나는 결절지점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기후적응 및 탄소흡수 등의 영향과 효과 분석

2

지속가능한 녹색국토관리체계 구축

-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 구축
 - 전략환경평가제도 본격화로 사전대응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 마련으로 생태용량 관리목표 추진
 - ※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로 긴급한 개발수요를 충족하면서 난개발 및 환경훼손 심화해소
 - 표준조망 지정과 자연경관 관리제도 활성화
 - ※ 표준조망을 100대 국토경관으로 육성하는 등 생태관광 거점으로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토관리체계로 개편
 -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도농 자원순환형 녹색지역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 도시 및 환경계획, 환경평가 관련 제도·규정 개선
 - 도시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지원·확대
 - ※ 강릉 녹색도시 시범사업, 에코시티,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그린시티 등의 지속적 확대 및 연계 강화
-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보와 안전한 녹색국토 구현
 - 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도시림, 농지, 수자원의 적극 보존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도시의 영형평가 및 적응계획 수립지원
 - 기후변화 취약성 강화를 위한 안전국토 구축 및 적응시스템 마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토·도시환경분야 DB 확보
 - 비오톱 지도, 생태자연도 등 환경관련 정보지도 구축 및 갱신과 토털 서비스 강화
 - 국토에너지기후지도, 기후변화취약성지도 작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기초DB 제공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도입

② 추진전략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공간의 확충

- 보호지역의 관리기반 구축
 - 전국 주요 생태 우수지역(습지, 해안사구, 무인도서 등)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보호지역 및 자연자산의 환경정보 체계화
 - 국내 보호지역 매년 5개씩 신규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습지 등 국제 보호지역도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
 - 자연자원 등 환경자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계정체계 마련
-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개선
 - 한반도 생물자원 보전·관리체계 구축 및 생물주권 기반 확립
 - * 국가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과 연계체계 구축
 - 외래종 위해성 평가 및 생태계 교란종 지정 관리 강화
 -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 생태공간의 질적 향상 및 효율화 증대
 - 복개하천 등 하천복원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생태문화공간 확대
 - * 생태습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으로 CO₂ 저감, 하천 복원으로 열섬효과 저감
 - 생물서식, 홍수저감, 수자원 확보 등 다기능 생태공간 조성 및 확대
 - 생태숲 조성운동, 학교공원화, 아파트숲 조성, 자투리땅 녹화운동, 벽면녹화 등 시민참여를 통해 생활권 생태공간 확대
 - * 우리 동네 생태네트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강한 우리동네 조성사업'으로 추진
 - 기존·신도시에서의 생태면적률 제도 확대로 도시 생태공간 증대
-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 활성화로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 *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반환금 지급시기 조정 등 현재 제도 개선

- 환경생태계획 제도화 및 시·군 공간환경계획 강화로 녹색개발 유도
- 국가 또는 도시차원에서 생태공간 확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등 추진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을 위한 국토관리체계 개편
 -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구조개편 구상
 - 핵심보전, 완충, 지속가능한 이용 권역으로 보호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 등의 관리체계 개편
 - 기존 낙후지역을 '자연자원 우수 발전지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자원특성을 고려 특성화된 통합지원체계 마련
 -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지정하고 생태관광 거점 등으로 육성하여 에코뮤지엄 등 생태문화 체험을 강화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모델 개발
 - 채석장, 간척지 및 염전, 생태계 훼손지역 등 주요 훼손지역을 새로운 녹색탐방거점으로 육성
 - 도시생태, 습지, DMZ, 연안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모델 (10개) 사업 추진
 - 천리길 국토생태탐방로 구축 : 생태, 건강, 역사문화의 연계·통합
 - '(가칭) 자연환경발전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추진
 -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구축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 '(가칭)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국내·외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사례 수집 및 배포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전략 및 가이드라인 등 마련·배포
 - 자연자원 관련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시행
 - 지자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2 추진전략

1

녹색교통체계 구축

- 저탄소배출형 도시구조 구축
 - 대중교통중심 고밀도 압축도시 조성(고속철도역 중심 도시개발 등)
 - 도심재생을 통한 기존 교통시설을 활용한 도시지속성 극대화
 - 보행우선 교통 환경 조성으로 도시 쾌적성 증진 및 녹색교통기반 구축
- 저탄소 배출형 교통수단 전환
 - 철도교통 활성화(철도고속화, 전철화, 해저터널 건설 등) 및 교통수단의 다양화
 - 서해안 뱃길복원 시범사업 추진 등 교통수단의 다양화 도모
 - 녹색물류인증제 등을 통해 녹색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첨단 녹색교통수단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조성, 도시개발과 연계한 보급 정책 등 저탄소 첨단 녹색교통수단 확대
- 녹색교통 사회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운전습관 (Eco-driving) 정착
 - 지능형 교통체계(U-transportation) 구축, 교통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교통 효율성 향상 및 교통혼잡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 지속가능 교통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활성화
- 탄소기반 교통사업 관리체계 구축
 - 녹색교통계정 구축으로 재정 지원 기반 마련

- 특정지역 통행료 부과제도인 혼잡통행료(Eco-pass) 도입방안
- 교통 탄소배출 부담금제 실시 및 교통탄소배출평가제 실시
- 청정개발체제 활성화 및 제3국 진출 지원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의 위상정립

- 자전거 관련법 정비 및 자전거 정책 종합 조정기능 구축
 - * 자전거 규격 및 범위, 자전거 통행방법, 자전거 시설 설치지침 등 정립
 - * 영국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상을 가진 '국가자전거정책위원회'에서 종합 조정, 프랑스에서는 자전거정책조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
- 자전거 관련 통계, 정보 구축 및 교육
- 국제적 수준의 자전거 산업 육성과 자전거 문화 운동 활성화
 - * 제조업보다는 IT기술을 이용한 공공자전거관리기술 등으로 특화 필요
 - * 자전거 도시연합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 시도

□ 생활 속에 자전거 정착

- 자전거-대중교통 인터모달리즘의 개념 정립 및 기본 구상
 - * 대중교통-자전거 환승시스템 구축 및 자전거 탑재 방안 수립
-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는 자전거 구상
 - * 우리나라 도시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자전거, Ubiquitous bike 도입 지원
- 생활속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마련
 - * 도시 출퇴근자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및 교량 등 확충
 - * 자전거 출퇴근시 '탄소포인트'를 적립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혜택 부여

□ 지역 알리기 / 행복나누기

- 자전거 도로 추가확보 등 전국단위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 * 기존 자전거 도로의 단절부분(missing link) 연계방안
 - * 폐국도·폐철도 부지 활용, 기존 도로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자전거 국토순례 프로그램 개발 등 자전거 관광 활성화
 - * 문화체험형, 분단체험형, 국토종단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그린투어리즘, 생태관광 등 새로운 개념의 관광과 연계

3**녹색 건축물 확대**

-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체계 개선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제 재검토를 통한 통합·개선
 - 녹색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 및 지침 등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매매 또는 거래시 녹색건축물 등급증서 등의 교부를 의무화
 -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 평가전문가 양성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협약 대응 녹색건축물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녹색 건축물 성능기반 설계기준 강화
 - 탄소저감형 녹색건축 요소기술개발 및 보급
 - * 단열, 창호, 자원 이용, 실내 환기 등 녹색건축물 필수 기술개발 지원 및 신기술·신공법 평가 및 시범화 사업 추진
 - 패시브하우스, 제로카본홈·빌딩 등 기술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
 - * 탄소저감형 녹색건축물 및 생태주거단지 시범사업 확대 추진

- 건물용도별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 수립
 - 그린홈 모델 개발 및 보급 확대사업 실시
 -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자원절약, 생태공간 조성 등 공공건물의 녹색청사화 구축사업과 그린스쿨 및 그린캠퍼스 구축사업 실시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녹색 Retrofit 지원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 그린 홈 보급 사업 실시

4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연안·해양 관리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물이용의 안정성, 형평성 향상 및 연안 해양의 보전과 관리

- 국민과 자연에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
 - 수요관리를 통한 건전한 물이용 체계 강화 및 하천유량 복원을 통한 하천 생태계·수질보전
 - 이상가뭄대비 위기 대처능력 향상 및 지하수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
- 홍수에 안전한 기반 구축을 통한 홍수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 강화
- 수자원 정보고도화 및 기술선진화
 - 수자원정보화 및 국가 물 안보 확보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 해양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 사전예방적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및 국제간 협력 강화

추진방향 : 경제발전, 안전한 국토, 물 환경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연안·해양 관리

<p>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참여의식 증가 ▪ 수자원정보의 선진화 ▪ 수자원 및 연안·해양관리 체계의 시스템화 및 컴퓨터 기술의 발달 	<p>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한 수자원량에서 이용하는 높은 취수율 ▪ 수자원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 	<p>전략 추진 방향</p> <p>지역별 수요대비 물 부족 비율 및 홍수 피해액 저감</p> <p>수자원연구 조사기술의 세계 최고화</p> <p>지속가능한 통합적 연안·해양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확대</p> <p>연안·해양 생태계의 자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국제적 협력</p>
<p>▪ 수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증대 및 다양화</p> <p>▪ 연안·해양 생태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중요성 증가</p>	<p>▪ 수자원 여건의 급변으로 인한 피해</p> <p>▪ 하류 용수공급능력 변화</p> <p>▪ 유류오염 및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한 연안·해양 생태계 위협</p>	
<p>기회(Opportunity)</p>	<p>위협 (Threat)</p>	

② 추진전략

1

통합적 수자원관리 및 이용체계의 효율화

- 물수급 예측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보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보완 및 기초자료 강화를 통한 정확한 물수급 예측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제도화
 - 공급 가능량, 용도별 이용량, 재이용량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기관의 기초통계 조사기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물관련 기초통계자료 관리 강화
-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 수립
 - 물수요관리 10개년('07~'16) 국가종합계획 수립 및 확대 추진하여 용수절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현재 환경부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
 - 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및 물절약형 용수관리체계정착, 물 재활용확대,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해 물 사용량은 줄이고 이용효율은 높이는 정책 확대
- 수자원 개발 및 공급제도의 개선
 - 용수의 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 평가와 확보
 - 유역별 하천 및 댐 용수의 합리적 평가를 통해 소멸된 수리권 또는 수요처에 기 배분된 수량을 평가
 - 하천 상·하류의 용도별 수요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댐용수의 용도별 배분량과 적정성을 판단, 재분배 실시
 - 농업용수에 배분된 용수를 타 용도로 전환하여 적정 물 값 산정 및 부담주체에 대한 검토 실시

□ 통합적 수자원 관리 및 용수능력 극대화 방안 제시

- 지표수·지하수 수자원 통합관리 모델(SWAT-K)를 적용해 국가 수자원 계획 및 평가
- 믿을 수 있는 용수공급량 분포도 제시를 통한 자연유출량 자료 제공
- 강수예측정보의 예보정확도를 제고, 장·단기 댐군 연계운영 모형기술 적용
- 수질예측 기술 및 Web/GIS을 이용한 실시간 물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2 안전한 음용수 공급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지속적인 상수원 수질관리 및 감시를 통한 정수시설 개선과 철저한 급·배수 관망관리 및 운영관리 전문화로 수돗물 품질 향상
- 수돗물 수질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질 이상시 초과내용에 따른 시민공지 및 시설개선대책 수립
- 농어촌 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수장과 관로 등 상수도시설 신·증설 및 전국 지자체별 수도관 개량을 통한 위생관리체계 강화
-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수도 사업의 경영관리 개선
- 공급위주의 물관리 시책에서 탈피한 수요관리 강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물부족 사전 예방
- 업종과 수용가 분포도를 감안한 누진체계 실현,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적용한 합리적 물가격체계 마련

□ 상수원 확보 및 대체수원 개발

- 강변여과수에 대해 별도의 강변여과수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체수원으로 개발
- 대규모 댐의 신규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식수용 저수지 개발
- 지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노출이 적은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폐공의 방치 문제점 제거
- 대수층 심도가 깊고 대수층 입도가 양호한 모래 및 자갈, 전석 등으로 구성되어 지하수개발 조건이 양호한 강원도 고성지역 지하댐 개발 검토

□ 국가 유량측정망 구축

- 전국 모든 유량측정 대상 지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한 국가유량측정망 구축
- 유량측정, 홍수예보, 수량관리 등을 위한 수위관측소 확대
- 지자체 수위, 우량 등 수문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WINS)과 연계하여 제공
- 남북공유하천 수자원협력 추진
 -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계획 추진
 - 남북 교류사업 지원과 환경보전을 위한 수자원 공동조사 사업 추진

□ 원격자동 유량측정을 이용한 수문조사 자동화

-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활용한 원격자동유량 측정 시설(Horizontal-ADCP, Vertical_ADCP, Rotater-ADCP) 등의 확대 설치
- 초음파, 자동 유량측정 시설 등의 확대 설치로 수문조사 자동화율 향상

□ 물관리 통합자료 확대 및 기능개선

-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물관리정보 체계화 및 공동 활용 자료를 이용한 공통 모듈프로그램 개발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공동활용자료를 확대 및 시스템의 개선
-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DB 확충 등 시스템 유지보수 실시

② 추진전략

1 해양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 해양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적 관리
 - 해양환경관련 법을 정비하여 해양오염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해양환경 개선
 - 축산폐수, 하수오니 등의 해양 투기량을 금지하는 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를 매년 감축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
 -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량 감축률을 성과지표로 평가
- 민간 참여형 종합 해양측정 및 감시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측정항목의 확대와 측정 빈도 확대 등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강화로 체계적인 해양환경측정 도모
 - 해경 및 민간인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 저감 추진
 - 동아시아해 환경관리협력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입증된 해양환경관리기술의 해외해양환경시장의 진출모색
 - 국제공동 긴급계획 수립, 방제선박 지원, 방제장비의 공동 활용, 긴급 수송 및 통관체계, 방제기술 이전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상호협력을 위해 인접국간 협력체계 구축
 - 전지구적 해양환경평가(GMA)에 대비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

- 연안별 해양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다양한 자료 확보
 - 해양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표준화 기법 개발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획득된 생물시료들을 해양 생물 자원관에 보존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해 체계적 생태계 모니터링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해양생물다양성 연구, 연안습지기초조사 등 우리연안의 고유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사업 실시 및 보호대책 마련
 - 해양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대책 마련과 선박 밸러스트 수 처리기술개발을 통한 외래종과 유해생물종 관리
- 연안 해양생물종에 대한 정보화 추진
 - 해양생물의 생태정보명세 리스트 작성 및 유전정보의 GIS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들의 생태지리학적 명세목록 정보 작성을 통한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추진
 - 해양생물 다양성 전문가 육성 및 활용 추진
- 해양생물다양성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 유용 해양생물자원 확보 등 체계적 해양생물자원 관리
 -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주제별 국제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전문가들의 국제교류 활성화

- 다자간 지역기구에 의한 관리체계로의 전환 및 친환경 제도 개편을 통한 발전된 수준의 어업질서 정착
 - 주요 연안국과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 약정 체결 확대를 통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어선 입어국 확대 및 생산량 증대 도모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전업지원,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중심으로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강화
 - 어업 전분야에 걸쳐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인증서 획득을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

- 수산자원의 회복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세계적으로 자원이 급감하는 수역인 한반도 주변어장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안정적 어업생산량 유지
 - 바다목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초어장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어종에 대한 예방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육상 읍서버 제도 정착 및 장기적 승선읍서버 제도 운영

- 위생관리 개선과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을 통한 건강한 복지어촌 형성
 -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홍보강화로 수산식품의 웰빙 이미지 제고 및 수산물 생산 이력제 도입을 통한 양식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확대 적용
 - 수산물 안전성 확대 조사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 향상
 - 어촌인구 유입을 위한 어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 공간 조성 등 다기능 종합어항 집중 개발
 -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확보로 불법 초과·밀식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실시 및 연안어장의 생태환경회복 등 친환경적 양식 추진

4.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2013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모델 구축
- ◇ 2015년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완료
- ◇ 2020년 그린홈 200만호 보급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녹색거점 개소(개소)	5	20
▪ 1인당 녹지율 면적(m ²)	5	10
▪ 보호지역 면적추이(만ha)	3	10
▪ 그린홈 보급계획(만호)	50	200
▪ 대중교통분담율 (%)	30	40
▪ 자전거 교통분담율(%)	5	1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한반도 생태축 구축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모델 구축			
▪ 친환경제로에너지 도시개발			
▪ 국토도시 생태공간조성			
▪ 녹색건축물의 등급표시제 시행			
▪ 그린스쿨, 녹색청사화 사업			
▪ 교통체계 선진화			
▪ 보행·자전거 교통기반구축			

제4장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1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인구구조 변동, 가족 구성 및 기능의 변화, 경제사회 양극화 등 사회변화 가속화

- 경기침체, 실업증가는 빈곤률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0년도 예산기준, 1차 사회안전망 예산만 2.2%(2009년 추경예산 대비)증가, 2·3차 사회안전망 예산은 각각 2.4%와 0.8% 감소
-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증대
 - 우리나라 인구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노령인구 2018년 14%, 2026년 20%로 증가 예상
-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가정 급증으로 사회와 가족 내 문제 증대
 - 혼인감소와 이혼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가족기능 약화
- 여성, 도시빈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도·농간, 도시 간 공간적 불평등 심화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책임 증대
- 산업구조, 노동구조,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
 - 실업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이 증가

추진방향

: 인구변동,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사회복지 체계 구축

강점(Strength)	약점(Strength)	전략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체계 도입 ▪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 고급 의료서비스 능력 ▪ 높은 국민 교육 수준 ▪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세계 최저 ▪ 고령인구 비율 급증 ▪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 사회보험 서비스 및 재정 안정성 미흡 ▪ 복지전달체계 미흡 	<p>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수요 대응 서비스산업 발전 ▪ 외국인 노동력 유입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에 따른 사회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전망 ▪ 고령인구 비율 급증 ▪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사회적 긴장 ▪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 ▪ 가정의 기능 약화 	<p>미래인적자원 지원 및 안전시스템 구축</p>
<p>기회(Opportunity)</p>	<p>위협 (Threat)</p>	<p>평생능력개발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확충</p>
		<p>친노령환경 조성 및 취약가족지원을 통한 사회통합</p>

2 추진전략

1 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추진('08.9.19대책)
 - * 향후 10년간('09~'18)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장기전세 10만호, 10년임대 20만호) 공급
-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 * '08년부터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정('08.9.19대책)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도심 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 * '08년 시흥능곡지구 시범사업 결과, 차상위 이하 가구의 입주율이 18.7%로 전체 평균(9.4%)의 2배 수준으로 향상
 -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자금 저리 융자
 - * '08년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4.2조원(15.9만 세대) 지원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분양전환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 '08.3 임대주택법 개정
- 저소득층 및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 노인 편의시설 및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 임대주택 공급
 - *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주거안정법('08.8.발의)」 제정 추진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편의시설 무상 설치, 운영
-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 지원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원룸형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 지원

- * 광열비가 동절기 저소득층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노인복지시설 등에 에너지 보조금 지원

2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및 안전시스템 마련

□ 가정과 직장 양립 환경 조성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 *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출산·육아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 확충
 - * 여성직업훈련·취업지원의 중심기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운영, '09년도 50개소에서 '12년도 100개소로 확대하고 노동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일센터 지원('09년도 14억원 국고지원)
-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 청년여성, 중·장년층여성에게 각각 특화된 취업서비스 및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
- 임신, 출산, 양육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여성·아동 환경기반조성

□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 여성·아동 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범부처간 추진체계 구축, 시행
 - * 사전예방강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방위적 종합대책의 수립. 시행을 통한 범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 '범부처 대책 추진단'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이행
- 지역의 여성·아동 안전점검지표 마련 및 지자체 여성안전지역인증제 도입
 - * 지역별 시간대별 여성의 안전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위험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 ※ 2008.5.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9. 3. 「여성안전증진방안」
- 폭력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및 ONE-STOP지원센터 추가설치
- 국가안전관리체계내에 성별관점 보완 및 인증

□ 양성평등한 참여와 관점을 각종 정책에 반영

- 복지, 교육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
-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 * 여성부에서 '10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
- 사회 각분야 영역별로 달성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여성 관련 정책을 점검·재조정
 - * 성평등지표(GEI, Gender Equality Index)를 통해 현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수치를 제시

□ 여성인력의 고급화

- 관리직 여성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충원 정책과 여성관리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대기업·공기업에 고용 평등 및 기회 균일화 정책 실시
- 이공계 여성인력 육성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인력개발 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3**평생 직업능력개발**

※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2007)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 (입직기) 청년층 :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
 - * 학교교육의 산업현장성 제고 및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력 양성
- (경제활동기) 재직자는 일터에서 평생학습, 실업자는 재도약 기회 제공
 - * 재직자 : 기업의 학습조직화, 성장산업 핵심근로자 육성, 근로자 자율능력개발 지원
 - * 실업자 : 지역수요 밀착형 실업자 훈련 및 종합적 취업 서비스 제공
- (제2의 근로생애) 고령자 : 활동적 고령화
 -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등 계속근로 지원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지원
 - * 비정규직은 특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지원
 - 영세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화/경영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 촉진
 - * 출산·육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 확충 및 고학력여성 취업을 제고
- 장애인 고용확대 :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 및 맞춤형 훈련서비스 개발

시장 친화적 직업능력 전달체계 혁신

-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지원구조로 개편
- 직업교육 공급기관의 다양화 및 질 제고
 - * 대학의 근로자 계속교육 역할 강화, 민간훈련기관은 성과중심 경쟁체제 조성, 공공훈련기관은 시장실패 부문 훈련에 집중

능력 중심 제도·문화 확산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도록 자격관리 시스템 개편
- 우수 기능인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성장하는 제도·문화 구축
- 사람 중심 경영문화와 '일과 학습', '능력과 보상' 연계, 고성능 작업장 혁신모델 확산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 범정부적 정책 협의·조정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차원으로 직업능력개발정책을 분권화
-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와 사업 수행 강화

4**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보완판) 새로마지플랜 2010 (2008)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 국민연금 내실화 및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 등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 특수직연금 제도개선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 강화, 기초노령연금 시행
 - * 2010년 국민 9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전체인구의 11%수준)
 - 40대 이상 비중은 2010년 46%, 2020년 55% 수준
 - * 노인인구 1인당 생산가능인구(15~64세): '07) 7.0명 → '20) 4.6명 → '50) 1.4명; 실질 생산가능인구(25~49세): '07) 4.3명 → '20) 2.3명 → '50) 0.65명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노인질환 종합지원 등 노후건강관리기반 조성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공적 노인요양보험체계 확립 및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정년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지원 등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 * 민간분야에서 노인에게 유리한 전략직종을 개발하고, 정부지원 일자리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중심으로 내실화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 여건 조성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 및 저소득 고령자 주택공급
 - *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안전한 주거공간의 최저기준 및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을 도입한 주택설계지침 마련, 주택개조지원 시스템 구축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 *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기준 마련,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조성 등
- 고령친화산업 육성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06.12.28) '10년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5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망 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필수적인 사회통합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의 원리 구현
 - 교육·훈련서비스 시스템 구축
 - * 이민자의 연령, 성, 사회문화적 배경, 이민 목적, 언어습득능력 등 이민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언어 및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여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의료·건강서비스의 제공
 - *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향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통합가족서비스 제공
 - 주거, 직업훈련, 고용 분야 등에서 통합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
 - *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하거나 이와 연계된 법적지원, 행정적 지원서비스 등의 자원연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
 - 차별철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혹은 홍보활동
 - * 고용주·일반국민·이민자들 사이의 공동체의 인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
 - *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기업·지역사회 지에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지방수준에서 시도되는 문화 간 협력 작업을 촉진
-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 가족상담,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해 개별가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역량강화를 강화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여,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②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③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④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사업
 - 정서적 지원,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역량강화를 위해 상담, 교육, 문화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
-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조손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부모들의 부모교육, 손자녀 양육상담, 학습문제 등의 사업을 진행

-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전환
 - 비료·농약 과다 사용, 집단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전환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위해요소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영농규모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화, 경영위험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 경영위험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외소득원 발굴
 -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이용·소유제 병행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농촌형 사회안전망과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활성화
 - 도·농교류센터를 통해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전원주택 및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한 인력과 자본 유치
 - 소도읍을 거점으로 거점개발형 지역개발 전략 추진 및 기초생활여건 획기적 개선
- 산촌 개발·보전을 통한 개발역량 강화
 - 지역의 특산 임산물의 가공·판매와 자연,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산촌 자원을 활용한 산촌 녹색관광 도입 등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외소득 증대
 - 산촌진흥지역을 거점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개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
- 임업 기술 보급체계 개선 및 임업인 소득증대
 - 임업 기술지도 체계의 개편 및 전문성 강화
 - 소득품목 개발, 복합경영 등에 필요한 임업기술지도 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이 산림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인구구조 변동을 고려한 사회통합시스템 구축
- ◇ 서민 주거 복지 강화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임대주택 보급률(%)	70	80
▪ 여성 취업률(%)	54	65%
▪ 아동·여성의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율(%)	30	50%
▪ 노령친화산업 시장(조원)	30	70
▪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40	5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임대주택 보급			
▪ 아동·여성의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 평생직업능력개발			
▪ 노후생활 보장시스템			
▪ 노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취약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강화			

2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들 증대, 건강증진정책의
수요 증대**

- 질 높은 인적자본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건강은 이의 필수요소임
 - 이미 세계 각국은 건강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OECD는 건강개선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체제를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영양·술·담배규제와 프로그램 권고(Health Project, '04)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만성질환자의 인구집단 등장을 예고
 - 가계의 의료비 부담 증가, 공공의료비 정부부담증가로 지속가능성 위협
-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 소득하락으로 가정해체, 가족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 80년대 이후 환경오염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시장의 불균형으로 국민 기초 건강권이 위협에 처해있음
 -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질환이 크게 증가, 환경 유해물질 및 환경관련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추진방향

: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건강투자시스템 재구축

강점(Strength)	약점(Strength)	전략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련 예산의 증가 ▪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전문지식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노동인구 감소 ▪ 고비용-저효율 구조 ▪ 인력의 부족 및 복지 전달체계 미흡 ▪ 위기상황(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p>평생복지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에 국가적 투자 확대 ▪ 고령화추세로 전세계적으로 노인복지 수요 증가 ▪ 보건·환경패러다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정부담 ▪ 새로운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 준비기간 부족 		<p>건강생활실천 및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p>
<p>기회(Opportunity)</p>	<p>위협 (Threat)</p>		<p>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건강과 환경 연계사업</p> <p>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p>

1**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복지체제 구축**

- 지속가능하면서 도움이 되는 연금체제 구축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연계방안 마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강화
 - *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효율화
 -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 구조 개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등
- 필수 의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 *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불임치료 지원확대,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등
 - 국민건강안전망 효율화
 - *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 확대, 국가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 체감형 복지서비스 및 기초안전망 구현
 -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역서비스 자원 발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활장려금 확대 등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08년 말)
 -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구축

2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필수화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의 필수화

-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건강보험 혜택 강화로 건강검진을 필수화하고 조기검진율을 높여 암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 대상자는 만40·66세, 검진항목은 1차 건강진단은 혈액·소변검사, 구강검진 암검진 등이 있고, 2차 건강진단 : 1차진단결과상담, 생활습관검사 등이 있음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실천방안 마련

○ 금연

- *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금연상담전화 정착, 흡연 규제 강화

○ 절주

- *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정책의 강화

□ 생활체육활동 정착

○ 생활체육진흥계획(2010-2012)을 통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마련

○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업 전개

- * 객관적 건강지표를 근거로 함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개발

□ 보건교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개인의 건강관리책임 강화

○ 건강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자기건강관리기술을 소개

○ 건강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분류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유도

○ 개개인의 건강증진행동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 *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보상기제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이용쿠폰 등을 제공

□ 지자체가 지역주민 건강에 투자하도록 유도

- 시군구 건강통계조사 및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도입('09. 4), 건강도시 발전포럼 운영, 건강친화형 지자체 선정제도 도입('09. 11)

3

건강과 환경 연계사업 추진

□ 종합적인 환경보건 법, 제도, 정책적 기반 구축

- 국가차원에서 환경과 보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
 - * 유럽지역에서는 1989년부터 보건 및 환경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유럽헌장”을 채택하고 국가별환경보건행동계획(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NEHAP)을 마련
- 환경, 보건 관련 법 제정
 - * 2007년 10월에 ‘환경보건법’을 국회 제출
- 환경보건정책에 보건정책, 교육정책, 여성과 노인정책 등 유관부처간의 정책적 통합성 모색

□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위험요인에 대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 * 실내공기, 주거, 소음, 토질오염, 음용수, 식품, 유해화학물질 등
-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규명
 - * 2006년 2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체계적인 환경성질환 연구를 주도하고 폐광·산업단지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실시

□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방안 마련

- 중장기 계획 마련
 - * 환경보건정책과의 신설('04.3월), 환경보건정책 중장기 로드맵이자 실천계획인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15)’ 확정
-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대책 강화
 - * 제작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운행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먼지 관리대책,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 환경에 대해 민감한 어린이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 * 아토피피부염, 천식, 소아발달장애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등 몇 개 병원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 정책에 반영
- 건강영향평가제도(Health Impact Assessment, HIA)의 국내 도입기반을 마련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인구를 OECD수준으로 감소시켜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항생물질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수준을 국제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 마련
- 위험인구 저감을 위한 분야별 적정 환경기준 항목 및 기준안 마련,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요인별 위험인구 감소전략 개발

□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증가, 폭염 등 건강 적응대책 추진
 - * 말라리아 등 매개체 전염병 집중관리, 건강예보제 시행('09 폭염, 천식예보제 등),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환경오염에 기인한 유해영향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수립
-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저소득 집단, 폐광 등 오염우심지역 등 취약군에 대한 대책 마련
- 혈중 중금속농도조사, 다이옥신·PCBs 등 잔류성 유기화합물 농도조사 등을 국민건강 조사감시체계에 포함시켜 환경건강 실태조사
-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사전예방 중심의 국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국민보건교육시스템 확립
 - 지역기금 및 건강증진재단 설립,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도입,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생활습관병(당뇨병, 암, 스트레스)의 사전 예방 대책 수립
 - * 당뇨병유병률 감소, 비만예방, 건강검진, 건강지도 사업 충실, 중증화 및 합병증 예방, 암으로 인한 사망률 통제,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 치료 미흡시 중증 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만성 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09. 시범사업)
- 흡연·음주·스트레스 등 경제위기로 악화될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
 - 담뭍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 공중시설의 모든 실내·실외를 금연구역 화하고, 학교·병원 등의 음주·주류 판매 금지(국민건강증진법개정)
 -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자살 예방 등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검진 확대
- 식품안전 관리강화(생산, 검사, 수입 모든 단계의 안전 위해요소 제거)
 - (기준) 멜라민 등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확대
 - * 08년 현재 1,713개 → '09년 1,800개 → '10년 1,882개로 확대(EU수준)
 - (생산) 안전한 식품 생산업소에 대한 안전인증 확대
 - * '08년 451개소(전체식품량의 30%수준) → '09년 1,000개소 → '12년 4천개소(95%)
 - (검사) 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매 3년마다 지정갱신, 재평가
 - (수입) 해외위탁생산(OEM)식품 품질검사 의무화 및 현지 검사기관 설립
 - * '09년 상반기 중 중국청도에 현지 공인식품검사 기관 설립 진행

□ 신종전염병 위험 관리

- 중증 신종 전염병 격리병상 확충
-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백신 및 치료제 지원
- 신·변종 전염병 출현 조기 탐지 기반 사업
-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5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영유아, 학생,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실시
 - *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40세 생애전환기에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 등을 하거나, 66세 생애전환기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 선별검사 추가)
- 취약가족 건강관리(조손, 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 *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방문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 'New Health Plan 2010'의 2007년의 실천전략 중 하나로 시행되었으며 건강문제 스크리닝, 결과에 따른 상담과 1차 간호, 건강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과 지지 등의 직접 서비스와 의뢰·연계 등의 간접 서비스 그리고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체계의 운영
 -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건강진단프로그램 개발·보급
- 수요자별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 * 각 건강관리대상자별로 치료일정 안내, 치료받지 않는 경우 주의 환기, 합병증 정보 등의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지역 구분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 실시

-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모형 도입
 -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하여, 주요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자 등) 등록관리
 - 고령자, 장애인 등 만성질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 실시
 - * 관할 읍면동 지역 내 취약계층 전 가족을 대상으로 스크리닝테스트 후 방문요구도와 관리대상 가구 방문수를 고려, 우선관리대상자를 선택하여 집중관리(집중관리군(Ⅰ), 정기관리군(Ⅱ), 자가관리군(Ⅲ)을 분류)
 - 보호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실시
- 보건소내 부서간 지역사회 연계
-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의 집단관리

③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평생복지체계 구축 및 지역별, 인구별 건강관리사업
- ◇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건, 건강증진사업 추진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건강보험관리운영의 효율화(%)	20	30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20	40
▪ 건강진단 범위 및 대상자 확대(%)	10	30
▪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보급률 (m ² /인)	4	5
▪ 환경성질환 감소율(%)	10	25
▪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보급률 (가구수/관리자1인)	400	30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지속가능한 연금체제 구축			
▪ 건강진단 범위 및 확대율			
▪ 환경성 질환연구체계 및 방안 마련			
▪ 기후변화취약계층 대응책 마련			
▪ 지역사회 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건강실천습관 프로그램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3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사회적 갈등 증대로 인한 지속불가능성의 대두

-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 이해관계와 가치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갈등이 빈발
 - 1990년대 이전에는 노사갈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환경,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
 - 한국의 주요갈등구조는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공공갈등으로 구분되며, OECD 회국내에서 사회갈등지수 4위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가치가 다원화되고,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민주화, 개방화로 인하여 시민의 참여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적 요구들이 기존의 정책과 갈등과 긴장을 일으킴
- 갈등을 창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회-제도적 역량 강화가 필요
 -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07.5.12 시행)을 제정
 - 사회갈등 지수를 10% 낮출 경우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7.1%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삼성경제연구소, 2009)

추진방향 : 갈등관리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전략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 시민의 적극참여의식 ▪ 다양한 시민단체 및 분야별 전문기구 증가 ▪ 갈등 해결 공감대 형성 ▪ 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방안의 부족 ▪ 정부주도의 갈등해결 ▪ 갈등 해결의 경험부족 ▪ 민관, 관내의 의견충돌 ▪ 경직된 공직사회 ▪ 추진 과정의 미숙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통한 갈등대응체계 구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갈등관리 전문화 및 인프라 구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공공개발 관련분야 갈등예방 법률 정비 및 확대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각 공간 스케일 단위에서의 갈등예방 및 해결체계 마련</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겨재위기로 다양한 갈등 증가 ▪ 갈등 해결의 긍정적 효과 입증 사례 ▪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해결을 위한 비용증가의 위험성 ▪ 갈등해결 지연 및 공동체 붕괴의 위험성 ▪ 불필요한 갈등 표면화로 사회적 긴장강화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 갈등관리기본법의 적용확대 및 구체화
 -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이 제정되어 있음
 -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7년 5월부터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시행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실효성 검증
 - 합의안의 법적인 구속력 여부를 결정
 -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
 - * 현재, 법률상으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기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까지 단계적으로 확산
 - 각 부처별로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 * 고위관료가 1명씩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갈등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 내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지역차원에서도 각 전문기구를 마련하여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 범정부차원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
 - *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운영
- ‘사회합의촉진기본법’을 제정
 - 거버넌스의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는 기제로 기능
-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확대
 - ‘09년도 11월 출범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임
 - *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통합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신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양극과 대책, 사회이념적 갈등 극복 방안, 지역 및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
 -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시행하거나 추진하는 등의 기능을 확대
 - *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2006년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음

2

갈등관리의 전문화 및 인프라 구축

-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갈등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정책연구
 -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실태,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지속적 조사·연구
 - *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칙으로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①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법령, 제도, 문화 등의 조사·연구, ②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③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④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⑤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 갈등해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갈등해결 매뉴얼 작성
 - *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갈등관리 지침서 개발, 현실적 적용을 위한 갈등관리프로세스 보급
 - 갈등관리관련 기관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의 마련
-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제고
 - 시민단체를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실천주체로 기능하도록 고려
 - *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과정 및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제도 마련
 - 민관부문에서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및 프로그램 마련
 - * 전문가과정 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각종 분야별 전문중재인제도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민간기관 및 활동 지원을 통한 하부인프라 강화
 -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 '05년도의 경우, 25개(광역시 9, 시군구 16개) 기관 36억원 지원
 - 대학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공공갈등관리'에 특화된 기구나 조직 설치
 -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갈등관리 소모임 또는 연구동아리 설치·운영을 지원
 - * 갈등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이론 및 사례 연구, 지역단위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자발적, 비공식적 학습·연구조직을 육성하여 갈등관리를 위한 하부인프라 강화
 - 갈등관리 박람회 개최
 - 갈등해소산업(conflict resolution industry)의 활성화

-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개선
 - '05년 1월 5개부처 10개 법률 개정안 제안
 - * 3차례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개선 정비방안 보고서 작성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절차 보완
 - * 댐건설기본계획 주민의견수렴
 - * 공유수면매립계획 등 주민의견수렴 강화
 - * 폐기물처리시설 임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기준 보완
 - 해상경계관련 갈등해소 및 관해수리권 개선
 - *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갈등예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 유수·저수에 대한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의 조화
 - 공유수면 매립제도 개선(사정변경에 의한 시정조치)
 - * 특별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 연안 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 연안육역과 해역의 범위 설정기준을 탄력적으로 보완
 -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용도구역 도입
 -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체제 구축
 -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시에 상호고려
 - *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계획간 연계의 유도
-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개선범위를 확대
 - 각 관계부처의 법·제도 갈등부문 검토 기능을 추가
- 공공개발 관련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의 정비
 - 공공개발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
 -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 정비확대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 공공기관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지원
 - 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프로세스지원, 갈등관리 관련 정책사례, 법·제도 등의 조사연구

③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갈등의 체계적 대응
- ◇ 갈등관리인프라 확충 및 전문화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갈등관리기본법의 적용범위 확대(%)	20	30
▪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운영실적(%)	15	30
▪ 갈등해결 매뉴얼 및 DB구축(%)	20	30
▪ 공공관리 부문 갈등 해소율(%)	15	25
▪ 갈등유발 가능성이 큰 법·제도 개선율(%)	10	2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갈등관리기본법의 적용범위 확대			
▪ 갈등관리기본법의 구체화			
▪ 갈등관리지원센터 운영			
▪ 갈등해방 및 해결 인력 육성			
▪ 갈등 유발 가능성 법·제도 개선			

제5장 전략의 추진기반 강화

1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인구 및 사회동태 변화, 세계화,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 필요성 심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
 - 세계 최저 출산율로 가장 빠른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 개방
 - 국가간 인적교류 증가와 두뇌 유출, 교육시장개방 압력 등
-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교육격차
 -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취약계층의 교육환경 악화, 교육격차 심화
-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 직업세계의 변화
 - 지식의 양과 변화 증가, 교육기간 장기화, 학교와 현장 불일치
- 가치관과 사회·문화의 변화
 - 다문화교육 및 정체성, 가치 다원주의, 가족 형태 다양화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패러다임의 조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전략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 투자 효율 ▪ 세계 최저수준 문맹률 ▪ 초고속인터넷 등 미래학습 기반보유 ▪ 높은 R&D 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 과도한 경쟁, 입시체계 ▪ 주입식 교육 체계 ▪ 다문화사회 대비 부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지식기반 경제 대응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세계 시민 육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의무교육을 완성하여 전국민의 기본자질과 직업능력 교육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교육여건 호전 기회 ▪ 대학입학 인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불가피 ▪ 첨단매체 활용도 증가 ▪ 다문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부담 과다 ▪ 교육시장 개방 압력 ▪ 창의력 중심 사회도래 ▪ 고학력 일자리 부족 ▪ 입직연령 지연, 조기퇴직으로 인적자원 낭비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2 추진전략

1

교육복지 확대

장학지원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맞춤형 국가장학지원 확충 등 장학금 재원 확대

교육격차 완화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 *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 구축
 - * 방과후 학교 활성화
-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학생 교육지원 확대
 - *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

학생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여건 개선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 학생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 추진
 - * 유아교육 기본정책 수립, 유아 교육비 지원체계 개편
- 영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지원체계 구축

평생학습 환경 마련

-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및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운영
 - *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 자녀양육 및 유아 교육의 공적 부담

- 취학전 아동의 잠재능력 발달 지원으로 국가적 인재양성 기초 마련
 - * 미국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한 가정당 1만달러 비용을 들인 효과가 20세 전후 3만 5천달러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
- 아동복지와 아동교육의 공적 부담을 확대
 - * 소득수준별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대상연령을 확대, 유치원 종일반 운영

□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 공교육 정상화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저감 및 학생 학습흥미도 제고
- 초중등 교육 12년 완전무상교육 실현
 - * 고등학교까지 초중등교육 12년 무상의무교육 추진
 -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복지체계를 구축, 학교가 지역사회의 종합학습센터 기능 수행
-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
 - *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육여건 개선,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 개발 등

□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및 특성화
 - * 우리나라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2%('06), 취학률은 67.8%로 고학력 공급과잉 지속, '05~'15년까지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매년 4만9천명, 10년간 약55만명 초과 공급 예상
-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 * 대학별 자율적 역량에 기반하여 특성화, 세계적 우수 대학 육성, 미래선도 분야 연구 개발 강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및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 유치

□ 연구자 중심의 환경과 여건 조성

-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마련
-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

□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 세계시장으로 취업영역을 확대하여 '12까지 5만 명 취업 확보
 - * 글로벌 직장체험으로 '12까지 해외 인턴쉽 3만 명 확보
 - * 해외자원봉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2만 명 확보

- 2020 과학기술 비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융합기술 시대를 향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초일류 국가건설 기반 확보
 - 첨단기술간 융합을 통해 현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 미래 사회적 수요대응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
 - 전지구적 당면과제인 신에너지·자원 확보, 인간의 수명연장, 질병 치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기술 발굴에 집중 투자
 -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적 확대
 - * 과학 및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인재확보를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양성정책 마련, 시행
 -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수립,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
- 기초·원천 연구 진흥
 - 융합 기술 등 신산업 창출 분야 대응 및 원천기술 확보
 - * 제조업의 서비스화, 디지털 문화 등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산업과 신기술 접목, 로봇 및 U-health 등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 확대 및 거대과학투자 내실화
- 국가 안위 관련 기술의 전략적 확보
 - 에너지, 자원, 식량, 국방, 우주 등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된 기술 확보
 - *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테러, 재해·재난 대응기술 확보에 투자 확대
-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개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활성화
 - R&D 자원배분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전환
 - 한국연구재단 설립 및 PM 제도 도입
- 과학문화의 생활화
 -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과학관 연계 강화
 - 기업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과학기술 봉사활동" 전개
 - 과학방송 확대
 - 초중고 수학·과학 교육과정 내실화

③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2015년 한반도 핵심생태축 구축 완료
- ◇ 2020년 그린홈 200만호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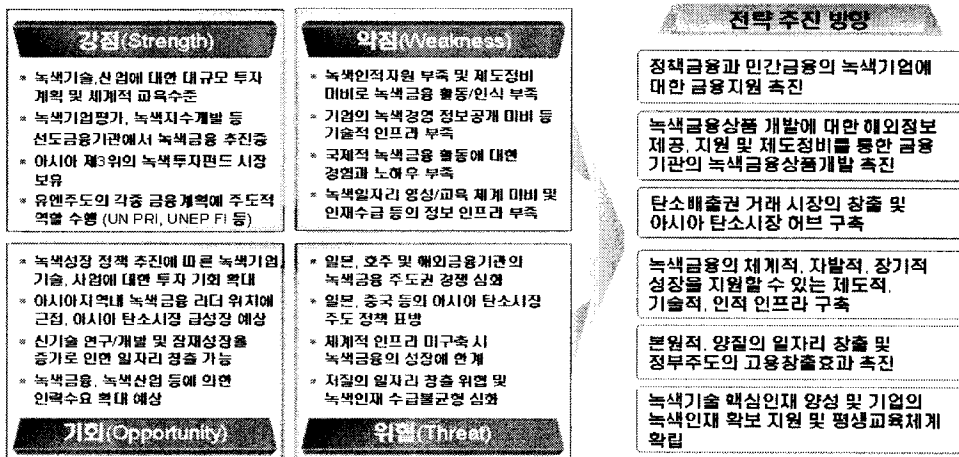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녹색거점 개소(개소)	5	20
▪ 1인당 녹지율 면적(m ²)	5	10
▪ 보호지역 면적추이(만ha)	3	10
▪ 그린홈 보급계획(만호)	50	200
▪ 대중교통분담율 (%)	30	40
▪ 자전거 교통분담율(%)	5	1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한반도 생태축 구축			
▪ 친환경제로에너지 도시개발			
▪ 국토도시 생태공간조성			
▪ 녹색건축물의 등급표시제 시행			
▪ 그린스쿨, 녹색청사화 사업			
▪ 교통체계 선진화			
▪ 보행·자전거 교통기반구축			

①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정부·민간이 협력, 녹색금융 및 녹색일자리 창출

-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하에 녹색금융 추진하며,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인재 부족에 대비
 - 정부의 지원과 금융기관의 영업전략으로서 녹색금융을 추진
 - * 주요 선진국은 녹색금융을 위한 세제지원, 대부자책임 등의 정책 추진
 -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및 녹색인재 부족에 대응
 - * 월드워치연구소는 녹색일자리 이끌 인재 부족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75% 감축시 '30년까지 260만개 녹색일자리 창출 예상
- 국내도 일부 녹색금융이 시작되고, 녹색일자리 추진되고 있으나, 인프라 미비 및 녹색인력이 부족한 상황
 - 녹색펀드, 녹색경영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인프라 미비로 활성화에 제약
 - * 녹색투자펀드에 대한 관심 부족, 녹색여신도 일부 은행에서 부분적 시행
 - 양질의 본원적 녹색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핵심인력 양성체계 미흡

추진방향 :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② 추진전략

1 녹색기술산업 투자 지원

- 녹색기술·기업,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녹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확대
 - 녹색기술·사업 및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출연규모, 금리혜택수준, 선순위지원 등을 확대
 -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녹색 내수사업 및 내수기업 지원 추진
 - * 수출입은행을 통한 녹색 수출기업 자금 지원 확대 및 탄소펀드 추진, 신용공여한도 특인 및 외국금융기관과의 연계투자 확대
 - 정부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 정책보증기관의 녹색 중소기업 및 녹색산업 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확대 및 보증기관의 녹색기업 선순위 지원 제도 마련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 수수료 인하 및 보증·대출 심사 시 녹색사업·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민간금융기관이 녹색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 출연 시 출연금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 및 보증규모 확대 추진
 - * 녹색기업 사채에 대한 P-CBO 발행 시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참여 등
 - 녹색산업 펀드의 제도화를 통해 녹색기업 및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금융지원 확대
 - 녹색산업펀드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출연 확대, 정책보증기관의 녹색펀드 보증지원 확대
 - 녹색산업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연기금의 녹색펀드 가입 시 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정부에 의한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기업 여신·투자확대 유도
 -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녹색기업 여신·투자에 대한 혜택 및 면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검사, 감독 및 평가 기준·규정 정비

- *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규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 * 친환경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상향 조정, 친환경 건축사업·친환경 자동차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등
- 증권시장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유도
- * 상장요건에 환경위험에 관한 사항을 첨가

2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

-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은행·보험·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이 복합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법·제도 정비**
 - * 은행법,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금융상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 녹색금융상품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비 및 인증제도 마련**
 - * 녹색금융상품의 개념, 범주, 평가기준 등이 부재
 - **녹색기업의 직접금융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 * 녹색기업 유가증권 발행 시 상장, 공시 관련 우대
 - 기존 금융상품에 녹색금융 연계 또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금융상품의 개발회사에 대해 평가·검사 시 인센티브 제공**
 - * 은행 : 친환경기업 대출용 예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출, 그린 모기지 등
 - * 보험 : 녹색증권보험,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 자전거전용보험, 친환경농산물손해보상보험, 운행거리비례자동차보험 등
 - * 금융투자 : 녹색펀드, 녹색지수 기초 ETF 및 파생결합증권 등
 - 녹색금융상품 보급 촉진을 위해 판매 금융기관, **녹색금융상품 가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 * 친환경주택에 대한 여신금리 우대, 녹색카드 활용 시 수수료 할인, 할인 수수료는 녹색사업지원재단에 기부
- 해외 녹색금융상품 관련 DB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해외 진출 금융회사 네트워크 활용한 **선진사례 수집, 상품별 국내 도입 적합성 검증시스템 구축 및 녹색금융상품정보 제공**
 - * 금융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도와 타당성 조사
- 녹색금융상품 관련 **위험관리수단, 투자자보호 기반 마련**

-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구조화채권, 신용파생상품 활용 기반 마련

- 녹색기업·산업 관련 민영 금융보증상품 확대
 - * 민영 금융보증전문회사의 영업방식·허용방안 검토 및 배출권거래 관련 이행보증보험 도입
 - * AIG는 2006년 보험중개회사인 Marsh사와 합작으로 CDM, JI-프로젝트에 참여자는 투자자에게 탄소배출권 이행을 보장

- 투자자보호 위해 투자·성과정보 시스템 구축, 적합성원칙 적용

3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 등 주요 법·제도에 환경요건 반영
 - * 대부자·수탁자 책무에 환경고려 의무화, 연기금 및 퇴직연금 등의 녹색투자 촉진(영국의 수정연금법), 녹색대출 보증 강화 등
- 기업 녹색경영 정보공개 촉진을 통한 금융기관의 정보활용 유도
 - * 프랑스, 미국 등은 회사법, 상장 및 기업공시 요건에 녹색경영정보 반영
- 녹색기업 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여신 및 투자대상 가이드 제공
 - * 골드만 삭스 등 선진금융기관들은 특정 산업내 녹색선도기업 또는 비녹색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금융활동을 위한 기업 녹색경영평가 수행
- 녹색펀드 촉진을 위한 금융투자업 육성 기반 마련
 - *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 연기금의 녹색펀드 투자 확대, 해외금융자본 유치 등

□ 기술적 인프라 구축

- 여신·투자기관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정보 DB 제공
 - * 환경관련 인허가, 규제준수, 자발적협약 등 각종 정보를 여신, 투자기관에 제공
- 녹색기업 분석평가(Rating) 체계 강화 및 녹색지수 개발 유도
 - * 세계 3대 녹색기업 평가기관(Rating Agency)으로는 미국의 Innovest, 영국의 EIRIS, 스위스의 SAM이 있음
 - * 우리나라는 '08년 대한상의 주관으로 기후변화경쟁력 지수를 개발하였음

□ 인적 인프라 구축

- 기존 금융인력 대상으로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녹색금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 UNEP FI는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여신평가, 기후변화투자 등에 대한 이터닝 교육 실시(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 녹색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녹색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 녹색금융제도 및 상품에 대한 공익광고, 각종 설명회 개최

□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방식 확정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 *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소(Korea Carbon Exchange) 설립
- 국제 협상,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 및 적용 대상 확대**
 - * 1단계(법적 기반 마련) → 2단계(시범 사업) → 3단계(배출권 거래제 도입)

□ 탄소 시장 활성화 추진

- 탄소 배출권 관련 제도 정비 및 탄소배출권 전문 거래기관 육성 및 파생 상품 개발
 - * 국내 탄소시장 창출 규모(조원) : 13년(0.5) → 30년(50) → 50년(100)
- 해외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개도국 CDM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 서비스 지원
 - * 해외 탄소 배출권 확보 규모(조원) : 13년(0.5) → 30년(250) → 50년(500)

□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 육성

- 주요 아시아 개도국에 우리의 거래 제도 및 운용 노하우 전수
- 우리 주도로 범아시아 지역을 통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및 탄소은행 설립 추진
 - * 범아시아 배출권거래소 거래 규모(천억달러) : 13년(1) → 30년(3) → 50년(5)

- 녹색기술 발전과 녹색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 공공투자 확대의 효율화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 정부 투자사업의 성과평가프로그램 도입, 민간 투자 세제지원, 녹색벤처 창업자금 우대 지원, 녹색기술인력 포상제도 도입
 - 기존산업의 녹색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 * 친환경 규제 도입, 고용유발형 녹색재정지원제도 도입, 녹색 작업장 혁신사업, 기존 건물의 녹색화(retrofit) 추진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 공급
 - 정부주도의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합·체계화하여 확대한 '녹색일자리 취업패키지사업' 추진
 - * 녹색뉴딜이 추진하는 4대강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산림자원 조성 등을 체계화하여 환경 향상과 동시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를 동반하는 '녹색일자리 취업패키지' 사업으로 추진
 - * 지속적 사업 경우 사회적 기업 활용 산업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촉진
 - *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효율화
-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 추구
 - 녹색일자리 창출 모니터링 및 근로기준·안전기준 감독 강화
 - 녹색일자리 관련 재교육 및 훈련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축적
 - * 녹색일자리 훈련 지원 사업 강화: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녹색관련 직종 포함 확대, 공공 훈련기관 학과 개편, 녹색사업 사업주훈련 및 훈련컨소시엄 우대지원
- 녹색일자리 고용연계 인프라 강화
 - 녹색인재의 수급 현황, 직업 전망 등의 수급 정보와 더불어 일자리 매칭까지 지원하는 종합 정보체제 구축
 - * 녹색일자리 정의, 범위의 체계화 및 직종 및 직무분석 연구 추진
 - * 녹색일자리 및 고용정보 통계DB 구축, 핵심 녹색인력 고용연계사업 추진

□ 녹색기술 핵심인재 양성

○ 교육-연구 연계를 통한 녹색기술개발 인재 양성

-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지역혁신센터(RIC) 등을 활용 녹색기술개발 선도 연구특화센터 지원,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를 통한 인재양성(녹색기술 인재양성 사업)

○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 * 기술경영학, MBA, 벤처금융,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녹색기술과의 융합 유인하는 Green Fellowship, Green Scholarship 제공
- * 녹색기술과 기후변화 관련수요를 교육하는 특성화 대학원 육성(녹색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협상 등의 전문성의 융합)

□ 녹색기술·기능인력의 원활한 순환지원체제 구축

○ 기존 인력의 녹색인재로의 전환시스템 확충

- * '녹색화 전문기술인재 현장재교육 프로그램' 확충, 중소기업의 기존 기능인력이 녹색인재로 전환·배치되도록 지원하는 '녹색훈련컨소시엄 사업' 등 확충, 기업의 사내대학 및 사내교육 등을 통해 녹색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공인 자격제도 및 자격인증의 개선

□ 녹색기반 평생교육체제 확립

○ 초중등 교육의 녹색화

- * 녹색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의 녹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조기 교육 시스템 확보

○ 대학 녹색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녹색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

○ 재취업 시도 인력과 취업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 녹색인재의 원활한 활용 촉진

○ 우수한 해외 녹색기술인재의 유입과 활용 촉진

- * 녹색인재의 유입을 촉진하는 '녹색비자' 추진,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구

축 등 네트워크 강화로 실질적 공동연구, 산학연 교류 촉진

○ '녹색기술 창업 인큐베이션 사업' 추진

-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전문 평가지원체계 구축,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자금·금융 지원 확대
- * 유망 녹색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정책자금, R&D, 판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종합 지원

③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2020년, 국내 녹색투자펀드 시장점유율을 20%로 확대
- ◇ 2020년, 은행의 녹색여신 비율을 20%로 확대
- ◇ 2020년, 국내 녹색기술 및 산업지원 펀드 20조원 조성
- ◇ 2020년 녹색일자리 30만개 창출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아시아 녹색금융시장 창출	50조원	100조원
▪ 국내 탄소시장 창출 규모	0.5조원	2조원
▪ 녹색투자펀드 시장점유율 확대	5%	20%
▪ 은행의 녹색여신 비율 확대	10%	20%
▪ 녹색기술 및 산업지원 펀드 확대	10조원	20조원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녹색기업 정책금융 활성화			
▪ 민간금융회사 녹색여신·투자 확대유도			
▪ 녹색금융상품 개발 지원			
▪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및 운영			
▪ 'Cleaner Korea, More Employment (CKME) Project'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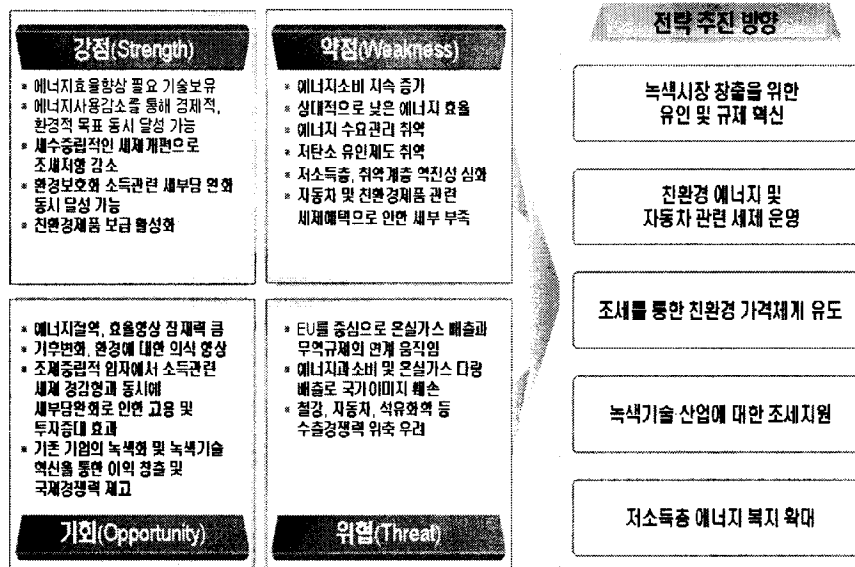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탄소관련 규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을 유도

- 주요 선진국은 탄소배출 및 에너지소비 규제,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 절감 및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을 유도
 - 탄소세 도입 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 강화 등을 추진
- 국내는 저탄소사회를 위한 탄소규제 방안 및 체계적 세제 등이 취약
 - 탄소저감 노력에 대한 규제나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가 미약
 - 친환경제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감면은 매우 미약

추진방향 : 탄소배출 관련 규제 혁신 및 제도 개선

- 탄소배출 관련 규제 및 제도혁신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성 강화



② 추진전략

1 저탄소 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 저탄소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지속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 혁신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그린홈 지원제도 등
 -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시장 기반 조성
 - * 거래소 관련 법령 정비, 배출권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
 - 녹색금융 시장창출, 녹색 생활 및 산업 기반 구축 등
 - * 녹색 펀드·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 등 금융 법규 및 제도 개선 등
 - * 관용 저탄소 자동차 우선조달 제도, 저효율 자동차 통행료 부과, 고효율 녹색주택·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제도 및 규제 정비 등
- 녹색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녹색상품 생산, 구매 촉진 지원 제도 마련 및 표준 확립
 - 녹색시민·녹색기업 참여 유도 및 지원을 위한 녹색 등급·인증제도 도입
 - * 녹색기업·상품 인증제, 녹색건축물 등급·인증제, 고효율기기 인증제, 생태관광 인증제, 탄소 캐쉬백 프로그램, 탄소 마일리지제도, 폐기물 수거제도 등
 - 친환경 녹색제품, 고효율기기 관련 표준 제정 확대 및 세계 표준 선도
-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축투자 활성화 촉진 지원제도 도입
 - 프로젝트 단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검·인증된 감축실적 정부구매를 통한 조기감축(early action) 인센티브 제공
 - *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인증 지침 마련,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 대상을 기업부문에서 가정·상업 등으로 확대 추진 등
 -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을 위해 감축목표 달성 조건부 설비투자비 보조 제도 도입 등
 - * 에너지절약시설(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별표 8-3)에 CDM 사업관련 시설 투자비 항목 추가로 세제감면 혜택 부여 추진 등

- 환경친화적으로 세제 개편(Earning Tax → Burning Tax), 환경보호 및 기업·국민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 환경세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되, 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관련세제의 적정 세부담과 연계
 - * 스웨덴·핀란드(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경감을 위해 에너지·환경세로 대체), 영국(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기후변화세로 대체)

- 에너지 세제의 외부성 교정기능 강화 및 탄소세 도입 검토
 -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충실하게 에너지·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세제로 개편 추진
 - * 주행세, 교육세 등 surtax조정 및 유류세 체계 간소화와 과세형평성 강화
 - * 에너지관련세 환경세로 통합(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이후 관련 법령개정)
 - 점진적·단계적인 탄소세 전환 및 탄소총량 배출권거래제와의 병행 실시(부분별 정책 조합) 검토
 - * 병행 실시 방안(예시)
 - 수송부문, 가정상업 등 : 탄소비례 에너지세제 강화를 통한 탄소세로 전환
 - 산업부문, 전력부문 등 : 국내 배출권 할당제 및 거래제, 자발적 감축협약, CDM 및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등 병행

- 친환경 세제 운영에 따른 특정부문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 경쟁력지원을 위한 에너지다소비형 주력 기간산업에 대한 기타 세부담 완화 조치
 - * 에너지세제 강화시 비세제 요소와 조세체계 개편을 병행
 -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강화로 필수재로서 에너지 소비의 특성상 소득계층간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보완
 - * OECD, EU Directive : 세제감면 보다는 재정지출(사후적인 재정지원 및 직접보조) 수단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권고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제를 CO₂ 배출량 및 연비 기준으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 친환경상품(환경마크, GR마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 프랑스와 영국('08.3 부가가치세 감면계획발표)
 - * EU국가들은 교토의정서 미준수국 제품 수입에 높은 관세 적용

□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운영 강화

- 환경관련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속적 강화, 에너지경영·환경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및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 강화, 정부협약기업(NA)·친환경기업 법인세 감면 등
- 녹색기술 전파에 대한 세계상 인센티브 도입, 녹색산업 창업 및 녹색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지원
 - * 저효율·고에너지 산업에 대한 상대적 세부담 강화 등 관련 세제 운영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 등의 구조 개선

- 국내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은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
- 일반회계에서 수행할 사업이나 조세와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은 일반 세금으로 전환하여 부담금과 특별회계의 연계성 강화

4**에너지 복지**

-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비용부담 경감
 - 난방효율개선사업(보일러설치 및 단열·창호시공 등)을 통해 필수에너지사용 비용부담 저감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및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별 요금지원사업 추진

- 기초 에너지의 안정적 사용을 위한 복지혜택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및 저소득층 소득보조 확대
 - * 최저생계비 산정시 광열비 포함 등
 -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 직접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 * 연탄사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라 '08년 9.3만 가구에 대해 76억 원 지원)
 - * 차상위계층 에너지 지원 등 에너지복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일정기간 공급중단 유예 및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긴급지원 강화
 -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555가구에 대해 연료 1개월분(등유 200ℓ, 연탄 150장, 프로판 50kg 중 택일)지원

- 에너지 복지 재원 확충 및 에너지복지 전달체계 개선
 - 관련법 개정을 통한 에너지복지 재원 확대 및 조세·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지원 활성화 유도
 -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에너지빈곤층 개념 정립 및 관련통계 DB구축
 - * 소득빈곤층과 구분되는 에너지빈곤층 개념 명확화 및 별도 통계 DB 구축

-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자립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용 및 운용비용 보조 추진

4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동향분석 : 환경 친화적 경제성장 패러다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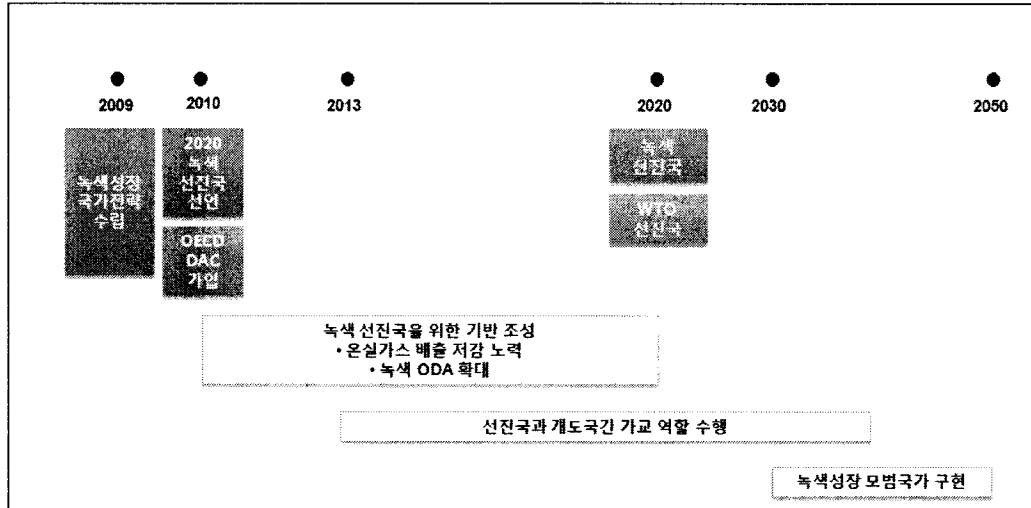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책임 공방은 여전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 미국은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을 통해 신규 일자리 500만개 창출 선언, 영국 '녹색혁명계획(Green Revolution Plan)', 일본 경제활성화 전략
- 환경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간의 선순환이 가능한 新국가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을 모색

추진방향 : 경제개발 모범국가에서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p>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경제성장의 성공사례 ※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 IT 강국 ※ 우수한 기술인력 및 기업의 상용화 능력 ※ 녹화 성공 경험 ※ 개도국의 산림복구 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 	<p>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환경기술 수준 ※ 낮은 원천기술 수준 ※ 에너지 다소비 생산구조 ※ 제도 및 인프라 미비 ※ 국민소득에 비해 낮은 대외개발원조(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책 의지 ※ 선진국도 녹색성장의 초기단계 ※ 개도국의 모범사례 부재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 <p>기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녹색기술 고도화 ※ 환경관련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낮음 <p>위협(Threat)</p>

② 추진전략

1 녹색 선진국의 단계적 실현



□ 2020년을 녹색 선진국 원년으로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시점에 이를 공포하고 향후 10년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
- 환경뿐만 아니라 WTO 협상에서 선진국 지위 선언
 - 기후변화협상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입장 수립
 -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탈피 대비 국내 대책 마련

□ 환경관련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 자임 및 녹색성장 모범사례 구축

- 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및 녹색 ODA 확대

- 각종 환경관련 지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 환경지수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항목별 목표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립
 - 환경관련 정책반영을 위한 정보공유 수단으로서 환경관련지표 종합포탈 운영 및 지수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
 - 평가기관과의 협력 및 평가방법·항목 개선 협의를 위해 평가기관 초청 워크숍 개최

- 환경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 정책의지 및 구체적인 수단 홍보
 - 개최도시의 이미지와 환경국제행사개최 목적과의 적절한 연계 전략을 통해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습지, 철새도래지, 삼림자원 등 지역별 환경적 장점 및 특성을 활용, 친환경 관광(Eco-tourism)과의 연계 및 컨벤션 산업 기반 정비
 - 기후변화·생물다양성·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및 수질, 환경질병, 하수설비 등 환경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문의 행사 유치 추진
 - ※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 추진
 -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사막화 방지의 날 등 주요 국제환경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 ※ 현재는 UNEP,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를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

- 국내 녹색기술 연구 및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학연 시너지 효과 제고
 - 다수의 분야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잠재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점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
- 녹색산업 분야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 해외 연구기관 또는 다국적 기업의 R&D 기능을 유치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LED 등 시장성장단계 분야는 기업중심의 투자유치, CO2 포집저장 등 잠재력이 큰 분야는 기술중심의 투자유치
 - 조세감면, 입지·현금지원, 지식재산권 분배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녹색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허브로 육성
 - 에너지·환경 관련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선진화를 통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출기반 조성
- 그린 허브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경제자유구역 활용
 -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녹색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및 투자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기업 유치
- 녹색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그린 허브의 한 축 구성
 - 향후 다양한 녹색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기구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
 - * 현재 아시아의 산림녹화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산림협력기구 창설 추진 중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의 체계적인 운영

- 개도국의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 수재 방지 및 대응, 수자원 확보, 수원 함양을 위한 산림 조성, 수질향상 및 전염병 관리,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저하, 식량안보 문제 지원

□ 녹색 ODA 확대

- 단계적으로 녹색 ODA 비중을 '12년 15%, '20년 30%로 확대
-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 종다양성, 산림녹화, 공해 및 수질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에 관련된 "그린" ODA 사업에 투자

□ 개도국의 온실가스저감 노력 지원

- 산업화 초기단계의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 및 에너지 다소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추세
-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 및 그린협력을 위한 우리 기업 참여 유도

□ 다자기구를 통한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 국제환경기금 및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 수행
 - * 2005년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GEF 공여도는 평가대상 146개국 중 144위로 매우 저조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 2020년 녹색 ODA 비율을 30%로 확대
-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운영 및 그린 hub 구축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13	'20
▪ 녹색 ODA 비중	20%	30%
▪ 환경관련지수(EPI 및 기후변화 대응성과지수)	49	40
▪ 녹색기술력 수준	12	20
▪ GEF 공여비율	20%	30%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09	'13	'20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 녹색기술 연구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해외 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 유치			
▪ 국제 행사(회의 및 박람회) 유치			
▪ 녹색 관련 국제기구 유치			

제6장 전략의 이행 및 평가체계

1

전략의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 소관기관별 전략 이행 점검 및 평가

-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주요전략 및 과제와 동일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그리고 전략 추진기반 부분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담당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부분과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전략 및 과제의 관련 부분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담당
- 사회통합위원회 :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전략 및 과제의 관련부분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담당

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

□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77개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성과를 평가

제3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I.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요 및 추진 배경	156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요	156
2. 추진배경	156
3. '07년 시범평가 개요 및 '09년 평가결과	159
II. 지속가능발전 지표	161
1. 국내 지표	161
2. 해외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 적용 경과	163
3. 국가녹색성장 지표	165
III. 대표지표의 선정	169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활용	169
2. 정책 환류	170
부록 1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 구성지표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교 ·	170
부록 2 해외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활용 모델	173
부록 3	
1. UN 지속가능발전지표	176
2.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178
3. 프랑스 지속가능발전지표	179

표 목차

<표 2-1-1> UNCSD 제3차 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분류체계	163
<표 2-2-1>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63
<표 2-2-2> 국가별 주요 공통지표	164
<표 2-3-1>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 주요지표	166

제 1장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개요 및 추진 배경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요

-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 경제,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의 세가지 측면에서 대표적인 지표들을 개관하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
 - 이 지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환류체계의 핵심 요소

-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국제 사회와 국가 정책 평가의 도구
 -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정책적 적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객관적 과학적 평가와 정책의 현상 개선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함.
 - 지속가능성의 계량화 어려움 :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대 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포함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정 및 정책적 활용 필요

2. 추진 배경

(1) 국내외 배경 및 경과

-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UN 등 국제기구와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

- ‘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도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과 「지표를 활용한 계획이행 평가」를 권고 (JPOI, X. 이행수단 제130-131항)

- 우리나라는 ‘06년 사회·환경·경제 분야 77개 지표를 선정하여 UN, OECD 등에 보고하고 ‘07년에 시범적용평가 사업을 추진함

- '07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분야별 지표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평가 기준 마련, 통계청 등의 자료 수집, 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표를 평가
 - '06년말 통계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자료를 수집하고, 5년간('02~'06)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08년 2월 언론에 공개
- '08~'09년, 환경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연구)를 통해 지표의 갱신과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는 '07, '08년 자료 조사 및 최근 5년간('04~'08) 추세를 분석, 제시함

(2)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의 법적 근거

- 국가지속가능성의 평가 및 보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3조, 제14조에 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3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 : 지속가능성보고서

제 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규정

- 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20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정부는 (중략)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생략)
-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07년 시범평가 개요 및 '09년 평가 결과

□ '07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평가 요약

- 최근 5년간('02~'06)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추세
 - 근로시간, 영아사망률 등 사회분야 지표 개선이 뚜렷하고, 1인당 GDP, R&D지출비율 등 경제분야 지표도 개선
 - 온실가스배출량, 갯벌면적,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환경 및 경제분야 지표는 악화 추세

- 총 77개 지표중 66개 지표의 변화추세를 해석함
 - 66개중 40개(60%) "개선", 17개(26%) "악화", 9개(14%) "큰변동없음"으로 평가됨
 - 10개 지표는 인구증가율 등 가치 중립적이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표로서 지속적 논의를 위해 평가하지 않음

○ 평가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가발전의 양적 기반은 상당한 개선추세이나
 - 소득분배 등 형평성 측면과 에너지, 국토이용 등 환경보전 측면을 강화하는 국가성장의 질적관리가 중요해졌으며
 -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고, 산림·갯벌면적 등 환경자원이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패턴이 에너지,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 ⇒ 경제성장과 국토환경자원 및 에너지 소비 증가의 연계관계를 차단 (Decoupling)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 '09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부록 1. 참조)

- 최근 5년간('04~'08) 지표 '07년 평가 때에 비해 긍정적 지표는 줄어들고 부정적 지표는 소폭 증가함(각각 7개, 2개)
 - 근로시간, 기대여명, 자연재해 피해 등 개선이 뚜렷한 지표와 부정적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빈곤인구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고령인구비율, 범죄발생률 등 사회분야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한편,

- 상하수도 보급, 재생가능에너지 소비,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등 환경 개선 투자의 성과
 - 1인당 GDP, 국민총생산 등 경제분야 지표가 '08년 세계경제위기를 반영하여 부정적 추세로 반전함
 -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분야 지표가 악화 추세를 이어갔고
 - 농지, 산지 면적 감소, 수도권인구집중도 증가 등 국토·환경 관리 부문이 부정적 경향을 계속함
- 총 77개 지표중 변화추세 해석이 가능한 지표는 65개로서 나머지 12개는 중립적 지표로 간주함
- 65개 지표 가운데 긍정적 변화 34개(52%), 부정적 변화 20개(31%), 변동없음 11개(17%)로 평가됨
 - 12개 지표는 가치 중립적이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표로서 향후 지표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 방향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 논의가 필요함

○ **평가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가 사회발전 분야는 계속해서 개선추세를 보이나 아직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경기후퇴와 환율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총생산 규모가 축소되었고,
 - 빈곤인구비율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형평성 측면을 강화하는 국가성장의 질적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의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산림·농지 등 환경 및 생물자원 기반이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패턴이 에너지, 국토, 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성장에 따른 국토환경자원 투입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전통적인 연계관계를 차단 (Decoupling)하는 정책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제 2장 지속가능발전 지표

1. 국내지표

(1) 개발 과정

- 2000년부터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여러 기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연구 시작
 - ※ 국가환경성평가지표 개발 적용연구('00년, 환경부),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통계 발전방향('03년, KEI) 등

-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256개 예비지표를 선정하는 등 국내지표 개발에 본격 착수
 - 256개 예비지표 중 국내 적용가능성, 통계자료 유무, 국제지표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169개의 1차 지표(안) 마련

- '06년, 1차 지표(안)을 토대로 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77개의 2차 지표(안) 마련하는 등 개발 완료
 - '06. 10월, 국무회의에 보고, 77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최종 확정

- '07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77개의 지표에 대한 보완, 평가기준 수립 및 시범평가 사업 추진
 - '08. 2월, 대통령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 일반 공표

- '08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및 개정 움직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편 등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연구 및 지표 재평가 작업

(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구성 체계

1) '07년 지속가능발전지표 : 3대 분야 14개 영역 구분

○ '07년 시범평가 및 '09년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총 77개 지표로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 14개 영역,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 분야 : 6개 영역, 12개 항목, 25개 지표

영역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	인구
	빈곤	노동	남녀 평등	영양 상태	사망 률	수명	식수	건강 관리	교육 수준	생활 환경	범죄	인구 변화
지표 개수	3	2	2	1	1	1	1	3	3	3	2	3

○ 환경 분야 : 5개 영역, 11개 항목, 27개 지표

영역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오존 층	대기 질	농업	산림	도시 화	연안 지역	어업	수량	수질	생태계
지표 개수	3	1	1	5	3	2	3	2	2	2	3

○ 경제 분야 : 3개 영역, 11개 항목, 25개 지표

영역	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경제 이행	무역	재정 상태	대외 원조	물질 소비	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교통	정보 접근	정보 인프라	과학 기술
지표 개수	5	1	2	1	1	4	4	3	2	1	1

2) '09년 지속가능발전지표 : 14개 주제별 분류

- UNCSDD의 2007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사회-환경-경제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현행 지표의 14개 영역을 대분류 주제로 활용
 - ⇒ <변경> 총 77개 지표를 유지하되 분류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 (사회·환경·경제) 구분을 없애고 14개 영역, 34개 항목으로 구성

<표 2-1-1> UNCSDD 제3차 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분류체계 비교

UN	한국	UN	한국	UN	한국
빈곤 거버넌스	빈곤 노동,남녀평등 생활환경, 범죄	자연재해 대기환경 국토관리	재해안전 대기 농업, 산림, 도시화	경제개발 세계경제협력 생산과 소비 패턴	경제구조, 정보화 등 대외원조 소비/생산,
건강 교육 인구	건강 교육 인구	해양, 연안 물관리 종다양성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UN, 2007]

2. 해외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 적용 경과

□ 국제 기구

- '92년 리우회의 「의제21」에 따라 UN이 처음 개발하여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
 - UN은 2007년 제3차 지표체계와 평가 및 적용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중임

<표 2-2-1>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기관	최초발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구성(현재)
UN	1996	2007년 제3차지표 : 50개 핵심지표를 포함 총 96개 지표로 구성
EU	1997	UN 지표에 7개 지표를 추가, 부분적 변형한 64개 지표로 구성
OECD	1998	환경 분야 핵심지표 19개, 사회·경제 분야 15개 핵심 지표를 포함하여 34개 지표로 구성

□ 주요 국가별 사례 (※ 붙임 참고자료)

- 2000년대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지표를 개발, 본격적으로 활용
 - 독 일('00) : 삶의 질, 사회통합 등 4개 분야, 218개 지표
 - 영 국('05) : 경제, 공동체, 환경·자원관리, 국제협력 등 4 분야, 15개 항목, 127개 지표
 - 프랑스('05) : 지속가능한 성장, 장기전망 및 미래세대 등 5대 주제, 10개 모듈, 45개 지표
- 국가별 주요 공통지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1인당 GDP, 기대여명 등으로 지구환경, 국민 삶의 질 등을 중시

<표 2-2-2> 국가별 주요 공통지표

구 분	한 국	프 랑 스	영 국	독 일	비 고
1.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감축량	
2.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소비량 및 1인당 사용량	교통, 수송 부문	-	에너지 생산성	
3. 폐기물배출량	생활계 및 지정 폐기물배출량	도시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자원생산성)	
4. 대기질	대기오염 기준 초과일수	-	산성비, 질산화물	대기오염 물질 지표	
5. 수질	4대강 수질오염도		하천수질 BOD, COD	(농업 질소수지)	
6. 생물다양성	국가 생물종 수	일반 조류개체 분포지수	야생조류 개체수	조류지표종 개체 수	
7. 수산자원	수산자원량	어족자원보호 초과 어획비율	어족자원량	-	
8. 1인당 GDP	1인당 GDP	일인당 GDP 성장률	일인당 GDP	일인당 GDP	
9. 기대여명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10. 노령화	고령인구비율	노령인구 부양비	노동 가능인구 비율	-	
11. 고용	실업률	-	고용률	고용률	
12. 범죄	범죄발생률	-	범죄율	절도 발생건수	
13. 빈곤률	상대빈곤률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빈곤선 이하 어린이인구 비율	-	
14. ODA(대외원조)	GNI 대비 ODA 비율	ODA	-	GDP 대비 ODA 비율	

3. 국가 녹색성장 평가지표

□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부록 1. 참조)

- 2009. 10.13.,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연구책임자 박성현)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유의선)은 공동으로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Green Growth Index)를 선정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함¹⁾
 - 국가간 녹색성장을 비교할 수 있는 종합평가지수를 개발 OECD 30개 국을 비교 평가함
 - 녹색성장 체계를 투입-프로세스-산출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25개, 11개, 17개 등 총 53개 지표를 선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 평가 방식을 취함 (※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교 : 첨부)
- 국가간 녹색성장지수 종합평가 결과 한국은 15위로 OECD 30개 국 가운데 중위권으로 평가되었음
 - 투입지표는 14위로, 과학기술 역량, 녹색투자 등 사회경제적 투입은 우수(4위)하나, 에너지 투입, 생태계 등의 물리·생태적 투입은 뒤져 (21위) 있음
 - 프로세스 지표는 18위로 "낙후"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녹색법과 제도(23위), 탄소배출권 거래제(30위) 등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산출지표는 17위로 과학기술산출, 지식집약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산출(17위)은 중위권이나, 폐기물, 온실가스, 대기질, 수질, 생물다양성 등의 물리·생태적 산출(19위)은 중하위권임

□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교

-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는 약 절반 이상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표를 채택함
 -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 53개 구성지표 가운데 21개가 일치하고, 5개가 유사한 지표이며,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임
 - 부문별 평가 결과도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임

1) 박성현, 유의선 외, 국가녹색성장지수 종합평가지수 개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반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Process 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는 두 지표체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10대 정책 주요지표

- 2009.7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10대 정책방향별로 45개 주요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동 전략의 주요지표는 저탄소녹색성장 10대 정책 각각의 장단기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여 전략의 이행목표를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며, 성과측정 도구의 성격을 띠고 있음
 -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UN 등 국제기구와 같은 PSR (Pressure, State, Response)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임
 - 45개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 주요지표 가운데 6개 지표는 공통이며 7개 지표는 유사지표로써 총 13개 지표(29%)를 공유하고 있음

<표 2-3-1>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 주요지표

녹색성장 10대 정책 목표	주요 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10대 정책	45개 지표	13개 공통·유사지표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순환율 산림의 탄소저장량 북한조림면적	△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원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율 원자력발전 설비비중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에너지자립도	○ ○
3.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역량 선진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관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수자원 확보 연안취약성 평가 수행면적 대국민교육 홍보 재해대응능력강화 국가 산림자원 총량	○ △ ○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 녹색기술개발투자 규모	

녹색성장 10대 정책 목표	주요 지표	국가지속가능 발전지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투자 규모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녹색기술인력 양성수준 녹색기술수준 향상 실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순환율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그린산업단지 구축 대상	△
6. 산업구조의 고도화	IT융합기술 수준 로봇산업 국내 생산규모 외국인환자 수 MICE 관광객 수	
7. 녹색경제기반 조성	국내 탄소시장 창출 규모 에너지 빈곤가구 비중 Green 사회적 기업 수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UN 녹색우수도시 조성 개소 1인당 생활공원 면적 보호지역 면적추이 철도 여객수송 분담율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 ○ △ △
9.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구매 금액 녹색시민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지속가능관광 인증제 참여율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녹색 ODA 비중 환경성과지수 GEF 공여도	△

제 3장 대표지표의 선정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 핵심이슈 등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에는 현행 77개지표는 과다함
 - 프랑스, 영국 등은 대표지표를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하고 UN도 50개 핵심지표 제시 (부록 4. 참조)
- ⇒ '07년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19개 대표지표를 선정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2009 평가, 2006~2008 통계)

지표	'06	'07	'08	현재	추세	OECD비교
17) 사교육비 지출(학생1인당 월평균 지출액)(만원)		22.2	23.3			
25) 고령인구비율, (부양비)(%)	9.5(13.2)	9.9(13.8)	10.3(14.3)			
27)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톤 CO ₂)	12.41					
33) 식량자급률(%)	27.8	27.4				-
47) 1일 1인당 수돗물소비량(리터)	346	340				
66)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307	0.247				
77) GDP 대비 R&D 지출 (%)	3.2	-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서울 대기기준 초과횟수)	31	(164) 기준변경	-			-
37) 도시 내 공원면적(m ²)	9.2	9.4	-			-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48.6	48.9	49.1			-
48) 4대강평균수질오염도 (낙동강 물금취수장 mg/l)	2.7	2.6	2.4			-
54) 1인당 GDP (USD)	17,109	18,445	15,842			
67) 가정 및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발생량(천톤/년)	116,109	123,063				
71)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 (% , 서울)	62.3	-	-			-
01) 상대빈곤율	12.5	13.0	12.6			
03) 실업률	3.5	3.2	3.2			
06)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	65.3	66.4	-			-
21) 10만 명당 신고 범죄 수	3,787	3,987	-			
61) GNI 대비 ODA %	0.05	0.07	0.09			

범례: ↓ = 악화되는 중, → = 현상유지 또는 안정, ↑ = 개선되는 중

○ 대표지표 선정기준

-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원칙을 담은 것 :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건전성과 국민 건강, 취약부문 우선 고려
- 국민 정서에 부합, 관심이 높고 체감하기 쉬운 지표
- 국민 인식 제고, 교육·홍보 효과를 우선 고려
- 전체 개수는 15개 내외(프랑스·스웨덴 12, 덴마크 14, 영국 20, 독일 21)
※ <부록 4> 해외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활용사례

2. 정책 환류

(1) 정책활용성의 문제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평가는 주제별 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것임.
- 지표적 접근은 다양한 주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량적 평가와 평가결과의 정책활용 용이성이 다소 낮음

⇒ 지속가능성 수준의 계량적표현 등을 위해 “계정적 접근방식”,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개발 추진 필요성 제기

※ **계정적 접근방식 :**

전통적인 국민계정에 환경이나 자연자원을 반영하여 확장.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을 일관된 방법론으로 분석가능하므로** 지속가능성 수준을 화폐적으로 표현 가능(예, 환경조정 GDP) UN을 중심으로 OECD와 주요 선진국에서 논의와 연구 진행 중

※ **SEEA 관련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자연자원 부존 및 소비량, 폐기물, GDP, 자원생산성 등 환경 및 경제 분야 지표 상당수가 SEEA 계정과 관련됨

(2) 사회적 합의의 문제

- 바람직한 방향성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10개 지표에 대하여는 공론화 및 합의절차 등을 거쳐 평가

<부록 1>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 구성지표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교

범례 : ○ = 일치하는 지표(21개), △ = 유사 지표(5개)

대지표 군	중지표군	소지표군	지표	지속가능발전 지표 여부
투입	사회· 경제적투입	사회적 투입	1. GDP 대비 공교육 투자(교육투자)	○
			2.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사회복지)	○
			3. 노인부양비(인구노령화)	○
		과학 기술 역량	4. 인구천명당 연구종사자 비중	○
			5. 인구천명당 과학기술 R&D 종사자수	
			6. GDP 대비 과학기술 R&D 투자	
			7. 전체 R&D예산 대비 환경 R&D 예산	
		녹색투자	8. GDP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RD&D 투자	
			9. GDP 대비 공공환경오염방지지출(PAC)	
	농업 및 수송부문 녹색투입	10. 유기농 경작지 비율	○	
		11. 대중교통수송밀도-철도		
	12. 대중교통수송밀도-버스			
	물리· 생태적투입	에너지투입	13. 에너지원단위	○
1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	
15. 재생가능에너지원소비비중			○	
16. 재생가능에너지전력생산비중				
물질투입		17. 수송에너지 효율		
		18. 1인당 생태발자국	○	
		19. 경지면적대비 화학비료 사용량		
20. 1인당 물 소비량				
21. 1인당 GDP대비 연간 물소비량				

대지표군	중지표군	소지표군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여부
		생태계	22. 생물권보호비율 23. 습지비율 24. 산림비율 25. 주요보호지역비율	△ ○ ○
프로세스	촉진 메커니즘	녹색법·제도	26. 교도의정서 비준 및 감축의무 27. 저탄소 녹색성장관련법 제정 28.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29.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시행	
		환경 세제	30. GDP대비 환경세 비중	
		배출권 거래제	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식흐름	녹색기업활성화	32. 인구천명당 ISO14001 인증 기업수 33. 인구백만명당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녹색시민자각	34. 환경오염 시민인지도 35.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식흐름	36. 인구 천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
산출	사회· 경제적 산출	국민총생산	37. 1인당 GDP	○
		교육수준	38. 고등학교졸업율	○
		소득분배	39. GINI 계수	○
		과학기술산출	40. 인구천명당 특허건수	
		지식 집약 서비스	41. 지식 집약 서비스 비중	
	물리· 생태적 산출	폐기물	42. GDP당 산업폐기물	○
			43. 1인당 생활 폐기물	○
		온실가스	44. 총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
			45. 1인당온실가스 배출량	○
			46. GDP 대비온실가스 배출량	○
		대기질	47. GDP 대비 SOx(Sulphur Oxides)배출량	△
			48. GDP 대비 NOx(Nitrogen Oxides)배출량	△
			49. 1인당 SOx(Sulphur Oxides)배출량	
			50. 1인당 NOx(Nitrogen Oxides)배출량	
수질	51. 대표하천 BOD	○		
생물다양성	52. 국가별 최빈 조류개체수			

대지표 군	중지표군	소지표군	지표	지속가능발전 지표 여부
		(조류수)	53. 인구천명당 멸종위기 조류종수	△

<부록 2>

해외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활용 모델

1. 영국 (20개)

Indicator number and title		Change since 1990	Change since 1999	Direction in latest year*
1. Greenhouse gas emissions		☑	☒	≈
13. Resource use		☑	☒	x
18. Waste arisings		☐	☒	≈
20. Bird populations	Farmland	●	☒	≈
	Woodland	☒	☒	≈
	Coastal	☒	☒	≈
27. Fish stocks sustainability		☐	☐	☐
28. Ecological impacts of air pollution	Acidity	☐	☑	≈
	Nitrogen	☐	●	≈
30. River quality	Biological	☑	☑	≈
	Chemical	☑	☑	≈
32. Economic growth		☑	☑	✓
37.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	☑	≈
38. Crime	Vehicles & burglary	☑	☑	✓
	Robbery	●	●	x
40. Employment		☒	☑	≈
41. Workless households		☑ ₁₉₉₂	☑	≈
43. Childhood poverty		☑	☑	✓
45. Pensioner poverty		☑	☑	✓
47. Education attainment		☑	☑	≈
49. Health inequality	Infant mortality gap	● ₁₉₉₄	●	✓
	Life expectancy gap	● ₁₉₉₁	☒	x
55. Mobility	Walking/cycling	●	●	≈
	Public transport use	●	☒	≈
59. Social justice		☐	☐	☐
60. Environmental equality		☐	☐	☐
68. Wellbeing		☐	☐	☐

- ☑ = clear improvement since base year
- ☒ = little or no change since base year
- = clear deterioration since base year
- ☐ = insufficient or no comparable data

2. 독일 (21개)

- ↗ = Positive trend, the goal is closer
 → = Same trend, the goal is no closer
 ↘ = Negative trend, the goal is further away than before

	Indicator	Target	Trend towards achieving the target 1998-2003
INTERGENERATION EQUITY			
1	Conservation of resources	Energy productivity	Doubling by 2020 ↗
		Resource productivity	Doubling by 2020 ↗
2	Climate protecti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by 21% by 2008/2010 ↗
3	Renewable energies	The proportion of total energy consumption attributable to renewable energies	- 4.2%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by 2010 - 12.5% of electricity consumption by 2010, 20% by 2020 ↗
4	Land use	Increase in land use for housing and transport	Reduction in daily growth to 30 ha in 2020 ↗
5	Biodiversity	Stock of selected bird species as indicator of biodiversity	Stabilisation at high level in 2015 →
6	National debt	National debt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budget ↘
7	Provision for future economic stability	Ratio o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to gross national product	Increase in innovative dynamism ↘
8	Innovation	Private and public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crease in R&D spending to 3% of GDP in 2010 ↗
9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situation of 25 year olds	- Increase percentage of graduates from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10% in 2010, 20% in 2020 - Percentage of school leavers without secondary school qualifications: 9.3% in 2010 and 4.6% in 2020 ↗
		Percentage of students starting degree courses	- Increase to 40% in 2010 ↗
QUALITY OF LIFE			
10	Economic prosperity	Gross domestic product per head	Economic growth ↗
11	Mobility	Intensity of passenger and freight traffic	- Passenger traffic: Compared with 1999, reduction to 90% by 2010, 80% by 2020 ↗ - Freight traffic: Compared with 1999, reduction to 98% by 2010, 95% by 2020 →
		Proportion of rail traffic and inland water transport in total output of freight traffic	- Proportion of rail traffic by 2015: 25% ↗ - Proportion of shipping by 2015: 14% ↘
12	Nutrition	Nitrogen surplus in farming	80 kg discharge/ha farming land by 2010 ↗
		Development of land for organic farming	Proportion of farming land: 20% by 2010 ↗
13	Air quality	Air pollution	Reduction to 30% compared with 1990 ↗
14	Health	Premature death (cases of death under 65 years)	Decline ↗
		Satisfaction with health (opinion poll)	Stabilisation at high level ↗
15	Crime	Burglaries	Decline in cases to 117,000 ↗
SOCIAL COHESION			
16	Employment	Employment rate	70% in 2010 →
17	Perspectives for families	All-day care provision for children in the West German Länder	30% in different age groups ↗
18	Equal opportunities	Women's average earnings as % of men's average earnings	85% in 2015 (West German Länder) ↗
19	Integration of foreign citizens	Foreign school leavers without finishing <i>Hauptschule</i>	Decline ↗
GLOBAL RESPONSIBILITY			
20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 development cooperation	Propor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GDP: 0.33% in 2006 ↗
21	Opening markets	Imports to the EU from developing countries	Rise ↘

3. 프랑스 (12개)

Douze Indicateurs "phares" de développement durable pour la France

Indicateur	Environnement	Société	Économie
1 Taux de croissance du produit intérieur brut par habitant	☹️	⬆️	📊
2 Émissions totales de gaz à effet de serre	☹️	➡️	📊
3 Par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dans la consommation totale d'énergie primaire	☹️	⬆️	📊
4 Consommation d'énergie totale des transports	☹️	➡️	📊
5 Quantité de déchets municipaux collectés	☹️	➡️	📊
6 Indice d'abandon des populations d'oiseaux communs / oiseaux nicheurs	☹️	➡️	nc
7 Indice d'abandon des populations d'oiseaux communs / oiseaux nicheurs	☹️	⬇️	nc
8 Espérance de vie en bonne santé	☹️	➡️	📊
9 Part des ménages sous le seuil de pauvreté (taux de pauvreté) (taux de pauvreté) (taux de pauvreté après transferts sociaux)	☹️	➡️	📊
10 Taux de dépendance vieillissante	☹️	⬇️	📊
11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	⬆️	📊
12 Disponibilité de l'administration en ligne	😊️	⬆️	📊

meilleur que la moyenne européenne
 dans le système européenne
 inférieur à la moyenne européenne
 nc : données non comparables

satisfaisant
 en amélioration
 insuffisant
 état critique

😊️	12 Disponibilité de l'administration en ligne
☹️	10 Taux de dépendance vieillissante 8 Espérance de vie en bonne santé 9 Part des ménages sous le seuil de pauvreté (taux de pauvreté) (taux de pauvreté après transferts sociaux)
☹️	4 Consommation d'énergie totale des transports 5 Quantité de déchets municipaux collectés 6 Indice d'abandon des populations d'oiseaux communs / oiseaux nicheurs 7 Indice d'abandon des populations d'oiseaux communs / oiseaux nicheurs

<부록 3>

1. UN 지속가능발전지표

※ 전체 57개 지표 중 44개가 우리나라 지표와 공통지표임 (57%)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우리나라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1)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3) 실업률	○
	2. 건강	1-2. 남녀평등	4)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비율	○
		2-1. 영양상태	5) 유소년 영양 상태	○
			6) 5세 미만 영아 사망률	○
		2-2. 사망률	7) 출생시 기대여명	○
			8) 하수도 보급률	○
		2-3. 공중위생	9)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
		2-4. 식수	10) 일차 보건의료시설 접근 인구	
		2-5. 건강관리	11) 유소년 전염병 예방접종	○
			12) 피임 보급율	
	3. 교육	3-1. 교육수준	13) 중등학교 순졸업율	○
		3-2. 문자교육	14) 성인 문자해득률	
	4. 주택	4-1. 생활환경	15) 1인당 바닥 면적	
	5. 안전	5-1. 범죄	16) 10만인당 신고된 범죄 수	○
	6. 인구	6-1. 인구변화	17) 인구 증가율	○
			18) 도시 공식/비공식 주거 인구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19) 온실가스 배출량	○
		1-2. 오존층	20) 오존파괴물질의 소비량	○
		1-3. 대기질	21) 도시 내 대기오염물질 농도	○
	2. 토지	2-1. 농업	22) 경작에 적합한 영구적 경작지	○
			23) 비료 사용	○
			24) 농약 사용	○
		2-2. 산림	25)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
			26) 목재 벌채 강도	○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우리나라	
		2-3. 사막화	27) 사막화 영향을 받는 토지		
		2-4. 도시화	28) 도시 공식/비공식 주거 면적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29) 연안 해조류 농도	○	
			30) 해안지역 총 인구 비율		
	4. 담수	3-2. 어업	31) 주요 어종별 연간 어획량	○	
		4-1. 수량	32)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	
	4-2. 수질		33) BOD	○	
		4-2. 수질	34) 담수 대장균 밀도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35) 주요 생태계 면적	
		36) 전체 면적 대비 보호구역 비율		○	
5-2. 종		37) 핵심지표종 개체 수	○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38) 1인당 GDP	○	
			39) GDP 중 투자분	○	
		1-2. 무역	40) 상품과 서비스 무역 수지	○	
		1-3. 재정상태	41) GNP 대비 부채 비율	○	
	42) GNP 대비 ODA 제공·수취 비율		○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43) 자원생산성	○	
		2-2. 에너지사용	4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	
			45) 재생가능에너지 소비 비중	○	
			46) 에너지 원단위	○	
		2-3. 폐기물관리	47)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	
			48) 유해 폐기물 발생량	○	
			49) 방사성 폐기물 관리	○	
		5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		
	2-4. 운송	51) 수송모드별 1인당 승차거리	○		
	제도	1. 제도형태	1-1. 지속가능발전	5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1-2. 국제협력	53) 국제협약 이행	
		2. 제도 용량	2-1. 정보접근	54) 1000인당 인터넷 계정	○
2-2. 정보인프라			55) 1000인당 전화회선		
2-3. 과학·기술			56) GDP 대비 R&D 지출비율	○	
2-4. 재해 대응			57)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	

2. OECD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 OECD는 UN유럽경제위원회, 유럽통계국과 공동으로 주요지표 34개 제시
- 우리나라 지표와 22개 항목(66%) 공통

부문	영역	지표	우리나라
환경	기후변화	1)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	
		2) 온실가스 배출량	○
		3) 온실가스 농도	
	오존층	4) 오존층 파괴물질	○
		5) 성층권 오존	
	대기질	6) 대기오염물질 배출 강도	
		7) 도시 대기질	○
	폐기물	8) 폐기물 발생량	○
		9) 폐기물 재활용	○
	수질	10) 하천 수질	○
		11) 폐수 처리	○
	수자원	12) 수자원 사용 강도	○
		13) 상수도 보급률 및 가격	○
	산림 자원	14) 산림자원 사용 강도	○
		15) 산림 및 입목지역	○
	수산 자원	16) 어획량 및 소비량: 국내	○
		17) 어획량 및 소비량: 지역 및 국제	
	종다양성	18) 멸종위기종	○
		19) 보호구역	○
사회· 경제 및 기타 부문	GDP 및 인구	20) GDP(국내총생산)	○
		21) 인구 증가율 및 인구밀도	○
	소비	22) 개인 소비	
		23) 정부 소비	
	에너지	24) 에너지 소비 강도	○
		25) 에너지원 구성(에너지 믹스)	○
		26) 에너지 가격	○
	수송	27) 도로 교통량 및 차량 이용도	
		28) 도로 기반시설 밀도	
		29) 자동차 연료 가격 및 세금	
	농업	30) 질소 및 인산 비료 사용강도	○
		31) 가축 밀도	
		32) 농약 사용강도 및 사용량	○
	지출	33) 공해방지 및 저감 지출	
34) 공적개발원조(ODA)		○	

3. 프랑스 지속가능발전지표 (20개 항목 공통 우리나라와 공통)

주제	모듈	지표	우리나라
I. 지속가능한 성장	1. 생태효율적 성장	1)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GDP	○
		2) 에너지 사용량 및 GDP	○
		3) 천연자원 소비량 및 GDP	○
		4) 이동성 및 GDP	
		5) 가정 폐기물 발생량 및 소득	○
		6) 농업 분야의 생태효율성	
	2. 환경과 생산구조의 통합	7)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
		8) 철도 수송 패턴 변화	○
		9) 유기농업	○
		10) 가정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11) 프랑스 경제 내 환경보호 지출	
II. 중요 자원 및 자산	3.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12) 골재 채취	
		13) 인공 포장된 토지	
		14) 농지 이용 변화 및 유기물질 농도	○
		15) 어류 남획	○
		16) 내수면 농약 오염	
	4. 자산 유지 및 전승	17) 종다양성: 일상 조류종 개체수 변화	○
		18) 인구 보건 상태 및 기대여명	○
		19) 학교 중퇴 청소년 비율	
		20) 도로 교통안전	○
		21) 자연보호 지출	
III. 공간이용 및 국제관계	5. 공간 배분 불균형	22) 유적 유지 보호	
		23) 도시 팽창	○
	6. 프랑스 대외관계	24) 프랑스 국토 내 기술적 위험성 분포	
		25) 관광으로 인한 환경압력	
		26) 온실효과에 대한 프랑스의 기여분	○
		27) 공적개발원조(ODA)	○
		28) 거버넌스 및 유럽연합 법규 준수	
		29) 남녀 임금 격차	○
IV. 현세대의 필요 만족	7.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30) 빈곤선 이하 가계 비율	○
		31) 산업재해	
		32) 법률서비스 접근성	
	8. 불만족 대응 태도	33) 자살률	
		34) 투표 기권율	
		35) NGO 및 비영리단체 가입	
		36) 환경문제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V. 장기전망 및 미래세대	9. 책임 및 사전주의 원칙	37) 연구 개발 노력	○
		38) 국가 채무	
		39) "고준위, 장기" 방사성 폐기물	○
		40) 지방의제 21	
	10. 취약성 및 불확실성 대비	41) 에너지 자립도	
		42) 기업 창업 및 도산	
		43) 평생교육에 대한 지출	
		44) 농업 전문화 및 윤작	
		45) 자연 재해	○

<참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표' 관련 규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09. 6. 1. 현재 법)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4부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지침

I.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지침 개요.....	184
1.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지침 개요	184
II. 추진 배경 및 계획.....	185
III.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	187
IV. 이행계획 작성 방법 및 형태.....	188
V. 행정사항.....	189

제 2장 추진배경 및 계획

1. 추진배경

□ 추진경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이행계획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함.(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 5조, 제6조, 동 시행령 제4조)
 - 부처별로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확정
 - ※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여 2006년 수립하여 이행 중임.
-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관련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녹색성장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 전략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에 통합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09.6월 : 환경부 >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 선정 및 수립 지침 마련

< '09. 7~9월 : 관계부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관계부처 : 부처별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검토, 협의
- 관계부처 : 부처별로 이행계획 작성
 - 국가지속가능발전 및 환경부와 부처별 이행계획 협의 및 조정

< '09. 10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분야별 정책과제 및 부처별 이행계획을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 계획(안)'을 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

2. 추진계획

□ 전략계획 수립, 검토, 확정

- 전략계획 수립 대상과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내에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과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선정
 - 녹색성장 추진계획도 부처별 이행계획에 종합하여 고려

□ **이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별로 작성방향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통일된 작성방법을 마련
- 이행계획 수립과제별로 기본방향, 목표설정, 추진계획 등 기본적인 작성방향을 제시
 - ※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계획(필요시 10년 계획)
- 작성방법은 작성목차, 보고서 형태, 분량을 명시하여 통일된 형태로 작성토록 제시
 - ※ 목차는 배경 및 경위(필요성), 현황 및 전망, 비전(목표)과 계획, 중점 추진 과제, 추진체계 및 일정의 순으로 구성
-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여된 과제는 주무부처와 협력부처로 구분하여 작성주체를 명확히 규정

□ **부처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 검토 및 심의**

- 부처별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09.00.00까지 환경부에 제출
 - 부처공동 작성과제는 작성기간 중에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립·제출
 -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내용 중 부처간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협의를 실시한 후 동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부처별 이행계획(안)'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 검토 및 심의를 실시
 -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별로 부처별 이행계획(안) 검토 및 심의

제 3장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

이행계획 2009-2014 작성대상 과제 목록

1) 4대 주요 추진계획, 12대 핵심과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자립 및 저탄소 사회 구축
 -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저탄소 사회 구축

- 녹색기술·산업개발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전 산업의 녹색화
 - 생활의 녹색혁명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관리
 - 한반도 녹색국토 조성
 - 자연자원 기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및 건축물 조성

- 안전하고 행복한 통합사회 건설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2) 추진기반 및 이행/평가체계 구축

- 계획의 추진기반 강화
 -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 녹색경제 기반조성
 - 친환경적 제도 및 세제운영
 -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제 4장 이행계획 작성방법 및 형태

1. 작성 분량

- 대상과제별 보고서 작성분량은 최대 총 00쪽 범위(요약 3~5쪽, 본문 약 00쪽) 내에서 작성
- 작성분량이 많은 과제는 40쪽 이내로 재정리하여 작성하고, 작성분량이 소규모인 과제는 작성체계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 대상과제별 이행계획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계획, 통계, 자료 등 부속서류는 반드시 첨부자료로 제출

2. 작성 체계 및 방법

- 대상과제별 보고서는 ① 추진배경 및 필요성, ② 현황과 전망, ③ 비전과 계획, ④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⑤ 추진체계의 순으로 작성
- 추진과제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해결과제를 제시
 - 기존 업무계획에 나온 내용을 빼끼거나 막연한 내용을 제시하는 사례 금지
 - 새로운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안
-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의 목표기간을 단기간인 5년('06~'10)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필요시 10년 계획수립)
-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의 경우 자원 조달 및 배분계획을 제시
-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
-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초안 단계에서 이행계획의 방향설정 및 계획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위와 사전 협의를 실시
- 부처별 대상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속가능위에 제출
 - 부처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등 공동작성 방안을 사전 조율하여 추진
 - 과제별 보고서 내용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최대한 부처간 사전조율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작성양식
 -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하는 녹색성장전략의 부처별 중앙추진전략의 양식을 활용 (부록 x참조)

제5장 행정사항

1. 이행계획 작성 관계부처 녹색성장책임관 명단

2. 이행계획 작성 관계부처 책임관 기능과 역할

- 이행계획 수립 부처별 추진상황 파악, 이행계획 협의·조정 등 제반 업무를 추진
- 부처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환경부와의 협조 수행
 -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독려
 - 정기적으로 이행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지속가능발전위에 통보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총괄업무 수행
 - 부처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부처간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

3. 주요 조치사항

-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별 보고서 작성계획 제출
 - 부처별로 소관 이행계획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계획을 제출
 - 부처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행계획 과제는 관계부처간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계획을 제출
- 부처별 이행계획 과제별 보고서 작성 초안단계에서 방향설정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발전위와 사전 협의
- 부처별 이행계획 과제별 보고서 제출
- 부처별 이행계획 과제별 보고서 검토 및 심의

참 고 문 헌

- 국민은행. 2009,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 건설교통부. 각년도. 「주택종합계획」
- 경찰청. 각년도. 「교통사고 통계」
- 과학기술부. 각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 관세청. 각년도 「징수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년도.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 국민은행. 각년도. 「주택금융수요조사실태조사」
- 국세청, 관세청. 각년도. 「징수보고서」
- 국토해양부. 각년도. 「국토해양통계연보」
- 국토해양부. 각년도. 「도시계획현황」
- 국토해양부. 각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국토해양부. 각년도. 「해양수산통계연보」
- 국토해양부. 각년도. 「해양환경조사연보」
- 노동부. 각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
- 농림수산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식품수급표」
- 농림수산부. 각년도. 「농림업주요통계」
- 농림수산부. 각년도. 「농림통계연보」
- 농림수산부. 각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 대검찰청. 각년도. 「범죄분석」

동아일보. 2007.6.18 “EBI 추계 결과”
 보건복지부.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보건복지부. 각년도. 「사회복지 지출 추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9,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산림청. 각년도.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각년도. 「임업통계연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0. 「21세기 환경산업의 시장전망 및 동향(김태용)」
 세계환경·개발위원회. 1987. 「우리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소방방재청. 각년도. 「재해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각년도. 「1차 에너지 공급구조」
 에너지경제연구원. 각년도.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각년도. 「신재생에너지 통계」
 정보통신부. 각년도. 「통신사업자 보고자료」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질병관리백서」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각년도. 「생명표」
 통계청. 각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각년도. 「어업생산통계조사」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각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각년도. 「KOSIS 통계 DB」

프랑스 행정부. 각년도. 「프랑스 지속가능발전지표」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각년도. 「원자력 발전 백서」
한국은행, 통계청. 각년도. 「국제통계연감」
한국은행. 각년도. 「국민계정」
한국은행. 각년도. 「국민소득」
한국은행. 각년도. 「국제수지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정보화실태조사」
환경부. 각년도.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각년도. 「상수도통계」
환경부. 각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각년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환경부. 각년도. 「하수도통계」
환경부. 각년도. 「환경통계연감」
OECD. 각년도. 「지속가능발전지표」
UN. 각년도. 「UN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농림식품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ei.re.kr>)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

유럽연합집행위 홈페이지 (<http://ec.europa.eu>)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sa.or.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C.Brodhag, Sophie Tallière, 2006,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 Tools for policy coherence'

C. Brodhag, DIDD, UNDESA, 2007, 'Processus et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Biodiversity Synthesis, World Resource Institute'

UNCSD 'CSD Multi -Year Programme of Work'
http://www.un.org/esa/dsd/csd/csd_multiyearprogwork.shtml

부 록

<부록 1>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06-2010 과제목록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1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	36
1-2-가 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건교부)	40
1-2-나 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환경부)	44
1-3 수자원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8
1-4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51
1-5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55
1-6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59
1-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62
1-8 지속가능한 관광	68
1-9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72
1-10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을 위한 대책	77
1-11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방재대책	80
1-12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85
1-13 청정하고 활력 있는 연안·해양 환경 조성	89
1-14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달성	92
1-15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96
1-16 해양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99
1-17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102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2-1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및 여성 경제활동 증진	105
2-2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108
2-3 도시빈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확대	113
2-4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현	116
2-5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119
2-6 국내 난민보호를 위한 대안	122
2-7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124
2-8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	127
2-9 공공 보건 의료 확충	131

2-10 갈등관리체계 구축	134
----------------------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1-가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환경부)	137
3-1-나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산자부)	137
3-2-가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환경부)	140
3-2-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산자부)	140
3-3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대	143
3-4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148
3-5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153
3-6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육성	157
3-7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체계 확립	161
3-8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전환	165
3-9 농수산물관련 시장개방과 가격안정화 방안	167
3-10-가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확대(산자부)	170
3-10-나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확대(환경부)	173
3-11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77
3-12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181
3-13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지 등 유해 위험 정보전달체계 확립	186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4-1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189
4-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응대책 강화	192
4-3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195
4-4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198
4-5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202

<이행체계 및 평가체계 구축>

5-1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과 평가시스템구축	205
5-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207
5-3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210

<부록 2> 100대 국정과제 방향

전략 1. 섬기는 정부

- 과제 16. 재난관리체계 통합
- 과제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
- 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 과제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과제 20. 교통사고율과 인명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

전략 2. 녹색성장

-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겠습니다 (★)
-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3.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육성

-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전략 9. 전국민 평생복지기반 구축

-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제로 바꾸겠습니다 (◎)
-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제 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 과제 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

전략 10. 맞춤형 복지 실현

- 과제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과제 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 과제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전략 11. 서민생활 주거안정

-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과제 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 과제 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

- 과제 54.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략 12. 일자리 찾기와 근로자 보호

-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
- 과제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 확대

- 과제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과제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 과제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과제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과제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6. 연구개발

- 과제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 77.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 과제 78. 기초원천연구를 진흥시키겠습니다
- 과제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 과제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

- 과제 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 과제 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과제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

<부록 3> 5대 국정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연관성

1) 활기찬 시장경제

-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2) 능동적 복지

-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 · 여가 · 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3) 인재대국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 인재 유치

<부록 4>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주요전략 및 핵심과제 비교

녹색성장 전략		지속가능 전략	
전략	추진 방향	전략	추진 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자립 및 저탄소 사회 구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저탄소 사회 구축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기술·산업개발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전 산업의 녹색화 생활의 녹색혁명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지속가능한 녹색국토관리	한반도 녹색국토 조성 자연자원 기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및 건축물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통합 사회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전략의 추진 기반 강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녹색경제 기반 조성 친환경적 제도 및 세제운영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녹색성장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전략	정책방향	전략	정책방향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사회 구축
	탈석유, 에너지 절약 강화		정전에너지 보급 확대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기후감시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에너지 절약		기후친화적인 해양이용 및 관리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절약 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탈석유, 에너지 절약 강화		정전에너지 보급 확대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가 보이는 사회
		에너지 절약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에너지 절약	탄소를 순환/흡수하는 사회
에너지 절약		저탄소 사회 구축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절약 강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탈석유, 에너지 절약 강화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 구축
		에너지 절약	탄소를 순환/흡수하는 사회
		에너지 절약	저탄소 사회 구축
에너지 절약		저탄소 사회 구축	

주: 두 전략 중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음영 처리하였음

녹색성장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전략	정책방향	전략	정책방향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강화	녹색기술, 산업개발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실천과제
			④-1.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④-2.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④-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④-4. 녹색기술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④-5.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규제협력 활성화
			④-6.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육성
			⑤-1. 자원순환형 경제·산업 구조 구축
			⑤-2. 산업별 녹색진화 및 혁신 확산
			⑤-3.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 산업개발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실천과제
			⑤-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육성
			⑥-1.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⑥-2.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
			⑦-1.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⑦-2.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⑦-3. 탄소시장 육성
			⑦-4. 친환경 세계 운영
			⑦-5. 녹색상품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⑦-6. 저탄소 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경제 기반 조성	친환경적 제도 및 세계 운영	실천과제
			⑦-7. 에너지 복지
			⑦-8.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⑦-9. 녹색인재 양성 확대
			저탄소 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친환경 세계 운영
			녹색상품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에너지 복지
			녹색기술/산업 투자 지원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탄소시장 육성			
녹색일자리 창출 강화			
녹색인재 양성 확대			

녹색성장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전략	정책방향	전략	정책방향	
삶의 질 개선 과 국가위상 강 화	실천과제	녹색기술/산 업개발을 통 한 녹색경제 실현	실천과제 녹색생활 실천 및 인식제고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마을운동 전개 생태관광 활성화 녹색시민 양성	
	녹색국토, 교 통의 조성	⑧-1. 녹색 국토·도시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교육복지 확대
		⑧-2. 생태 공간의 확충		세계적 수준의 인재 육성
		⑧-3. 녹색 건축물 확대		과학기술 발전
		⑧-4. 녹색 교통체계 구축		
		⑧-5.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 민 양성기반 구축	⑨-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 민 양성기반 구축	교육과 인적자원 육 성	녹색 선진국의 단계적 실현
		⑨-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녹색성장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⑨-3. 녹색소비 활성화		Green Hub Korea 구축
		⑨-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⑨-5. 생태관광 활성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세계적인 녹 색성장 모범 국가 구현	⑩-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자연자원 기반보전 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녹색국토관리체계 구축	
	⑩-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공간의 확충	
	⑩-3. 개도국의 녹색 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⑩-4.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녹색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녹색 건축물 확대	

복색성장 국가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전략	정책방향	실천과제	
안전하고 복합사 회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통합성 제고	시민 주기복지 지원 강화	안전시스템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및 안전시스템 마련 평생 직업능력개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생활 기반 조 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망 체 계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복지체계 구축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건강과 환경 연계사업 추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회적 갈등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비 갈등관리의 전문화 및 인프라 구축 공공개발 관련분야 갈등예방 법률 정비 및 확대	

<부록 5>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주요 연구

No	구분	연도	기관
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	2005	지속위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 가능성 연구	2005	지속위
3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	2005	KEI
4	동북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비교연구	2004	KEI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2003	KEI
6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통계 발전 방향	2003	KEI
7	지속가능발전지표(SDIs)에 관한 아·태지역 논의동향과 발전방향	2003	KEI
8	환경지속성지수(ESI)의 국내외 논의동향과 발전방향	2002	KEI
9	환경지속성지수(ESI)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2005	환경부
10	국토환경용량 산정모델 개발 및 국토환경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2004	환경부
1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2003	환경부
12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01	환경부
13	국가환경성평가지표 개발 적용 연구 : 국가지속가능개발지표 개발	2000	환경부
14	국토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충격지표 개발 연구	2004	국토연구원
15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2003	국토연구원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OECD의 환경지표 개발 동향	2004	국민경제교육 연구소
17	ESSD 달성을 위한 거시환경경제 지표개발 및 정책수단개선 연구	1993	환경기술개발원
18	환경지표의 종합체계화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I),(II)	1990-1992	과학기술처
19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태계지표 개발 (전문가초청세미나)	1999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20	한국의 환경종합지수	1999	자유기업센터
21	우리나라 환경지표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통계연수원
22	우리나라 환경지수 작성에 관한 연구	1997	통계연수원
23	유럽지역의 환경지표 현황 및 활용	1992	국립환경연구원

<부록 6> 녹색성장위원회 중앙추진전략 작성 양식

폐기물 에너지화²⁾

※ 주관부처/회계 : 환경부/환특회계

※ 담당자: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최기형(☎: 02-2110-7727 / 010-9465-768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13년(5년간)
- 총사업비 : 500억원(국비 250, 지방비 200, 민간 50억원)
- 사업규모 : 34,987m²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사업시행주체 : 환경관리공단

2. 세부 사업내용

○

·

3. '09~'13년 재정소요 전망

(억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
< 계 >	500	100	100	100	100	100
○ 공 공	450	90	90	90	90	90
▪ 국 비	250	50	50	50	50	50
▪ 지방비	200	40	40	40	40	40
○ 민 간	50	10	10	10	10	10

2) 사업명 : Excel file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신규사업 추가시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사업별 설명자료 분량 : 총 2page 이내

※ 세부내역(국비)

(억원)

연 도	금 액	산 출 근 거
'09		
'10		
'11		
'12		
'13		